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6. 1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목 차

I. 감사개요 .....	1
II. 주요 감사실시 내용 .....	10
1. 교육부 소관 .....	10
가. 교육부 및 소속기관 .....	10
<일반 사항> .....	10
나. 시·도교육청 .....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	106
【부산광역시교육청】 .....	111
【인천광역시교육청】 .....	115
【광주광역시교육청】 .....	119
【대전광역시교육청】 .....	122
【울산광역시교육청】 .....	125
【대구광역시교육청】 .....	128
【경기도교육청】 .....	131
【강원도교육청】 .....	140
【충청북도교육청】 .....	144
【전라북도교육청】 .....	148
【전라남도교육청】 .....	154
【경상북도 교육청】 .....	156
【경상남도 교육청】 .....	16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1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168

## 다.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 174

【공통사항】 .....	174
【경북대학교】 .....	176
【강원대학교】 .....	177
【부산대학교】 .....	178
【전남대학교】 .....	180
【전북대학교】 .....	181
【충남대학교】 .....	182
【충북대학교】 .....	183
【경상대학교】 .....	184
【제주대학교】 .....	18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18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18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189

## 라.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 191

【공통사항】 .....	191
【서울대학교병원】 .....	194
【부산대학교병원】 .....	197
【경북대학교병원】 .....	198
【경상대학교병원】 .....	199
【전북대학교병원】 .....	200
【전남대학교병원】 .....	201
【제주대학교병원】 .....	202
【충남대학교병원】 .....	202
【충북대학교병원】 .....	203
【강원대학교병원】 .....	20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204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20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204

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205
【한국사학진흥재단】	2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5
【동북아역사재단】	20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9
【한국고전번역원】	2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11
【한국연구재단】	213
【한국장학재단】	215
【한국학중앙연구원】	2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2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28
【한국교직원공제회】	228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31
가. 문화체육관광부	231
나. 소속기관	259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64
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26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65
【세종학당재단】	26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6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6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68
【한국문학번역원】	26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6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6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69

【국악방송】 .....	270
【예술의전당】 .....	270
【한국박물관문화재단】 .....	271
【한국콘텐츠진흥원】 .....	271
【영화진흥위원회】 .....	273
【영상물등급위원회】 .....	274
【게임물관리위원회】 .....	274
【한국저작권위원회】 .....	276
【아시아문화원】 .....	27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76
【한국언론진흥재단】 .....	277
【국제방송교류재단】 .....	279
【언론중재위원회】 .....	279
【국민체육진흥공단】 .....	280
【대한체육회】 .....	281
【대한장애인체육회】 .....	282
【태권도진흥재단】 .....	282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28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283
【한국관광공사】 .....	28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287
 3. 문화재청 소관 .....	 289
가. 문화재청 .....	289
나. 소속기관 .....	298
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300
【한국문화재단】 .....	300
【국외소재문화재단】 .....	300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301

1. 교육부 소관 ..... 301

가. 교육부 및 소속기관 ..... 301

나. 시·도교육청 ..... 352

【서울특별시교육청】 ..... 352

【부산광역시교육청】 ..... 354

【인천광역시교육청】 ..... 356

【광주광역시교육청】 ..... 359

【대전광역시교육청】 ..... 361

【울산광역시교육청】 ..... 363

【대구광역시교육청】 ..... 364

【경기도교육청】 ..... 366

【강원도교육청】 ..... 372

【충청북도교육청】 ..... 374

【전라북도교육청】 ..... 377

【전라남도교육청】 ..... 380

【경상북도교육청】 ..... 382

【경상남도교육청】 ..... 38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38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90

다.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 394

【공통사항】 ..... 394

【경북대학교】 ..... 396

【강원대학교】 ..... 396

【부산대학교】 ..... 397

【전남대학교】 ..... 397

【전북대학교】 ..... 398

【충남대학교】 ..... 399

【충북대학교】 .....	399
【경상대학교】 .....	400
【제주대학교】 .....	40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40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40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403

#### 라.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 404

【공통사항】 .....	404
【서울대학교병원】 .....	405
【부산대학교병원】 .....	406
【경북대학교병원】 .....	406
【경상대학교병원】 .....	407
【전북대학교병원】 .....	407
【전남대학교병원】 .....	407
【제주대학교병원】 .....	407
【충남대학교병원】 .....	407
【충북대학교병원】 .....	408
【강원대학교병원】 .....	40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408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408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408

#### 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409

【한국사학진흥재단】 .....	40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409
【동북아역사재단】 .....	4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412
【한국고전번역원】 .....	4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14



【한국연구재단】 .....	415
【한국장학재단】 .....	417
【한국학중앙연구원】 .....	42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42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424
【한국교직원공제회】 .....	425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427
가. 문화체육관광부 .....	427
나. 소속기관 .....	441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444
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44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44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44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44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44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446
【국악방송】 .....	446
【예술의전당】 .....	447
【세종학당재단】 .....	44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447
【한국콘텐츠진흥원】 .....	448
【영화진흥위원회】 .....	449
【영상물등급위원회】 .....	450
【게임물관리위원회】 .....	450
【한국저작권위원회】 .....	452
【아시아문화원】 .....	45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452
【한국언론진흥재단】 .....	453
【국제방송교류재단】 .....	453
【언론중재위원회】 .....	453

【국민체육진흥공단】 .....	453
【대한체육회】 .....	454
【대한장애인체육회】 .....	454
【태권도진흥재단】 .....	455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45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455
【한국관광공사】 .....	45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457
 3. 문화재청 소관 .....	458
가. 문화재청 .....	458
나. 소속기관 .....	467
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469
【한국문화재단】 .....	469
【국외소재문화재단】 .....	469
 IV. 국정감사 증인 · 참고인 현황 .....	470
1. 기관 증인 .....	470
가. 기관증인 총괄 .....	470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	474
다. 기관증인 추가 채택 현황 .....	474
2. 일반 증인 · 참고인 .....	474
 V. 감사원 감사요구 등 특이사항 .....	475

# I. 감사개요

##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기능, 재정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 2. 감사기간

2016년 9월 26일(월) ~ 10월 15일(토) : 20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교육부 소관(60개)
  - 위원회 선정기관(55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1) 교육부 (2) 국사편찬위원회 (3) 국립특수교육원 (4) 중앙교육연수원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6) 국립국제교육원 (7)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8) 부산대학교 (9) 경북대학교 (10) 전남대학교 (11) 충남대학교 (12) 강원대학교 (13) 충북대학교 (14) 전북대학교 (15) 경상대학교 (16) 제주대학교 (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7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2호 대상기관	(1) 서울특별시교육청 (2) 부산광역시교육청 (3) 인천광역시교육청 (4) 광주광역시교육청 (5) 대전광역시교육청 (6) 울산광역시교육청 (7) 대구광역시교육청 (8) 경기도교육청	(9) 강원도교육청 (10) 충청북도교육청 (11) 전라북도교육청 (12) 전라남도교육청 (13) 경상북도교육청 (14) 경상남도교육청 (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6개
제3호 대상기관	(1) 강원대병원 (2) 경북대병원 (3) 경상대병원 (4) 부산대병원 (5) 서울대병원 (6) 전남대병원 (7) 전북대병원 (8) 제주대병원 (9) 충남대병원 (10) 충북대병원 (11)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2) 부산대치과병원 (13) 서울대치과병원	(14) 한국사학진흥재단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 한국연구재단 (18) 한국장학재단 (19) 한국고전번역원 (20) 동북아역사재단 (21) 한국학중앙연구원 (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2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5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4호 대상기관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 한국교직원공제회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5개

##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56개)

### ○ 위원회 선정기관(54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1호 대상기관	<div> (1)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재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한국예술종합학교 (5) 국립중앙박물관 (6) 국립중앙도서관 (7) 국립국어원 (8) 해외문화홍보원 (9) 국립국악원 (10) 국립민속박물관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 국립한글박물관 </div> <div> (13) 국립현대미술관 (14) 예술원사무국 (15) 국립중앙극장 (16) 한국정책방송원 (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9) 국립문화재연구소 (20) 국립고궁박물관 (2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2) 국립무형유산원 </div>	22개
제2호 대상기관	해당사항 없음	
제3호 대상기관	<div>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한국문화번역원 (5)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 아시아문화원 (7) 국립박물관문화재단 (8) 한국문화진흥(주) (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0) 한국저작권위원회 (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2) 한국콘텐츠진흥원 (13) 게임물관리위원회 (14) 영화진흥위원회 (15) 영상물등급위원회 (16) 한국언론진흥재단 </div> <div> (17) 국제방송교류재단 (18) 세종학당재단 (19) 예술의전당 (20) (재)정동극장 (21) (재)국악방송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3) 국민체육진흥공단 (24) 대한체육회 (25) 대한장애인체육회 (26) 태권도진흥재단 (27) 한국체육산업개발(주) (2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9) 국도박문제관리센터 (30) 한국관광공사 (31) 한국문화재단 (32) 국외소재문화재단 </div>	32개

○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2개)

구 분	대 상 기 관		비 고
제4호 대상기관	(1) 언론중재위원회	(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개

※ 업무보고 : 연합뉴스 \*비공개

## 4. 감사반의 편성

### 가. 중앙감사반

감사위원	<p>◇ 위원장 : 유성엽(국민의당)</p> <p>◇ 위원 : 염동열(새누리당)</p> <p>강길부( " )</p> <p>곽상도( " )</p> <p>김석기( " )</p> <p>김세연( " )</p> <p>나경원( " )</p> <p>이은재( " )</p> <p>이장우( " )</p> <p>이정현( " )</p> <p>이종배( " )</p> <p>전희경( " )</p> <p>조훈현( " )</p> <p>한선교( " )</p>	<p>◇ 위원 : 도종환(더불어민주당)</p> <p>김민기( " )</p> <p>김병욱( " )</p> <p>노웅래( " )</p> <p>박경미( " )</p> <p>손혜원( " )</p> <p>신동근( " )</p> <p>안민석( " )</p> <p>오영훈( " )</p> <p>유은혜( " )</p> <p>전재수( " )</p> <p>조승래( " )</p> <p>◇ 위원 : 송기석(국민의당)</p> <p>안철수( " )</p> <p>이동섭( " )</p> <p>(29인)</p>
사무보조자	<p>◇ 위원회 직원(21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석전문위원 정재룡</li> <li>- 전문위원 박용수 김건오</li> <li>- 입법심의관(3급) 최상진</li> <li>- 입법조사관(3급) 정홍진</li> <li>- 입법조사관(4급) 정연수 전완희</li> <li>정진철 김남영</li> <li>- 입법조사관(5급) 노성준 이정윤,</li> <li>남경훈 기준하,</li> <li>문정호 구희재</li> <li>- 입법조사관보 조종오 김태은</li> <li>문경애</li> <li>- 주무관 최영숙 김은희</li> <li>박은영</li> </ul>	<p>◇ 의원보좌진(29인)</p> <p>◇ 정책연구위원(6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누리당(3인)</li> <li>- 더불어민주당(2인)</li> <li>- 국민의당(1인)</li> </ul> <p>◇ 속기주무관(6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윤희, 신재선, 유희정</li> <li>김밀알, 김민아, 최초룡</li> </ul>
총 91인		

## 5. 감사 일정 및 장소

□ 총 국감기관 수: 116개 기관 (※ 업무보고 : 연합뉴스)

【실제 감사: 총 11일 ← (교육) 6일 / (문화) 5일】

※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 1일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9.26(월)	10:00	<u>교육부(소속기관 포함)(○)</u>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7개 기관)	세종특별 자치시	기차(서울→ 오송) 버스(오송→ 서울)	
9.27(화)	10:00	<u>문화체육관광부(소속기관 포함)(○)</u>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예술원,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5개 기관)	국회		
9.28(수)	10:00	<u>교육부(소속기관 포함)(○)</u>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7개 기관)	국회		
9.29(목)	10:00	<u>문화재청(소속기관 포함),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u>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국외소재문화재단(8개 기관)	국회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9.30(금)	10:00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u>한국사학진흥재단</u>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12개 기관)	국회		
10. 4(화)	10:00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2차관 소관) <u>한국관광공사</u>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9개 기관)	국회		
10. 5(수)	09:00	업무보고: 연합뉴스 *비공개	연합뉴스 사옥	버스	교문위 전체 회의
	14:00	평창 현장시찰	현지	버스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 6(목)	10:00	<u>서울특별시교육청</u>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8개 기관)	국회		
10. 7(금)	10:00	<u>경기도교육청</u> , 강원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8개 기관)			
10.10(월)	10:00	<u>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1차관 소관)</u> <u>한국콘텐츠진흥원</u>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세종학당재단, 예술의전당, (재) 정동극장, (재)국악방송,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언론중재위원회(24개 기관)	국회		

일 자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교통수단	비고
10.11(화)	10:00	국립대학법인, 국립대 및 대학병원 <u>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u>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대, 제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25개 기관)	국회		
10.12(수)	감 사 준 비				
10.13(목)	10:00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10.14(금)	10:00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회	[종합감사]	

\*진한글씨로 밑줄친 기관은 대표 증인선서 기관임.

## Ⅱ. 주요 감사실시 내용

### 1. 교육부 소관

#### 가. 교육부 및 소속기관

##### <일반 사항>

- 학령인구 절벽,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학연령 하향, 학제 단축, 대학졸업정원제 등 학제개편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교육부 산하 9개 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중앙교원지위자격위원회는 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회의를 개최한 자격정책심의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는 모두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지적
-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리계획 대상 8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만 정리되고 6개는 여전히 존속 중, 존속 사유가 ‘위원회 운영 활성화’지만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위원장 선출 회의 이후 회의가 없었고 다른 두 위원회도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전무하였다고 지적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위원회의 경우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작년 3차례 회의했지만 참석률이 매우 저조, 2기 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 10번의 회의 중 7번이 식사를 겸한 상견례 성격의 회의였음을 지적
- 교육부 소속의 여러 자문위원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것
- 정부광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광고 등에 있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방송국과 협찬고지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였고 이는 편법으로서

훈령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지

- 교육부가 협찬방식이나 수의계약으로 콘텐츠를 입맛에 맞게 제작하고 송출만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형태를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는 규정을 위반한 탈법적 행위가 아닌지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이 전년보다 50% 감소하여 건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는지
- 대학교의 경우 안전등급이 미지정 된 건물이 49교, 453동이며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 중 상당수는 정밀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정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 아닌지
-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연3회 안전점검, 노후시설 정밀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시까지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는지
- 부패 혹은 성 관련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립대 전보조치를 금지할 것
- 이화여대 최순실 자녀 건과 관련된 보도가 조간에 났는데 부총리가 저녁에 보고 받았다는 것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 지적
- 사회부총리로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와 관련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
- 정부 교육투자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 교육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 지적
- 2014~2016년 11개 국정과제와 49개 세부과제 및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자유학기제에 투입되고 있고, 다른 국정과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교육의 보편성, 즉 기회균등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또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교과별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가 낮다고 지적하고 대학도 서울 소재 대학생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 1인당 지원액이 2.8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

-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 교육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대학사회와 지방교육청, 교원에 대하여 교육부의 통제가 과도하다고 지적
- 교육 중립성과 관련하여 현재 장기발전계획이 실종된 상황이며 정권에 따라 교육개혁이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고,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
- 정부 재정투자 확대 그리고 교육격차해소법을 통한 기회균등, 보편성 확보, 초·중·고·대학교에서 창의적 인재를 교육시키는 방안, 평생 교육 대폭 강화가 필요
- 교육부에서 주최한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와 방과후학교 박람회의 세부 행사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스에서 기념품으로 배부한 지구본에 일본해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
- 박람회 세부 행사에서 배부한 일본해가 표기된 지구본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할 것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동해 표기 문제 등에 있어서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이 필요
-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일 위안부 합의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
- 34년 동안 근무한 교사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서 옥조근정훈장 수여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바람직 한지와 이러한 인원이 전국에 152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구제할 생각은 없는지
- 시국선언 등의 참여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2만 1758명이나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퇴직 시 훈·포상을 안 할 것인지
- 시국선언 및 시위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 줄 것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퇴직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정감사가 시작하면 장소 주변에 비리사학의 문제, 학교 급식 문제, 비정규직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일상적 모습인데 너무 법률적 잣대만을 들이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교육부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인사교류 형식으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 서울과 경기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는데 파견기간이 너무 짧은 것을 지적
- 교육 자치를 위해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을 보내는 것과 대학교에 사무국장을 보내는 것은 중지해야하지 않는지
- 시·도교육청 퇴직자들이 시·도의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학교법인에 취직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는지
- 교육감은 진보, 보수로 나뉘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해지고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의 선거비용지출액과 현재 교육감들의 뇌물수수혐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선출직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결국 학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입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감 임명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 교육감 직선제 시행에 따른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장치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 이념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지방은 중앙정부의 정

책에 반발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시정하고 교육정책을 이끌 예정인지

- 시도교육감에 위임된 초중등고등학교 학사업무, 전혀 교육부의 관리권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정책이 일부 다른 상황을 방지할 것인지
-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절실하고, 편향된 교육을 수수방관하고 직접 자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도서로 발간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책에 보면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를 평화시위로 미화, 4대강 사업을 환경파괴 사업으로, 속리산 마을 공동체를 꿈의 마을로 서술하는 등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인정도서를 집필한 집필진의 68%가 전 교조 출신임.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교육자치가 국가의 어떠한 통제도 없이 방임 상태의 일탈을 거듭해서는 우리 아이들 공부할수록 비뚤어지고 공부할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창업교육 활성화 관련
  -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 진로전담교사 등에게 창업 관련 연수 및 정보제공을 통해 취업 뿐 아니라 창업 진로 상담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
  - 창업전공, 또는 현장경험을 보유한 교육자가 적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포함한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교재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
  -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 정보 습득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마련이 필요



-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하고, 생생한 체험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생 창업교육(컨설팅, 연수, 네트워킹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 등 창업 문화 조성이 필수적일 것
-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는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교육이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고 실패할 경우 이를 다음번 창업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기가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창업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창업의 실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처 간에 협력이 부족하여 관련 정보가 분산되어 있거나 예산의 지원도 복수의 부처에서 담당하여, 관계부처간에 창업지원을 위한 협력과 조정이 필요
-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창업교육에 대한 표준적 정의와 단계별 내용, 창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학교에서 내실있는 창업교육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인성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도쿄에 있는 제2동경한국학교 신설이 어려워져 현지 교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제2별관 신설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
- 동경한국학교의 경우, 3년의 임기로 파견되는 교장과 이사회 등과의 마찰로 인해 구두 혹은 서면민원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지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할 부분에 대해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 과정에서 업무능력이나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교육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므로 업무능력과 자질이 적정하지 않은 이기동 원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이기동 원장의 신변에 관하여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불구하고 최근 신규 교수 5명을 임용하였는데 교육부 허가 없이 뽑은 것에 대하여 문제여부를 확인할 것
- 고전번역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정원 및 번역작업수행 예산이 부족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의 번역작업 완료 예상기간이 30~40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난해 DDoS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교육부의 신고와 유출여부 확인이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KERIS에서 원격교육연수원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미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재, 인가취소 등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평가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한 원격연수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허술한 원격연수를 대폭 줄이고 집합연수를 확대해 원격연수와 일정비율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학교별 자율연수를 활성화하고 거점학교에 인근 학교 교사들이 모여 교과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셔서 최소한 교육부 지침(1인당 연수비 25만원)만큼은 단위학교에서 연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방법을 마련할 필요

-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임용 교원 적체 현상과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학령인구-교원 괴리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정원감축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근본적인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최근 한국교육원장 선발에서 민간 공모는 8건에 불과했고, 교육공무원이 독식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한국교육원의 감사 결과 각종 징계사유가 나오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재 한국교육원의 경우 교육부 자체 감사는 매년 4~5곳에 불과하고, 원장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해 볼 때 임기 중 단 한번의 교육부 자체 감사도 받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e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미달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 장애인 고용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선결 과제로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기준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수립 필요
- 교육용 전기요금 관련
  - 교육용 전기요금은 방학기간에는 사용량이 적고, 학교축제(7월, 12월) 또는 졸업식(2월)이 있는 특정일에만 전력사용량이 매우 높음으로 학교 특정일의 피크전력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기본요금의 비중을 낮추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자부와 한전은 수용곤란의 입장으로 앞으로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교육용 전기요금은 체계 개선을 위한 교육부와 산자부, 한전의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 변경된 학교 전기요금의 할인 제도가 초중등학교에 실제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전력사용량을 분석하여 할인제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 학교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요금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고 일선 학교 요금이 공업용·상업용 등 다른 요금에 비해 비싸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기관장의 거취 관련
  - 한중연의 발전을 위해 사퇴할 생각이 있는지
  - 본인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고 지금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민주당위원들이 요청한 사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임시키겠다는 뜻인지, 필요한 경우 지켜보고 다시 조치하겠다는 뜻인지
  - 한중연 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력서 한 장 없이 기관의 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역량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나온 것임. 그런 문제는 기초적인 태도나 자세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음
  - 이기동원장 선임회의시 이사장이 기관운영 경험이 없는 점 등 문제를 지적한바 있으며, 국회 대응 문제 발생을 우려하였는데, 국감 당일 그대로 상황이 전개됨. 그럼에도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은 이사장 본인이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또 어떤 외압이 있어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며,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사장도 책임 있는 결정 필요
  - 역사관, 감정조절능력, 심신상태 미약과 행정능력 없음이 밝혀졌으며, 국감시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임을 긍정도 부인도 못한다고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심의위원이라 밝힘. 도저히 자질과 능력이 안되는 이런 사람조차 위원들의 질의내용과 비판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이고 엄중한 판단을 요구함
  - 국감 당일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변명으로 일관함.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혀 반성의 기

미가 없으며, 한번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함

- 한중연원장에게 지난번 국감장에서 보여준 행태와 인터뷰 내용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육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 이기동원장의 국감장에서의 태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이 들 정도였고, 이기동 원장을 추천했던 이승철 이사가 사임을 한 무책임한 행태를 고려해서, 교육부총리께서는 직접 당시 상황의 녹화물을 보고 차관님과 협의하여 수일내(국감결과보고서 채택 전)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기 바람

## <유아 및 특수교육 관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현황과 장애학생 지원 역할 충실도(행정업무 지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지적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의원실에 보고할 것
- 부족한 특수교사의 충원을 위해 특수교사의 수급은 일반교사 수급 정책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 관리를 해야 하고, 특수교사 정원 및 교원 수급 관리, 배치 기준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특수교육은 국가의 교육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65.9%에 그쳐,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과밀학급해소, 특수교사 정원 확대 등 특수교육 정책을 우선 순위로 관심을 가져줄 것
-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사업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장애학생 인권, 장애인 직업교육, 평생교육 사업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원장을 개방형지위제로 전환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 인력이 전국에 8000명 정도 있는데 시·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직업의 명칭이나 근무조건·여건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것

- 공진초 이적지 주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며, 특수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하므로, 미설치 지역에 우선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중투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주민 편견의 벽을 깨기 위한 교육당국과 지역주민과의 소통노력이 필요
- 특수교육대상자 건강검진 및 증진의 조기 개입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의 정신사회적 건강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통합교육 연수 시 장애학생 옹호, 장애학생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 운영, 상호 관계형성 등 다양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교사 1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통합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실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비장애학생과 그 학부모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학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
-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서울, 부산 등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이 미흡한데, 교육청별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대상 선정 배치관련 지침, 업무현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조치 할 것
-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도장애학생 교육권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교원 수급 정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유아특수교육과의 교원임용률 평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 임용된 자도 교원 임용률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올해('16년)부터 공립유치원 담임수당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인상하지 않은 상황으로(11만원 유지) 법적용을 공평정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사립 구분 없이 공평하게 지원할 필요
-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규제제도 범위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상 현실을 반영하여 완충적 제도운영이 필요하며, 규제와 함께 교육 등 지원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
-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단설 공, 사립 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를 교육부가 해야 할 필요
- 영유아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편법 영어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유보통합이 잘되고 있는지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장애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
- 누리과정 관련
  - 기획재정부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출한 안이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안과 같은 안인지
  -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상정도 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여 그 예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 3~5세까지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누리과정 시작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했지만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왜 시·도교육청의 관리가 되었는지
  - 누리과정이 도입·시행되면서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교육공무원법 등과 달리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시·도교육청 소

관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와 어떤 합의에 의해 그렇게 되었는지

-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법률이 어디 있는지
-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상위법 위반임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패널티와 보상을 확실히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감들은 행정관청이 다툼이 있으면 행정 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의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예산 편성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였음에도 예산편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월·불용액이 많은 경기, 강원, 전북도 충분히 이월액과 불용액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을 미 편성 하면서 교육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 현재 3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렇게 완강하게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시, 패널티가 있는지. 추경 미편성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액을 삭감한다던데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피해를 생각해볼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미 편성한 교육청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청에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위헌소송이나 권한쟁의 심판 같은



공식적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해 왔는데, 2012년 개정된 내용은 대통령 당선 전에 개정되었고, 어린이집의 포함여부는, 누리과정은 보육이 아닌 교육이니, 어린이집이라해도 교육에 포함됨,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학교로 해석해야만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보다 건설적인 해결방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
-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난 5월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지
- 감사원 감사 이후, 1.9조원의 추경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각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욱 개선되었을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누리과정 예산 관련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의미에서 한선교 의원이 발의하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견해
- 누리과정과 무상교육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교육교부금제 신설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하는데 교육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 일부를 지방교육채를 통해, 즉 기존지출 일부를 빚을 내어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교육청들을 탓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각 시도 교육청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2016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소요되던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시설비 등 2조 6천억원을 누락하고 지방교육채로 발행한 것이 아닌지
-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교수학습활동비지원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및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각종 사업비가 줄

고, 심지어 학교운영비까지 삭감해야 하는 등 기존 사업이 축소된 경우도 있지 않은지

- 2017년도 예산안이 교육재정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는 누리과정 강제편성만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 견해
- 정부는 교부금이 4조 7천억 가량 증가하기에 누리과정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6년 지방채 발행액 및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질적 교부금은 올해에 비해 감소한 것이고,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며,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 증가하는 지방교육채의 문제와 지방교육채 부담의 시도교육청 전가 문제를 지적
- 지난 8월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합의 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알고 있는지
-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가운데, 교육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지

## <초·중등교육 관련>

### ○ 사교육 관련

- 신고 의무를 어기거나 강사를 고용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가 문제이고, 음성적인 개인과외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잊지 말고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 사교육비는 줄었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무엇인지
- 사교육비 통계조사의 개념과 범위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서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교육부의 해당

담당자라도 이를 정책 자료로 활용할 필요

- 사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학령인구에 비해 학교·교원은 늘어나고,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 환경도 나아졌는데 이처럼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그 만큼 우리 공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 2015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17조 8천억원이 아닌 30조 이상으로, 교육부의 사교육비 규모 파악 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가 2013년 이래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24만 4천원으로 최고점이었는데 1인당 통계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을 평균에 포함시킨 것은 수치를 적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 사교육비 통계조사에서 입시컨설팅 비용을 제외하는 등, 데이터 마사지(data massage)가 있는 것은 아닌지
- 2011년 이래로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당연한 상황이며, 2015년 소득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의 평균 사교육비 차이는 무려 6배가 넘고 전남과 서울의 경우, 지역 사교육비가 2배 이상 차이가 존재함. 부모의 소득수준, 지역 간 사교육 격차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인데 단지 평균 사교육비 경감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지
- 박근혜정부 들어 1인당 사교육비가 3년 연속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매년 약 9조원 규모의 음성적이 사교육비 시장이 있는데 이 정도면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실패한 것이 아닌지
-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은 사교육 절감인데 오히려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법안제정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해 전년대비 2.1%p 낮아지는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0.2%p 높아졌음. 통계에 잡히지 않는 1인 교습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한 대

통령의 대선 공약에 오히려 역행되는 것 아닌지

- 선행학습 금지 정책의 성과가 무엇인지

- 영재학교입학자의 출신지역·출신학교 쏠림현상이 있고, 영재교육대상자가 지나치게 수학·과학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체육을 포함한 능력·잠재력 중심의 영재 교육 체제 구축이 필요
- 학생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가능한지, 이에 대한 교수학습법이 현재 있는지, 없다면 대책은
-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예산 확충,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경제·사회적 취약계층과 기초학력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수학여행은 아이들이 추억을 만들고 함께하는 교육적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일부학교의 경우, 1인당 400만원이 넘는 고액 경비를 학부모와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과도한 수학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통제를 해야 할 것
- 학교별로 수학여행비 격차가 커지게 되면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책은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교육활동” 차원에서 수학여행의 패러다임이 소규모 테마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테마형 수학여행 콘텐츠를 갖춘 지역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일 것
-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최근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바, 교육부 차원에서 녹색어머니회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지
- 해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업시설 통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신변종업소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바 불법적인 신변종업소의 영업 단속

을 위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거리 측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령이 없어 문제이므로 정화구역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할 것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결석 학생 가정 방문 시 방문 거부 가정에 대해서도 점점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등이 필요
- 초등학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 초등학교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초등학교 단위에서의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니 종합대책 마련할 것
- 초등학생 음주 및 흡연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난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원 수업 도중 화장실에서 가방끈에 목을 맨 사건이 있었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실제로 자살로 사망한 학생에 비해 자살을 시도한 학생은 18배나 되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전문기관 2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30%의 학생들이 존재함. 학생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비율이 지금처럼 높으면 가해자 또는 피해자 학부모와 직간접으로 얽혀 공정한 관점을 잃을 우려가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교사, 학부모, 법조인, 경찰 등 동등한 비율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
-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은 시·도교육청에서 피해자 심의는 시·도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재심 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공식 통계자료를 함께 공개할 것

- 전국의 성폭력 신고접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충분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
-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이후 교육부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 학교전담경찰관이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치할 것
-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고, 여경 비율이 32%에 불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찰청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15년 기준 학업중단 학생 47,000명 중 학교 부적응으로 2만 여명 이상의 학생이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 일반학생보다 높은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대책
-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저가 낙찰로 인한 질 저하 문제, 강사료 감소 문제 등에 대하여 개선할 것
-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공약이 있었는데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
- 대통령 후보 당시 제시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화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삭제되었고 오히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비 수입이 34%나 증가하였다는 것을 지적
- 초등돌봄교실 관련
  - 초등돌봄교실은 정부의 주요한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운영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예산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전담사의 여건 하락 및 돌봄교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에 따른 예산확보 및 돌봄전담

## 사 고용안정 대책

-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여부를 기준으로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변경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의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및 근무시간 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은
- 돌봄전담인력에 대한 탈법적인 근로계약과 무료노동 등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 돌봄전담사가 무료 봉사노동을 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고 각종 행정업무 필요시간을 추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개선 계획
- 교육부는 돌봄교실 위탁운영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어 위탁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위탁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고 충남교육청사례와 같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은
- 초등돌봄교실의 외주위탁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 차원에서 점검·분석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중요한 전문 인력인데 시도마다 제각각인 처우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돌봄전담인력의 처우기준을 상향평준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 전문상담교사 관련

- 2016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 교육부는 2012년도까지 전문상담교사 1인1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전국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은
- 학교폭력, 자살, 게임중독 등 전문적인 상담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 교육부는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 교육부가 2015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1명씩 배치하기 위해서는 매년 682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가능한지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심리 상담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상담교사는 97명만 배치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전문상담교사 충원 대책은 무엇인지
- 전문상담교사 증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적 투자효율이 높은 정책인데, 장관님께서는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기재부, 행정자치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 지방교육재정 확대,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을 위해 부총리께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길
- 교육부는 행·재정적인 문제로 전문상담교사 대신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지속적·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증원대책을 마련할 것
- 학업부진이나 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장관은 퇴직교원 정원을 전문상담교사로 채우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 교육부 ‘15년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산정식’을 보면 당초 초·중·고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5개 학교당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변경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자유학기제가 시범사업을 떠나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하나 현재 현실인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 지금의 자유학기제 성과는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닌지 지적
- 자유학기제에 대한 토론회 결과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들의 배경 등에 따라 실제 운영이 천차만별이고 연속성 문제 등 여러 개선 과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것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실시로 인하여 가격 인하 효과는 있지만 업체 간 담합, 입찰방해 행위, 학생 참여율 저조, 낙찰업체 수익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할 것
- 교복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교복에 대한 학생 건강권 문제 고려 요청
-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대입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유용하지 않아, 학생들은 사설 입시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교육비 지원내용에 교복비 지원을 추가할 것
-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에 아랍어와 베트남어의 지원자가 많은데, 이는 난이도 차이에 의해 점수를 쉽게 획득할 있기 때문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수능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측정을 표방해 왔으나 문제풀이 기술에 매몰되어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학생 선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능시험 자체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표를 보면 내신(학생부교과)·입학사정관(학생부종합) 비율이 확대되고 수능 비율을 줄이는 게 교육부의 기조 같은데, 수능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수능이 필요하지 않으니 수능을 폐지해도 된다는 것인지
-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은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것이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인데, 20대 초반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이를 입어 배움의 길을 가지 못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입학

- 사정관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충실한 심사가 불가능해 학생부의 요소에 의해 당락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큼. 내실 있는 입학사정관 운영이 되어야 학생부종합전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외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검증절차 강화 필요
  - 성적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심화반 수가 2008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공교육기관이 우수학생에게만 몰아주기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이 현상이 왜 하필이면 2008년 이후부터 늘어나고 있는지
  -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대학교 합격자의 출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일반고는 줄고 특목고 및 자사고 출신은 증가함. 학생부종합전형이 일반고에 상위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교육부 설명과는 다른데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입장인지
  -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이 시작하였는데, 일반고가 명문대에 입학사정관제로 합격자 배출하기 어려워지므로, 성적우수 학생한테 학교의 역량을 집중해서 비정상적으로 명문대 합격자만 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현상 원인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는 알겠지만, 교육부가 이를 확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학교 간 교내동아리 차이, 특목고·자사고 유리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작용을 점검하여 능력·노력 외의 요소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소논문-보고서 실적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뿐만 아니라 사교육시장에서 소논문-보고서와 관련된 강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임. 여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소논문-보고서 실적 반영에 대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은

-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 일선학교에서는 교내대회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한편,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교내대회 마저도 스펙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학원의 컨설팅도 받고 있는데, 교사의 업무과중과 학생들의 정규수업 준비 소홀, 학생부 수상경력의 변별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적절한 교내대회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의 교내대회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DB를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부 작성용 교내대회 남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학교별, 교사별 학생부 기재수준 차이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였는지
-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서울-지방, 자사고·외고-일반고 간 기회의 차이가 큰데 서울 강남의 학교가 아닌 지방의 학교들도 동아리 활동실적이나 교내 대회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부종합전형보다 정밀한 전형이 있어야하므로 장기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교육부가 학생부 작성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나 현장지도를 이미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조작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 2015년 학생부 정정 건수가 29만 건에 이르는 등 과다한데, 이는 단순 실수나 부주의가 많다는 것으로 학생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 부당정정 등에 따른 감사처분 사례(최근 4년 간 총 371개교에서 419건 적발)도 발견되고 있음. 학생부 기재에 관한 제도개선이나 나이스 시스템 보완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고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교 현장에서의 보완대책 마련 필요
- 교내 경진대회, 경시대회 등의 학교별 편차문제와 성적이나 경진대회 결과 조작가능성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관리 투명성 문제에 대한

##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학생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학교 현장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떤 후속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자기소개서 불법 대필이 성행하고 있는데 파악한 실태자료와 대책은 무엇인지
- 대입에서 자기소개서 표절의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교육부는 표절 자기소개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대입에서 자기소개서 표절의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표절학생 평가방식을 대학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대학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접수 절차와 대학별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력관리 현황 및 추진계획
- 입시컨설팅업체가 1년 사이 30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 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자료와 대책은 무엇인지
- 자사고가 학생부 전형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학원가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사고 진학을 위한 고액 컨설팅 및 면접과외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점검이 컨설팅이 끝날 때 이루어져 작년 점검 때는 18건 적발에만 그쳤다고 지적
- 단속시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입시컨설팅 학원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지
- 학부모대상 여론조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는데 해당 전형을 줄인다거나 개편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는지
- 일선 학교의 모든 업무는 NEI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지역을 예로 들었을 때 부산 지역 학생들의 정보는 부산교육청의 NEIS

서버에만 보관되어 있는 게 맞는지

- 지방교육청 관할 지역 학생들의 정보는 해당 교육청의 NEIS 서버에만 보관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인적재해로 쉽게 NEIS 서버의 정보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
- 교육부는 2013년 12월 연구로 NEIS 서버 파괴의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정보시스템이 훼손·유실되는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 NEIS의 복구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할 것
- NEIS는 해킹, 사이버 테러에 취약하며 입력자가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바로잡기가 어려운데 투명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 1,493억원이 투입된 NEIS 시스템의 학부모서비스 제공에 있어, 학부모 신청 후 담임교사 승인까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방학기간 중 교사의 NEIS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하여 학부모들의 시스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찜통교실 해소 등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현실을 살펴볼 것
- 부총리는 탈의실 법적근거 마련 및 실내 탈의실 확충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할 것
-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과 같이 사립 중·고등학교 교내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역사 국정교과서 관련
  -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를 통해 역사교과서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잉여 예산이 있기 때문이며,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를 비롯한 전체 실국 기본경비 15%절감이 필요
  - 웹전시 계약업체는 올해 3월 만들어지고 6월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아 9월에 5천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함. 업체의 홈페이지가 부실한데

11월의 웹전시 사업을 맡길 수 있는지

- 이번 교과서가 이념 편향성을 탈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1월에 현장검토본이 나오고 2개월 만에 최종본이 나와야하는데 역사교과서가 줄속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지 지적
- 교과서 개발, 보급, 교육 등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리미리 대비할 고 의견 수렴 검토를 철저히 할 것
-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교사들의 의견반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1월말 경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 후 교사들에게 보급한다면 새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하기에 너무 촉박하며, 역사 교사들에게 사전에 별도 연수나 교수·학습 자료 보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현행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한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받을 혼란에 대한 대책
- 최근 고등학교 검인정 역사부도 제작 과정에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편수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른바 일부 학계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
- 11월에 현장검토본이 나오게 되는데 3월에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 1년 유예를 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은 어떤지
-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이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이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밝혀졌는바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국정교과서 원고본 등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는 것에 대해 지적
- 교육부의 작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역사연구 세 기관장이 편찬심의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세 기관장에게 참여여부를 물은 결과 국사편찬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 편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고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등의 비공개 문제점에 대해 지적
-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 졌는지
- 교육부에서 국민들과 함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집필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야3당은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역사국정교과서를 막을 것인데, 부총리의 견해는
- 집필기준이나 집필진을 비공개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인지
- 집필진·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비공개 판결한 행정소송 결과를 제시하시면서, 한달 후 전 국민에게 공개될 자료를 공개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먼저 공개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 교육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안보 문제로 인해서 국정교과서 원고본을 제출이 어렵다 소명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사유가 아니라 지적하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형사적 고발 검토를 위원장에게 요청
- 국정교과서 관련 자료제출 거부 사유인 공개 시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정 교과서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조치를 요청
- 역사교과서의 원고본이나 집필 원칙, 가이드라인 등 관련된 자료 제출이 필요
- 집필중인 역사교과서 초고를 심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인지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한 9월 마지막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하기로 했지만 10월 최종 고시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는데 교육과정심의회 회의록 공개 요청

- 교육과정심의회에서는 교육부가 ‘정부’를 삭제하고 회의안건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고 교육부는 심의회의 결정으로 ‘정부’를 삭제하였다는데 어디에서 결정한 것인지
- 7월 29일 편찬심의회가 진행된 심의 일정표에 따르면 원고본 심의가 5시간 50분 만에 줄속적으로 끝났다고 지적
- 작년 11월에 황우여 장관의 발표, 1월의 부총리의 청문회장에서의 답변, 4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다가 7월에 말을 바꿨는데 이 사이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지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있다는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수립했다는 교과과정의 기술방향과 헌법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
- 2015년 개정 교과서 공통검정기준을 보면 2013년도의 검정기준에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부분이 제외되었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인지
-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전부터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혼용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부분을 제외한 것은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과서가 쓰여질 것으로 믿어도 되는지
- 국정교과서를 가늠하기 위해 교육부가 개발한 교수학습자료를 분석해 볼 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의 입장만 전면게재하고 우리 입장은 외교부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함. 왜곡 교과서에 대한 우려



- 이기동 원장이 4.3에 대해 공산폭도에 의한 사건이라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견해와 교과서에 기술되는 방향
- 공개되지 않은 국정교과서에 역사보조교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보조교재를 준비하겠다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조교재를 만드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라는데 어떤 입장인지
- 시·도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지만 교육부장관은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에서부터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
- 역사교과서가 국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국정교과서를 무력화하고 다른 내용의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시도교육청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과 방안
- 국정교과서 집필 방향을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균형 있는 서술’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산업화를 더 부각시키겠다는 것인지 독재정권의 과오를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 고등학교 한국사 개정 시안을 보면 4·19 혁명 등 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역할 토론에서 토론 참가자로 시위 진압 경찰과 시위 관여한 부모를 포함시키고 있어 시위에 대한 평가토론으로 본질이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
- 중학교 역사 검정기준을 보면 친일파 청산 노력이 빠져있는데 부끄러운 역사적 진실을 감추려는 것 아닌지
- 외부에서도 친일 미화를 위해 독립운동사를 축소한다든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올바른 역사 교과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5 개정역사과 교

육과정 시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 검인정교과서 체제 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에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역사 교과서에 보다 빈번하게 쓰였다고 지적
- 오전 질의가 끝나고 오후에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수립’만 남았는데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는 누구고 부서는 어디인지
- 역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를 1년 동안이나 잘못 올려놓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실무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할 것
- 백제는 근초고왕때 산둥반도, 요서 지역, 중국 강남을 지배하였고 그 이후 일본 땅을 점령한 해양대제국으로, 국정화 편찬 집필 시 백제사에 대해 제대로 서술할 것
- 최종결재본이 완성되고 나서 시각장애인용 점역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점역 작업이 약 7일 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제대로 된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편수실장에 역사연구관 같은 전문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임명되었는데 전문성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
- 박근혜 정부가 꼭 이렇게 임기 내 국정교과서 편찬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 강력한 국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민주 국가이고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개인사, 가족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에 국가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
- 2005년도 1월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국민의 의혹을 산다면 정부로서는 손해나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유념하여 투명하게 의혹을 벗어던지길 요청

○ 역사 국정교과서 외 교과서 관련

- 2015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서 작성한 초등학교 1·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보면 어려운 수준의 문장이나 전문용어 외래어 등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
- 초등학교 1·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검토본 익힘책에서 20문제를 발췌하여 3학년 학생 600여명에게 테스트한 결과 대부분 문제를 맞추지 못했는데 1학년 수학교과서 및 익힘책 현장검토본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지적
- 어려운 수학교과서가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 지적
- 부실·졸속한 어려운 수학교과서가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 어려운 수학교과서가 나온 원인으로 애초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범위가 넓다보니 무리하게 축약시켰고, 집필진 공모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집필진을 선발하였고, 현장검토본부터 최종 완성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이라 지적
- 작년 발행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가 1년 지나 139건의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점인정 중등 교과서의 평균 30건, 고등 교과서의 평균 50건 수정 정도에 비해 많은 편이라 지적
- 교과서 수정 내용 확인표에는 ‘국가·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교과서를 수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일 사항에 대해 다르게 표현하는 등 객관적 근거가 없고 허술하게 수정되었다고 지적
-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수학, 국어, 통합교과, 안전 과목도 같은 시기에 적용되도록 하여 촉박하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
-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까지 6일 만에 점역을 끝내야하는데 부실점역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
- 똑같은 재질, 똑같은 분량의 검정 교과서라도 중학교는 7779원, 초등

학교는 4800원, 고등학교는 5635원으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

- 중학교 교과서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 교과서 가격의 고정비 회수를 해야 하는 기간 3년이 도과하였음에도 교과서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 점인정교과서협회에서 교과서 공급업무를 담당하는데 중학교 교과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와 해당 협회에 이익이 돌아가고, 해당 협회의 역대 이사장이 교육부 출신 관료인 점 지적
- 중학교 교과서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관련 가격조정명령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서 검정 심사 수수료가 약 2천2백만원으로 과도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과서 검정 시 민원처리비 등의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과서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교과서 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검정 심사 수수료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디지털 교과서 추진계획과 관련해 현재 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효과성 의문이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디지털 교과서를 외면,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 재점검할 것
-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를 쓰는 등 잘못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교과서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마지막 확인

## 감사 때까지 전수조사 후 보고할 것

- 외국인학교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는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할 것
- 2018년 신설되는 ‘과학탐구실험’ 과목 적용을 대비하여 과학실 환경에 대한 현황파악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는지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과학실험실 구축관련 예산으로 일반회계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았음을 지적
- 과학실 인프라를 확충할 것
- 클라우드기반 조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클라우드기반 조성에 따른 동 사업의 진행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도구들을 교육당국의 서비스 접근차단에 의한 일선학교 현장의 불편에 대한 대책은
- 학생학부모 서비스(SMS통지 기능 포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스쿨넷사업에 대해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사항과 같이 각급 학교 보안설치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행해야 할 것
- SW교육 관련
  -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 현재 소프트웨어교육 인프라 확충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교육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교육청은 어디인지
  -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예산(특교) 총액 57억 3천만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받은 시·도교육청은 어디인지, 또한,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 중 배정교가 가장 많은 시·도교육청은 어디인지
  - 교육청별로 알맞게 배정되어 있는 예산 속에 각 교육청별로 소프

트웨어교육 인프라 확충예산 배정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은 결국 교육감 의지 문제로 귀결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노후 PC, 컴퓨터실, SW교육이 가능한 교사 부족, 지역별 격차 등 SW교육 인프라 문제의 대책은
- SW교육은 컴퓨터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이 아닌, 컴퓨터를 통해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라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
- 중학교의 정보 교사수가 학교당 0.4명에 불과하고, 컴퓨터실 및 PC도 부족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이 무색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사의 SW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담당 교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교원 확보방안은
- 코딩교육을 위해 전문성 있는 컴퓨터 교사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교육 기틀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
- SW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가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배정시간
- 정규교과수업과 방과후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연계를 통해 SW 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규교과 편성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에 맞춰 모든 제반 사항 확충 및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준비에 차질은 없는지
- 코딩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어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 소개, 관련 박람회 개최 등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교육과정 개편 시 교수, 교사를 포함해서 학교 행정가, 과학계, 건축대표, 청년대표, 고등학생 대표 등 다방면의 사람들이 모여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편은 매우 폐쇄적이고 밀실적이므로 국민적인 정당성이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의 문호를 대폭 개방할 필요

- 2009년부터 추진된 교과교실제 사업이 당초 목표(90%) 대비 50% 정도에서 정체되고,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감축되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동 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것
-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통일안보 강연교육에 대한 주기적 체계적 관리 절실, 강의자에 대한 사전 확인 및 강의 내용에 대한 점검, 강연자들의 강의 선정 기준 수립 및 관리 필요
-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리대로 한글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게 해야 함
-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교육이 필요
- 1 학생 1 스포츠클럽 활동의 학생들의 실제 반응이나 성과
- 소년체전 대폭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해 한 명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리 교육이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우리 아이들의 학업량을 줄이고 예체능 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
- 자유학기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과가 무엇인지
- 창의인성·꿈과 끼 교육으로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오케스트라 등의 경우 매년 지원예산지원이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한글과 더불어 한자 교육이 중요한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한자교육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최소화하고 영어교과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 보충

## 등의 대책이 필요

- ‘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남학생의 상대적인 학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체계적인 분석과 문제점 파악이 필요
- 초중등 BTL 사업이 15~20년정도 남아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고 기재부와 협의할 것
-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폐교재산 활용 관련
  -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데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여주 도자기 체험 등 마을 특성을 살린 체험 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전국에 폐교활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도 많은 폐교들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40곳이라는 미활용 폐교가 있는데, 현재 각 지역별 폐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 강원도 폐교 활용 용도를 보면, 대부분 청소년 수련시설과 체험학습장으로 쓰고 있음에 따라,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들을 수학여행지 또는 청소년수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는 지역활성화 측면과 폐교 활용방안으로 바람직할 것임. 또한 폐교를 기업시설의 유치를 하게 된다면, 미활용폐교 문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임대 폐교재산의 관리 강화 등 방안 마련 필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매년 50개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매각하는 폐교 수는 줄어들고 있어 엄청난 폐교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학생 수 감소가 역전될 전망이 전무한데



도 폐교자산 매각보다 활용에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

-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인 경우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폐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국가재정에 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
- 학교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교육부 자산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국가가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이 보유중인 전체 폐교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것
- 교육부는 미활용중인 폐교재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매각 또는 임대 시에도 본래의 목적인 교육·문화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할 필요
- 적정규모 학교를 중점 육성해서 학생들 학습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상향 개선하고 통폐합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으나, 전북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통폐합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처할 수밖에 없는 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통폐합 추진을 강화할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학생 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안으로 도심지 사립학교 이전 추진이 필요하나 막대한 경비 부담으로 사립학교가 이전 사업을 자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사립학교가 택지개발부지로 신설대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혹은 학교부지 확보 관련 개별법령 개정을 통한 부지확보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학교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또한 필요하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총량제는 단순한 비용논리로 아이들의 실질적 교육환경을 간과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 학교 총량제로 비롯된 대안인 증축으로 인해 발생할 과밀과 불안정한 교육환경은 아이들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현재 학교신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학교총량제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양산, 김해 지역의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5년 이후를 준비하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 인구 초밀집지역인 양산시 석산동 아파트지역 내 최초 설립을 추진하는 (가칭)석산중학교의 설립승인에 필요한 추가 요소는 무엇인지
- 학생 수 감소에도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비효율적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행정 수요가 적은 교육지원청은 인접한 교육지원청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경기, 인천 지역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과밀학급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적·장소적 불일치 발생하고 있는데, 통폐합지역과 신설 지역을 시간차를 두고 교육청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필요

#### ○ 교권 침해 관련

- 최근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 최근 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공무상 병가·휴직보다 일반 병가·휴직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절차 간소화가 필요
-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비율이 극히 낮음. 피해교원에 대해 심리치료·상담-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필요
- 교권 침해 피해교원을 지원하기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없거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어 부실 운영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교권 침해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피해 교사들은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책이 미흡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 교권 침해에 있어서 단순히 전보조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충원 대책 마련할 것
-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 교원 복무 관련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6.9.28.)에 따라 금품수수 관련 비위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대응을 돕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
- 2015년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총 810건으로 전년 2014년의 613건에 비해 33%나 급증하였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교원의 성 비위 징계가 2013년 55건에서 2015년 9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60명에 이르고 있어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 교실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교무실에서 동료여교사를 상대로 성희롱·성추행하는 교원, 불법업소를 찾아가 성매매하는 교원, 지하철이나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고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하는 교원들이 있는데 어떤 징계를 받을지
- 2014년 45건이었던 성범죄 관련 교원 징계건수는 오히려 2015년 9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성년·아동 피해자로 5년간 164건의 징계가 이루어져 비위 근절을 위한

##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내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날 시 해당 관련자와 학교장을 처벌할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교원이 저지르는 성 비위가 과연 그 사안의 정도와 경중을 가릴 수 있는 사안인지와 성폭행한 교원은 퇴출되어야 하지만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한 교원은 그대로 교단에 서도 되는지
-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교원들의 비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필요
- 성 비위만큼은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
-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2016.6.기준 179건)을 보면 대부분 견책에 그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지
-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죄의식 부재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의식 부재에 따른 결과, 음주운전 징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교육부는 교원들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사·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기 위해 예방교육, 강령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도서벽지 근무 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였는데 보급률이 낮고(25%)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
- 현재 정년 때까지 한번 받게 되어있는 자격연수를 최소한 교원입직 20년 전후로 한차례 이상 더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전교조 관련

- 현재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견해는 어떠한지
-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 교육부는 지난 5월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그 이유는
- 전교조 시도지부 사무실과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학교 예산 관련

- 교육청의 교육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점에 걱정되지 않는지 학교와 교육청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고 하나 2011년에는 학생수가 3.5%가 줄었지만 학교당 평균회계규모가 11% 증가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명박 정부때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살림은 늘어났는데, 2014년 이후 학교회계 평균 결산액이 줄어드는 등 학교의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는
- 학교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지출되므로 재정규모가 줄어들기 어려운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재정규모가 줄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학교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해보니 2014년에는 평균 2%넘게 줄었고, 2015년에도 평균 1천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014년 공립학교 학교회계 세입결산액은 2.57%나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누리과정 예산 편성만 강조하면 초·중등 교육현장이 망가질 수 있으므로,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지
- 고교 무상교육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에서 별도 재원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떠한지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교부금 증가세 회복을 전망하지만,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지연과 성장 안정화기 진입으로 과거 수준의 교부금 증가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데 대해 동의하는지
- 교부금의 교부기준과 관련하여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가 반영되도록 학생 수 교부 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축소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며, 시도교육청 지출구조를 효율화할 필요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누리과정’ 예산 논쟁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최대 5%까지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이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며 나라의 살림살이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관련

- 당초 교육부 입장이 변경된 것인데 기재부의 요구인지, 그렇다면 교육부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 기재부가 기존 교육부 안을 변경한 것인지, 부총리께서도 여기에 동의한 것인지
- 교육부는 기재부가 변경을 요구한다고 이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교육부가 기재부 소속기관도 아니고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교육부가 기재부에 제출했던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재원에 포함되어 지방교육정책지원 사업은 없었는데, 부총리께서 알고 있었는지

- 정부가 제출한 이번 특별회계 신설 예산안에는 8월 12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 내용 무시한 점,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점, 공무원 임금 인상분 등 실질적 지방교육재정은 감소한 점, 법안 논의도 하기 전에 특별회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별회계분을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제출할 것
- 특별회계 반영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한데 이 같은 꼼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정책지원 사업’이 기재부로부터 어떻게 제안되고 협의되어서 본 예산안에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서류로 제출 해 줄 것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관련

- 2008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9%는 지원하지 않았고 지자체별로 광주 17%, 경남 95% 등 차이가 크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지원분을 정산할 것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법률 자문은 결과에 따라 짜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재검토할 필요
- 법제처 법령해석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부법무공단의 자문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행정기관 내 법령해석상 대립이 생긴 경우 최종적인 법령의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은 법제처에 의뢰하였다면 해당 법령해석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짐에도 굳이 정부법무공단에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한 이유
-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통일된 법령해석이 최종적으로 가능한데 교육부가 이 같은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소송을 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관련 당시 공문으로 부족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고, 경기도에서 본 의원에게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주셨는데,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경기

## 도와 협의를 진행할 필요

### ○ 학생 안전 관련

- 2017년 교육환경개선비 예산편성(안)을 보면 예산분배가 지역 간의 편차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 시·도교육청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재원 전액 확보 추진 필요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금 운영을 사고 후 보상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진에 대한 대처 방법’이 실제와 맞지 않았고 지진 대비 동영상 매뉴얼 내용 역시 보완 필요
-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 학교별, 학교 내 건물별로 내진설계 여부를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
-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대피소’의 위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할 것
- 울진, 월성, 고리, 영광 원자력발전소로부터 10km 이내에 있는 학교의 17.8%, 경북지역의 학교의 10%이내만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지적
- 초·중·고등학교 건물 전체 3만 2000여개 중 2만 4000여 개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올해 내진설계 예산을 기준으로 67.4년이 지나야 내진설계가 완료된다는 것을 지적
- 계획상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진보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 지적



- 교육부에서 한 해 2000억씩 내진보강에 투자한다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내진보강을 위한 각 시도별 예산분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내진 보강을 위한 본예산을 확보하여 내진보강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재 재해복구에만 사용했던 재해 특교 예산을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와 법안 발의 시 협조를 당부
- 내진설계와 석면 제거 등은 학생 건강과 안전문제인 만큼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적용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학생들이 VR·AR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체험안전교육이 필요하며, VR·AR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부총리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향은
- 지진이 났을 때 재난대비 매뉴얼대로 대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5.2%에 해당한다고 지적
- 전국의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재난 대응에 대해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
- 도쿄 방재의 경우 지진발생, 발생 직후, 피난, 피난생활, 생활재건까지의 5가지 항목을 가정하여 대처요령이 마련되는데 이처럼 자세히 지진 대처요령을 알려주어야 할 것
- 9.12 지진 재난 시 학교별로 제각각 대응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되어야하며, 실제 위급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

- 작년 전국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율이 38.8%로 낮는데 이에 대한 보완 할 것
- 학생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학교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 지진 등 안전 대비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할 것
- 지진 등 안전 대비 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사 확충할 것
- 경주 강진 발생 현장을 부총리께서 직접 가셔서 지진 피해 복구 정도를 파악하여 조치할 필요
- 여진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 경주지역 65개교 내진보강 예산 162억원에 대한 우선조치가 필요하며, 각종 재해대비 교육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원과 학생의 피해를 예방해야 함
-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경주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경주지역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 지진과 태풍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삼동초에 대한 지원과 내진 보강이 필요하고, 임시로 삼동초 학생들을 수용중인 인근학교 체육관도 태풍으로 인해 침수되어 개축이 필요
- 학교시설 안전관리 전담인력제도를 실시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교육부는 내진설계와 석면, 학교 우레탄 운동장 문제 등 학교 안전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인력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 우레탄 트랙은 언제 교체가 완료되는지
- 우레탄트랙도 7월에 교체하겠다는 발표 이후 더 이상 보고가 없음
- 시·도교육청에서 우레탄폐기물이 일반인지 지정인지 구분 못하고 있음.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데, 시·도교육감은 모르고 있음
- 우레탄이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구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니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구분 요청할 것

- 환경호르몬 검출에 대한 환경부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우레탄을 재설치해도 된다고 지침을 주면서, 1,500여 개 학교가 우레탄을 걷어내고 우레탄을 시공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지침에는 변함이 없는지
- 교육부는 마사토 교체 및 우레탄 철거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우레탄 재시공은 유해물질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면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과연 다른 마감재들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인지
- 시·도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에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로드맵과 친환경 우레탄, 카펫트랙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아파트놀이터, 공원트랙, 자전거길, 공원 등 모든 우레탄까지 교체하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보도에 미흡하게 대응한 교육부의 잘못이라고 판단됨. 최근 인조잔디운동장 역시 유해성 기준치 초과 논란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유해성 연구를 먼저 시행한 후 우레탄의 대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은지
- 6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학교운동장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11개 시도교육청은 정기 실태를 조사할 법령이 없는데, 우레탄 트랙 정기점검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우레탄트랙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지 않은지
- 우레탄을 걷어내지 않고 위에다가 보완을 하는 식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지
-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우레탄의 KS기준을 정하는데 표준원의 검증 대상은 시료 공장에서 채취한 우레탄이고 중금속 기준이 초과되어

문제된 것은 시공이 끝난 우레탄임을 지적

- 왜 추가경정예산에 우레탄 예산을 신청했는지
- 추가경정예산에 우레탄 예산을 신청한 것은 올해 하반기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것일 텐데 왜 집행을 안 하는지
- 우레탄 교체 사업에 있어서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과 내년에 해야 할 것 등을 정리해서 줄 것
- 우레탄 속 유해물질이 2배 초과된 곳도 있고 100배 초과된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용 금지시키지 말고 차별화하여 처리할 것
- 경기도 일산동구에 소재한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교체계획
- 학교 석면 문제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근 18년 가까이 지나야 해결이 될 텐데 기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약 76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 고정식 소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21.3%에 불과하니 시설 확충할 것
- 의원실이 자체 시행한 학교 유해물질 실태보고 조사 결과 체육 교구와 학습 교구에서 대량의 납과 프탈레이트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실태 파악을 한 적이 있는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체육 교구는 제외되었고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기준에 학교운동장, 실내체육관, 급식실, 강당이 제외되어 입법적 미비가 있으니 보완할 것
- 각급 학교의 냉난방기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이를 점검하여 살균소독이나 세균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학교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등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 점검할 것

○ 학교 급식 관련

-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2015~2016년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현황 분석을 공개한 교육부 담당자 징계 요구
-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에 있어 급식시설을 확충하고 인력배치를 확대하는 등 교육부의 조치내용은 무엇이고 향후 재정지원 확대, 적정한 보상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 충남교육청의 급식지도비 회수로 영양(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기를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결정을 철회하거나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 급식지도비를 지급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음에도 충남지역 영양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수당을 신설할 의사가 있는지
- 원래 2015년까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시설을 현대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2016년 기준으로 87.6% 달성되었고 2014년부터 매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학교가 줄고 있음을 지적
- 향후 1~2년 내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 국무조정실 실태점검 결과 약 677건의 비리가 적발되었고 올 8월에만 식중독 의심 환자 학생이 약 700명 발생하였다고 지적
- 정부합동 급식실태 점검결과 식재료 공급업체가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입찰 담합하고, 대리 납품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방지 대책
-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학교의 급식 운영실태를 공개해야 할 것
- 학교급식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식중독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시 위생·안전점검 강화 등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 학교급식 관련 비리와 식중독, 급식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할 것

- 야당은 무상급식 소요예산의 50%를 국고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무교육(초등·중등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도 초·중등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현재 전국 평균 학교급식 식당 배식율이 16년 기준 84.1%인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급식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할 것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급식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장치 및 안전장치 설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학교급식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의 ‘식재료업체와 학교간 대면접촉 홍보 원칙적 금지’로 중소기업 홍보영양사 약 천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 바, 대책 마련 필요
- 2016년도 초중고 보건수업 미실시 학교가 25.7%로 많고 보건 교과서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런 현황을 감안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보건교사 미배치교에서는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학생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어 보건교사 확충이 필요
-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감염병 관련 교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 및 향후 추진 의사는
- 문신시술의 부작용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성 교육’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
- 학생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도박 중독 관련 실태조사 확대 실시 및 향후 추진 계획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지금까지 반

영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대선공약 파기 아닌지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로 다소 완화된 표현을 썼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라 했는데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과 달리 오히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교 학비지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 교장 공모제 관련
  -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 중앙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정치 편향적 활동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공모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규 개선 필요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5에 따르면 전반적인 교장 공모제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교조 편중화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견해
  - 내부형 공모학교의 15% 안에서만 평교사 공모 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이 부당한데, 해당 시행령 삭제를 검토할 것인지
  - 내부형 공모교장 15% TO 기준을 1학기에서 1년으로 변경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시행령 폐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교장공모제의 핵심은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매진한 평범한 교사들에게 교장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인데, 이를 가로막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므로 삭제를 검토할 것

- 교장공모제는 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킴으로서 교육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확대해 나가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며, 실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단점들만 부각되는 것이 아닌지
- 교장공모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실시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 교장공모제가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장공모제가 시행된 학교, 특히 평교사가 교장으로 근무한 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평가할 방안을 수립할 것
-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도 하고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으면 더 확대할 필요

○ 한국교원대 교장자격연수 프로그램 관련

- 교장자격연수 프로그램의 분산 운영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이점을 살리고 지역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장점을 살리도록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 교장자격 해외교육 체험연수 프로그램의 유지 여부 및 개선 계획
- 2013년 이후 해외교육 체험연수의 공고기간 적절성, 특정업체 선정 가능성, 현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 전반적 검토 필요
- 해외교육 체험연수가 대규모 사업임에도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한 곳에서만 진행되는 이유가 있는지 다변화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하고 보고할 것

- 초등학교 담임교사 교체가 전체 학급 수 대비 2015년에 4% 수준이고 출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당사자의 편의에 의해 담임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담임 교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필요
- 교사 성비 불균형 현상은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성평등목표제’와 같은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 수석교사 관련

- 수석교사제가 ‘수업 잘하는 교사’를 우대해 교육 전문성을 높이려고 도입된 제도이나 교육부 도입목표와 다르게 수석교사제의 저조한 선발 원인
- 수석교사가 점차 급감하는 이유로 수석교사만의 우대 혜택보다는 수석교사 임용으로 인해 수석교사의 2분의 1로 줄어든 수업시간을 다른 교사가 대신 떠안아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교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방안은
- 수석교사 문제가 각 시도교육감의 의지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되며, 각 지역의 우수한 교사들을 통해 수석교사제를 잘 운영하여 현장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야 할 것
- 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의와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및 수준 높은 교수학습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일반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석교사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법제화 된 지 5년 만에 수석교사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선발인원을 확보하는 등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이 필요
- 수석교사의 정원, 권한, 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석교사제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석교사 별도 정원 관리는 법률로 정한 사항인데 이를 위임받은 행자부의 위법이 아닌지
- 정부조직법과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이 있음에도 수석교사의 정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 수석교사의 정원은 행자부 협의가 필요하며, 행자부는 교육부와 협의가 되면 내년부터라도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교육청과 협의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
- 학교회계직원의 처우와 관련한 시·도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교육부 및 교육청 내 인력관리총괄부서 확충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교육청별로 제각각인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교육청과 협의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
- 학교회계직원의 처우와 관련한 시·도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교육부 및 교육청 내 인력관리총괄부서 확충 등에 대한 교육부 견해는 어떠한지
- 교육현장에서 비교과 중심(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가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 노동조합과 국립학교회계직원의 단체협약을 즉시 체결해 국립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교직원의 40% 가까이 되는데, 현재 관리전담 인력이 부족함. 교육부내 전담인력 확충과 교육청의 경우도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전담인력 확충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근로조건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별 사업계획 중 고용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교육부에서 사전 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비정규직 14만여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2만 4천명, 17.7%로 5%의 목표 대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이를 실

현황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 정부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①기존 근무자 중 1년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②무기계약 전환업무에 결원발생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상시지속적 업무에 2015년 3월 이후 신규채용자 전체인원 중 무기계약으로 최초 채용한 인원 비율과 개선계획, 기본 1년 이상 근무자 중 무기계약 미전환자에 대한 전환계획은
- 전국 공통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들은 무기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국에 1만명이 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고 이는 전체 학교회계직의 7.5%나 되는 수준임. 상시지속적 업무이면서 15시간 근무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되는데 14시간 50분은 안된다는 것은 부당함. 이에 대한 개선대책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정근로시간을 확대할 계획은
-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에 따르면 기간제법상 제외자 외 상시·지속적 업무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임. 그런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 교육부는 기간제법에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시지속적인 업무더라도 모두 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무기계약전환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교육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여부를 기준으로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의 개선대책은
- 학교보안관, 당직전담직원, 배식보조, 방과후학교실무원, 시설관리직, 청소원, 기타, 통학차량보조, 매점관리원,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사감 등의 직종 등 무기계약 제외자 비율이 높은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조치 및 고용안정 대책은
- 교육부장관 직접고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금(연금)제도는 학

교별로 관리되고 있음. 시도 사례로 강원도는 교육청단위의 퇴직금(연금)제 도입을 추진 중임. 교육부 단위 퇴직금(연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2016년 명절상여금 70만원, 영양사 면허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국립 학교회계직원 처우가 공립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
- 기간제법에서 비정규직에게 급식비, 상여금 등을 정규직과 차별해서 지급하면 안 되는데 학교비정규직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 정규직은 평균 1년에 200만원 받는데 비정규직은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많은 교육청에서 정기상여금 제도를 도입함. 전국 대부분이 정기상여금제도를 신설했는데 교육부는 여전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 전국평균수준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향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의견은
- 국립학교 비정규직 처우수준이 전국 꼴찌임.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도 없는 등 최하 수준인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부와 합의했던 처우개선안(명절휴가비 상향과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을 국립학교에 적용시키고, 국립 전문상담사의 경우 영양사·사서와 동일한 보수표를 적용 시킬 것
- 학교회계직원의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해소되기에 역부족인데. 1년에 3만원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설정을 포함한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 최소한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근속수당 개념을 도입해서 2년 차부터 근속에 따른 임금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 개선계획에 대해 지적
- 2017년 1월부터 발생하는 최저임금 위반대책(현재 기본급 시급

6,366원, 최저임금 2017년 6,470원보다 낮음)

-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액(또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하여는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지급 및 교육부에서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
- 공무원은 월 10시간분의 정액시간외수당을 실제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다 보니 최초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정액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 이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시간외 수당 불법·부당 사례에 대한 시정계획과 학교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은
- 월급제 도입으로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한 방학 중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함. 생활안정대책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① 방학 중 휴업수당 또는 소정의 생활안정 수당 지급 ②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공무원과 차별을 해소한 후 방학기간 중인 1월과 8월 시기에 지급하는 방안 ③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하여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동일액을 지급하는 방안 ④ 월급제에 기반한 연봉계약으로 매월 고정적인 기본급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 교육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위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지자체 또는 타부처의 대응투자로 인건비 재원이 조성되거나 수익자 부담분으로 인건비 재원을 조달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 국립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를 사업비와 분리해서 관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인지
-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어 고용불안을 초래함. 국립학교부터 임금을 인건비로 예산편성 하는 등 개선노력 필요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 시 현원의 60%만 반영하고 단가는

임금 중 일부 누락, 산정액의 70% 반영하는 등 기준재정수요(보통 교부금)에 실제 인건비 소요액의 40%정도만 반영하여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교부할 필요가 있고, 그럴 수 없다면 관련 지침의 “3. 기타사항”을 전면 폐기 또는 유보할 필요

- 교육부 단체보험제도 현황 및 개선계획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는데, 학교안전공제회 등 제도개선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해 등 단체보험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
-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치료비 및 휴직으로 인한 임금손해액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보조’와 같은 명칭을 빼고 존중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종명칭을 만드는 것, 호칭을 선생님 등으로 통일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 등,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비정규직이 소외감이나 배제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안내할 것, 그리고 직종명칭을 존중감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
- 학교비정규직들의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적업무 지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심각한데, 이는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부당한 사적업무지시 사례들이 담긴 사적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현장학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적업무 등 비정상적 업무 관행에 대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필요
- 학교회계직원도 학교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 등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함. 학교회계직,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 정체불명의 이름이 아닌 교육공무직으로 명칭변경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 학교비정규직 규모가 총 40만에 육박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과 학교비정규직의 직제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근무지역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 교육부(국립학교별) 질병휴가(유급) 현황 및 정규직과의 휴가제도 차별 개선계획
- 급식실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휴가, 병가, 휴직 등에 대한 대체 인력 확보방안 및 상시적 대체인력풀 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
- 90% 이상의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나서서 유해요인 조사도 실시하고 질병위험자에 대한 정밀건강검진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련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교육부가 급식실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2~3식 학교에 별도 대책 필요)
- 급식실 대청소 및 고공작업(천정과 닥트, 배기장치 등 청소)을 실시하다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전문업체 활용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수립할 것
- 현재의 노동력 중심의 급식소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계획
- 영양교사와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나 교사대체직종인 전문상담사, 사서 등에 대한 차별해소 대책
- 영양사가 1년차에 정규직 교사 대비 70.5%의 임금을 받다가 5년,10년,15년,20년차가 될수록 임금 수령액은 소폭 상승하지만 정규직 교사 대비 임금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45.6%가 됨. 조리사도 공무원과 비교하여 1년차 68%에서 20년차가 되면 46.6%로 21.4%가 감소함. 동일노동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격화

되는 매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실시함에도 교육과 연수 등의 기회보장과 지원이 부족한데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교육과 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과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 및 계획
-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는 검수로 인하여 조기 출근을 하고 점심배식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기도 못하고 있어,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병가나 연가사용이 필요하더라도 대체인력이 없어 출근해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확보와 시간외수당 개선대책
- 특수교육보조원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되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별도의 직무수당 지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 국립학교 특수교육보조원에게 국립학교 회계직원과 동일한 보수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에 대한 기존의 업무 외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돌봄교실 지원 등의 업무를 별도의 수당지급도 없이 가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 학교도서관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수적임. 하지만, 현재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배치율이 대단히 낮음. 최근 학교도서관의 경우 방중에도 개방하면서도 사서에 대하여 방중비근무로 근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서 인력 배치 확대와 사서의 상시전일제 근무(365일제)로 전환하는 계획은
- 2014년 국회 지적을 받아 2015년 강사 직종의 고용 안정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대책팀을 설치했으나 2015년 말 대책팀을 해체하였고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었음을 지적



-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초등스포츠강사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
-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시 11개월이 아닌 12개월 단위를 검토할 것
- 2017년도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을 검토할 것
- 초등스포츠강사의 학교별 선발방식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단위 선발제도 방식을 검토할 것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과 소규모 학교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실용영어 교육강화를 위해 순환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 강화 계획은
-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2017년 인건비 예산 확보대책(분담비율 변화 등) 및 학교별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 단위 인력선발제도 개선 계획
-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계약고용은 용역회사와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회사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는 식인데 급여를 줄이기 위하여 두 계약서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계약한다는 것을 지적
- 야간 당직기사의 부당한 계약에 대하여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냈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고령의 학교비정규직 야간당직기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야간당직기사의 초장시간 노동문제 개선 대책 및 주1일 유급휴일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지급 등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촉구 및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대책이 필요한데, 예산확보 대책은

-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공약의 경우 현재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1.8명 모자라고 중학교의 경우 3.6명 가량 모자라는 상황이라 지적
- 교원업무경감 관련 직종인 교무·과학·전산·행정직 종사자들이 최근 2년간 약 3천명이나 감소했음. 그럼에도 교육부는 총액인건비 공문 시행 시 교무행정보조인력 직종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공약에서는 학교마다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단계적 확대 배치를 약속하였지만, 2012년에서 16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교무행정인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 보건교사·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리하게 등급이 산정되는데 비교과교사들은 동일 직군끼리 묶어서 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지
- 초등스포츠강사 자격기준이 개정되면서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강사로 입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 초등스포츠강사 자격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했으나,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의 연장과 기존의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입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운동부의 코치나 감독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시킬 것
- 학교용지시설 관련
  -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992억원대에 이르는 학교용지시설을 수년간 방치해 교육예산의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5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학교용지는 30곳에 이르며, 이중 20여 곳은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책은

-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큰 규모의 학교용지가 방치되고 있어 전국 7개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방치된 학교용지 활용을 교육부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는지
  - 교육부는 교육청으로부터 토지매입비 예산을 대부분 환수하였으나, 180억원 규모의 예산은 오래 방치된 이유로 확인이 안 되고,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투입한 예산의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환수되는 지
  - 결국 교육부는 예산을 환수했으나, 교육청은 학교환경개선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쓰여지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교육재원이 학생들에게 못 돌아 간 것 아닌지
  - 학교용지가 방치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학생수요 예측이 잘못되는 등 사유로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수요측정 등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지침 등을 만들어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관리할 필요
  - 결국엔 부실한 수요예측과 설립계획으로 인해 막대한 교육예산이 부동산에 묶인 채 낭비되고 있는 셈인데, 학교 우레탄 시설 교체,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들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결 못하고 있는 교육청들이 학교용지 매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도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
  - 가장 큰 문제는 학교용지시설 지정해제를 통한 재원 확보임. 장관께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방치되고 있는 학교용지 매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시고, 향후 활용 및 매각계획 등의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계획을 75건 올렸으나 10건만 ‘적정’ 판정을 받고, 54건이나 무더기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음. 대부분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때문에 학교가 필요한 것인데, 인근학교로 분산배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과 함께 대부분의 학교신설계획이 탈락하는 것은 자칫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감들과 현실적이면서도 걱정된 신설조건

을 제시하는 등의 논의를 할 필요

- 대전 유성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2019년부터 5000 여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남4중’의 신설이 시급하므로, 학교 신설이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남4중’ 신설을 올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
- 인천지역 사립학교 이전 관련 비리가 심각한데 그 원인은 학교 기본 재산 담보설정 승인권한이 교육청에 있고, 학교부지의 담보제공 차입 허가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설비 마련 키를 쥐고 있는 시교육청이 이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교육청의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 고등학교 설립 시기 불투명으로 인한 이주 예정자의 혼란 해소와 서충주신도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고등학교 조기 설립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
- 경기도북부교육청에서는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사업비로 약 58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60%는 이행되고 있지 않음, 해당사업의 미진행 부분에 대한 향후 사업집행계획과 향후 세부추진 절차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것
- 초·중·고 사립학교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행령 근거가 미비하여 비리사학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행령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
- 전남교육청 ‘장만채’ 교육감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위를 악용한 영리추구 및 특권 남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 임용에 따른 공모 과정 문제점 및 특혜 의혹, 감사 부서의 장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책임지지 않고 유 감사관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지적
- 전북교육청의 급식지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중복 관련 감사

에서, 한별고의 경우 별도 환수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목인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교육부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

- 서울시 교육청에서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비서실장의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교육부 감사 필요
-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의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한글 소프트웨어를 일괄구매했는데, 두 번의 유찰 이 후 99.9%의 가격으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하여 담합이나 유찰의 의혹이 있다는 지적
-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 교육청 평가지표를 양적 평가(취업률, 취업률 향상도)에서 질적 평가(4대보험 가입비율, 유지취업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 지방재정운용 성과평가지표 중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은 21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지표인데, 교육부가 재정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교육청에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 자치에 위배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 누리과정 등의 자체 예산 편성을 위한 기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복지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평가를 통한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인센티브로 교육청을 길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령 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시·도교육청 평가제도의 재원으로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을 쓰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인센티브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해 보고할 것

## <고등교육 관련>

### ○ 대학구조개혁 관련

-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주목적이 부실대학 퇴출이 아닌 정원감축으로 변질되어, 퇴출해야하는 부실대학의 연명책이 되었으며 재정지원 사업 가산점을 통해 우수대학이 오히려 감축되고 있음
- 대학의 정원 내 입학정원을 구조개혁을 통해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정원 외 입학정원이 오히려 늘어 결국 실제 감소는 거의 없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과잉을 메우려 하는 실정이므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함
-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대학이 많은데 2주기 평가도 동일하게 진행하는지
- 하위 대학 맞춤형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 사업이 전면 제한 된 27개 대학의 문제 제기 여부와 향후 대학들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
- 2013년 대비 2023년의 정원 감축 목표로 16만명을 설정한 추산은 미흡하며 2주기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산출이 필요
- 정원 외 입학인원의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원 감축에만 매몰되어 고등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지 못하였음을 지적
- 정원 감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학 퇴출 로드맵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퇴출 대상 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영제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재정사업과의 연계로 우수대학의 정원 감축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대학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퇴출하여, 소모적 경쟁이 아닌 전체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

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원칙을 새롭게 모색할 것
- 2013년 대비 2016년 정원 감축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대 정원 감축이 심각했음을 지적
- 대학 구조개혁 1주기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되어 ‘지방대 죽이기’가 아니었는지
- 1주기 평가 항목이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 국회에서 지방대육성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대의 보호가 필요한데 대학구조개혁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평가 기준 및 운영에 대해 지방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 CK사업의 재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대학 중 9월 5일 구조개혁평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재정지원제한 해제된 대학들 3곳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교육부가 마치 이행점점으로 인한 보상을 주는 듯이 재정적 혜택을 부여, 과정의 공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임.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충분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학 구조개혁과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융화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과거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대학들이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 E)에 지정된 것은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이 아닌지
-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국립/사립별 정원 감축 계획
-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등급별 인원 감축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중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거나 컨설

팅 회사를 설립했던 대표 등 대학 컨설팅 관련자 현황은 어떠한지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임기 중에 컨설팅 업체를 차린 것을 인지하고도 제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요건의 제척 기피 규정 등 규정 미비를 개선할 것
-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국·공립대학 간 통합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국공립대학간 통합 근거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 약학대학 관련

- 약대 계약학과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제약약사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계약학과 TO를 회수하여 원 취지에 맞는 제약산업, 연구약사를 실질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약학대학’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 약대교육이 6년제 교육의 목표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 현재 설립·운영되어지는 약학대학의 주변 여건은 어떠한지
- 기초과학, 의학, 치의학, 대학병원 등 연구약사 양성의 여건이 갖춰진 거점형 대학 중 약학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 현황은 어떠한지
- 다른 대학병원에서 임상약사실습교육의 질은 어떠한 현실이고, 실습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각 대학의 실습비는 어떠한지
- 2015년 3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치과의사·한의사 등은 공급과잉이며 간호사·약사·의사 등은 공급부족이라는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교육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 약대 편입학을 위해 자연대 학과의 학생 이탈 등 문제가 많은데, 학제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 국립대병원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 및 향후 계획
-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담징수에 대한 전수조사와 환급 필요
- 최근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 거점 병원의 역할을 망각하고, 각종 복합의료공간, 부대시설 사업에 몰두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거시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 및 부채증가에 대하여 정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경영실적 및 공공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
-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편중되고 있음. 지방대학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
- 국립대병원에서의 장례물품 폭리, 병원 간 격차, 출산비용 격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서울대병원, 1년여간 500여차례 물품 도난에도 무방비”와 관련하여 교육부 총리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충남대병원, 환자에게 선택진료비 등 상습적 부담징수(교육부 감사 지적 후에도 부담징수 계속 돼)”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은
- “유가족 울리는 국립대학병원, 장례물품판매 폭리 심각”과 관련하여 국립대학교 병원장들은 각 병원별로 순이익 미치 마진을 실태를 파악·점검하고, 폭리 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14년 중순 화순병원 사무국장이 장\*\*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2014년 11월부터 병원장에게 2015년 5월까지 장\*\*을 정리할 것을 요청했

으나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사실을 교육부 확인 후 보고할 것

- 2014년 해외환자유치사업비 정산내역 중 ‘의료관광코디네이터교육 “에 관한 계약을 전남대병원과 광주의료관광협의회가 맺었는데, 양쪽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 경우 계약상의 법적 문제 검토
- 백남기 씨 사인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서울대병원장-유족의 만남을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 병원학교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학재정운용 관련
  - 대학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법인 부담금이 최근 4년 동안 약 8%정도 감소하였고 이를 교비에서 충당하게 되어 학부모·학생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지적
  - 대학법인의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충당하려면 재정여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승인도 받아야하는데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 아닌지
  - 195개 대학 중 94개 대학법인이 건강보험 법인 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4년 동안 부담금을 안 낸 대학법인은 60개에 해당 더구나 사학연금은 100% 부담하면서 건강보험 부담금은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고려대 같은 대학도 존재한다고 지적
  - 대학법인의 건강보험 법인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할 것
  - 사립대학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
  - 국내 대학에 사용해야 할 적립금 등 교비를 국외 캠퍼스 설립·운영에 사용할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학들의 ‘자산 빼돌리기’와 비리 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구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음으로

## 신중한 검토 필요

- 사립대학들이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요구, 비정규직원 등을 해고하면서 수백억의 교비회계를 들여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지적- 대학들이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큰데 교육부차원의 제한이 필요
- 교육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행태를 지양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할 필요
- 사립대학의 합리적 교비 지출과 법인의 재정 지원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비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 교육부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학법인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 아래에서는 부정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그리고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련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그리고 “소송경비”를 학교운영상 필요경비로써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교육부가 2016. 3. 3.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단지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예고가 된 시행령 개정안이 아무런 진척 없이 Pending된 상황이라면 이처럼 교육부가 기안한 법령 개정안을 진행을 못 시키는 것이 보신주의라거나 복지부동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이러한 점은 책임행정이라는 행정의 원칙에 비추어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
- 대학 회계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법률비용 지출의 요건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시행령을 개정,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교육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은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라고 확정한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인데, 교육부가 어떻게 이런 식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

- 현행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에도 사립대학의 회계 관련 부정·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회계 문란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 사립대 법인 284곳 중 191곳(67.3%)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법령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 사립대학 소송의 절반 이상이 교직원 및 학생 관련 소송이고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대학들이 무리한 징계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 국립대에서 특정 석좌교수를 초빙하여 12년 동안 연구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연봉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석좌교수 운영현황을 총 점검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지난해 국립대 교수들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평균 1,659만원 정도로 기성회회계 시절보다 적어도 삭감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들은 기성회 시절에 비해 절반이상 깎인 금액을 받는데 그쳐 심각한 사기 저하가 우려됨.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교육부에서 일일이 대학별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필요
- 학교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학생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평의회 주요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법제화하는 한편, 학교별 대학평의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비밀 유지 조항은 삭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 한국연구재단에서 일부 연구지원사업 연구자 선정 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평가가 아니라 패널 전체 합의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평가위원에서 교육부 및 전문기관 직원은 제외되어야 하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산학협력단 인건비,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하여 적발되더라도 해당 건에서만 배척되는 등, 제재 정도가 약하므로, 대학 당국 특히 총장의 책임, 학교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제 조치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미국과학재단(NSF)의 2016년 과학엔지니어링 지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이공계 전공자 중 국내 유턴 의사자의 비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는 등 우수한 두뇌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데, 그 원인으로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나 연구의 독립성 보장 미비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 연구등록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논문심사 비용은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수근거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조항 폐지 및 교비회계 수입 내 논문심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목포대, 인천대 등에서 학생들 계좌에 연구수당 지불 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R&D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실태와 처벌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화 교육은 무시되고 변호사시험 대비 중심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 자격자 배출 기능에만 집중하다보니 법학전문박사 진학률이 매우 낮아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축소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개선책은 무엇인지
- 한국형 온라인 대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K-MOOC 강좌별 최종 수강 완료율이 극히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취업에 유리한 학과나 학교를 찾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퇴·휴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 초·중·고 시절의 진로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생 진로교육도 중요하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대학창업 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잡 미스매칭을 막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방법이 아닌지
-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취업계 자체가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졸업 전에 조기 취업자들에게 있어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5월에 입법예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계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적절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출석과 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크므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을 낮추려는 미봉책으로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창업이 마치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이 창업을 부추기고, 실제로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을 한 학생들, 그리고 창업을 실패한 확률을 알고 있는지, 대학창업자들의 사후진행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지적
- 대학발 기술창업의 핵심으로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방안

- 대졸 허위취업자를 적발하고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7,8월에 공시하지 말고 허위취업 실태조사를 한 후 연말에 공시하여 신뢰도를 높일 필요
- 취업률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대졸 미취업자 List를 활용해 이들에게 243개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청년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
- 졸업유예생의 수가 얼마이고 졸업유예생들에게 얼마의 등록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 졸업유예생의 등록금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학비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기숙사비를 22~30% 인하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숙사비 인상은 161곳, 동결이 52곳, 인하는 10곳에 불과하고 교육부의 대책도 없다고 지적
- 대학원생 인권침해 관련
  - 대학원생 인권침해 사례는 대학원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 교육부가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
  - 청년위원회에서 권리장전 표준안을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해당 권리장전을 제정한 대학 현황
  - 대학원 평가지표 내 대학원생 인권 관련 항목이 들어가는 것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류되었음. 현 시점에도 계속 피해사례가 거의 매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대학에 인권센터 설치, 각 사안별 행동 매뉴얼 제정 등을 통한 인권보호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조교 임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생 조교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

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대학들이 인건비를 아끼고자 비학생조교를 꿈수로 고용하고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립대를 비롯해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의 비학생조교 고용실태를 전수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보고할 것

○ 각 국의 고등교육 학위 제도에 관한 투명하고 공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학위인정 정보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

○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을 제시할 것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 현재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교육부가 정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권고 기준
- 외국인 유학생 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올해에만 4,156명이고 최근 5년간 2만명을 넘고 있는데, 중도 포기하는 유학생이 많은 이유는
- 외국인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며, 대학이 단순히 유학생을 받아 등록금 수익에만 치중하게 될 것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한다면서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 요건을 완화해주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를 오히려 삭제한 이유는

○ 교육부는 지자체·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처별 실태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협의하여 대학 석면관리 실태를 보고하고, 각 대학별 석면 관리·제거 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

○ 전국 국립대 40곳의 총 1,766개동(33.6%)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되고 있어, 교육부는 국립대 석면 교체예산을 대폭 늘려 학생안전을 확보할 것



- 대학교의 우레탄트랙에서도 중금속 검출이 확인된 만큼 예산 확보해 교체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의 적극적인 현장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국립대학 시설비 예산 편성 시 학생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노후건물 개축과 리모델링에 우선 투자가 필요
- 대학실험실 안전 관련
  - 대학 내 실험실 안전업무가 국민안전처, 미래부, 교육부로 3원화되어 있는데, 실험실 안전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 조정이 필요
  - 교육부에서는 실험실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규모가 축소되고,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도 못했는데, 예산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모든 대학의 실험실 환경이 개선되었는지
  - 대학 실험실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없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의 총량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학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마저 없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교육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실험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해야 하고, 실험실 안전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
  - 소량이라도 화학물질은 큰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얼마나 어디에 사용하는지 데이터 구축시스템을 만들 필요
  - 지난 9월 경주 강진 발생과 관련하여 실험실의 피해는 없었는지
  - 대학 내 실험실 시약,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간 업무조정 필요성 및 실험실습실 안전과 관련된 예산 확충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립대학병원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 및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조

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 마련이 필요

-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보강 및 부속건물이나 비구조물 시설에 대해서도 재난대비가 필요
- 취업계 문제와 이화여대 학칙개정 사건을 보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자율성에 한계가 있고 여기에 교육부의 역할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필요
- 국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유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대부분의 채용설명회가 서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지방대학생들은 취업준비단계부터 차별받고 있는데 지방대생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노력을 교육부에서 마련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된 이후에 오히려 지역인재 교수임용 비율이 줄어 들고 있고, 일부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율이 낮은 경우가 있는 등 교육부의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방대’ 육성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실태가 어떤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 관련
  - 총장 직선제의 장단점, 간선제의 장단점은 생각하는지
  - 직선제가 실시 될 때 주로 나왔던 공약들이 주로 재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약들인데, 이 공약 이행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

되었는지

- 직선제를 시행할 당시 대부분 국립대학은 교수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이나 지역사회는 선거에서 배제되는 등 교수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교수들이 주장하는 직선제는 결국 교수들에게는 직선제였지만 다른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참여 기회조차 제한되는 본인들만의 리그가 아닌지
- 미국, 유럽 등의 유수 대학들이 총장직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지, 선진국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인지
- 경북대 총장 임명제청거부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 구성원들이 2014년 10월 당시 추천되었던 1순위 김사열 교수와 2순위 김상동 후보를 지난 8월에 재추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지난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1순위였던 김사열 교수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 경북대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순위로 추천된 교수에 대해서 청와대가 비토를 놓고 있어 2순위 자를 임용할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
- 경북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했지만 2달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총장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조속히 총장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
- 현재 경북대 총장 임용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 국립대학교 총장에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심사절차 및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 국립대학교 총장 자리가 청와대의 권력 실세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대학의 많은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이 두고 보지만은 않게 될 것을 유념할 것인지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대학은 자율적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 아닌지
- 문제가 있는 직선제보다 간선제로 유도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 학칙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다면서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과 관련되는 대학의 총장직선제는 오히려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
-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총장직선제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 상급심인 2015년 6월 24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의해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야 한다고 나왔음을 지적
- 최근 2년간 총장 공석인 국립대학이 4개교인데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 총장임용제청거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일부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 공석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부 성향과 맞는 총장후보자만 임용하는 것은 아닌지
- 총장후보자의 선정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은 헌법상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위배가 아닌지

#### ○ 이화여대 관련

- 2011년부터 체육특기자 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것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양이 2015년도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하게 된 것을 지적
- 체대 입시평가 당시 면접위원회에 압력을 가하여 정유라 학생을 부당입학시켰다는 지적
- 출결관리 및 과제제출 과정에서의 특혜 지적

- 정 모 양이 입학했던 당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전형의 각 전형 요소별 채점표 일체에 대한 자료 요청
- 정 모 양이 입학할 때 입학가능 종목이 23개로 확대됐고 재학할 때는 학칙이 개정되어 정 모 양이 예외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
- ‘글로벌 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의 특혜 지적
- 최순실 씨의 두 차례 방문 시 각각 체육대학 특기생 관리지침 내 규와 학칙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정한 대학 스포츠 운영규정에서는 외국에 체류하면서 훈련에 임해야 하는 학생선수는 휴학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화여대 규정은 국제대회 참가하면 출석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다고 지적\
- 개정된 학칙의 내용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인데 개념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 입학과 성적, 출석 등에 대한 학칙은 모든 대학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원칙임을 지적
- 이화여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성적이나 출석 관련된 규정을 한번 정리해볼 것
- 이화여대는 학칙 38조 2항, 42조 1항을 개정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담당 교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방식에 의해 졸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6년 6월 16일 개정된 학칙이 부칙에 따라 일부는 2016년 9월 1일부터, 또 일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출석과 시험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 것을 지적
-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의 배경, 절차, 소급 적용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
-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양의 체육특기자로의 입학과정에서의 입시 비리 의혹과 정 모 양의 재학 중 학칙 개정을 통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

- 출석인정을 위해 정유라 학생이 4월에 제출했다는 출전기록이 올해 9월 기록을 포함한 것은 자료요구에 따라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크다는 지적
- 이화여대가 정유라 학생 특혜에 대한 대가성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다수 선정된 것은 아닌지
- 이화여대 학칙 개정을 살펴보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다는 정책 방침에 역행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준 특혜를 통해 대학은 무엇을 대가로 얻었는지, 대가로 프라임사업, 코어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등 교육부 사업들에 선정된 것 아닌지
- PRIME 사업은 사회·산업 수요 중심 공대 위주로 학과를 재편하는 것이고 CORE 사업은 인문역량을 육성하는 것인데 서로 상충되는 사업 아닌지
- 서로 상충되는 PRIME 사업과 CORE 사업에 이화여대가 동시에 선정된 것에 특혜가 있지 않은지
- 이화여대의 PRIME 사업 계획서에서는 학생들과 열린 토론을 진행했고 전체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두 차례나 진행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진행된 바는 없다는데 교육부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지
- 이화여대의 학칙개정을 통한 개인에 대한 특혜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이에 관련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의사는 없는지
-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국가대표 출신 승마특기자 합격 관련 의견서를 교육부 요청으로 제출했는데 왜 교육부가 요청했다고 하는 것인지 전후사정 파악해서 보고할 것
- 정 모 양의 입학, 학칙 개정, 학교 생활, 지도교수 교체,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 의혹들에 대하여 이화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와 세계에서 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 배정이 늦어지면 목적에 맞게 쓰기 어려우므로 시정이 필요
-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핵심적인 흐름은 산학협력이나 산업연계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사업의 경우도 획일화된 기준으로 ‘대학의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학에 재정 지원하는 목표는 해당 학교의 경쟁력 강화이니 평가나 선정기준도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야 할 텐데 선정결과를 보니 대학이 총장직선제 시행여부에 따라서 재정지원 대학이 바뀌었고 이는 사업 목표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
- 평가점수 60점 미만으로 자격 미달인 학교에 대하여 대학경쟁력과 상관없는 총장직선제, 정원감축, 자유학기제 실시, 등록금 인하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합산하여 선정하였는데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대학의 경쟁력 강화, 역량 강화에 맞춰서 바꿀 것
- 재정지원사업의 선정대학 평가결과표 및 위원현황 자료 요청했는데 왜 제출 안하는지 지적
- 국회 결과 보고도 없이 교육부 입맛에 맞는 대학에 가점을 주어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와, 교육부가 예산을 무기로 대학을 줄세우고 사업은 감감이로 진행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년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 PRIME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17학년도 입학정원으로 인해 대입을

- 준비하는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
- PRIME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감소인원의 76.7%가 순수학문 분야이고 증가인원의 90.7%가 공학 분야인데 분야별로 증감이 편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사회에서 요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이나 교육부 재정사업에 유리한 학문분야에 치우쳐 대학별로 ‘인문학의 위기’ 등 학문간 조화와 형평의 파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최근 대학의 눈에 띄는 모습은 이공계 중심의 구조개편인데 이로 인한 대학의 급격한 변화 속에 당장의 취업률만 바라보다 지나치게 획일화된다는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순수학문인 인문학과 예체능계열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지적
  - 지난 6월 13일의 미래대학포럼 창립총회에서 있었던 주요 대학 총장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쓴소리(고려대총장, 교육부가 정해준 기간에 (학생을) 뽑는 걸 수시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 모순이다)에 대한 견해는
  - 지난 6월 13일의 미래대학포럼창립총회에서 있었던 주요 대학 총장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쓴소리(서강대총장,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이 6년째 동결되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줄을 서야 하는 실정)에 대한 견해는
  - 최근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같이 재정지원사업이 학내 갈등과 분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 정책방향의 타당성과 ‘노예가 된 상아탑’ 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 ACE사업을 확대·개편한다는 내용의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발표 이후 2014년 CK 사업 신설, 2016년 PRIME 사업 신설하였는데, CK 사업 선정 지원 대학이 다시 PRIME 사업 참여하는 등 빈번한 학사구조개편과 대학이 사업실행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초래했다는 문제점 지적
  - SCK 사업에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관계없는 자유학



기제 여부로 당락의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평가 시 고무줄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정하게 사업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육부에서 올해 초에 만들었던 부정비리 대학 수혜제한 기준의 내용은 무엇인지
- 교육부의 9개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부정비리로 인한 감점으로 선정대학이 탈락대학으로 바뀐 경우는 없지 않은지
- 9개 재정지원사업에서 총 32개의 부정비리대학이 감점을 받고도 선정되었고 이 대학들에게 배정되는 예산이 717억이 넘는다고 지적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하여 연속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을 감액하는데 감액 총액이 7개 대학에서 6억 3800만원밖에 되지 않아 부정비리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0.88%에 불과하다고 지적
- 이화여대의 경우 공금으로 샤넬 백을 사는 부정비리가 발생했음에도 CORE와 PRIME에 신규선정, 고교정상화기여대학사업에서는 감액되지 않았고, ACE 사업에서 5%만 감액되었다고 지적
- 부정비리 대학들에 대한 유의미한 감점, 예산안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페널티 기준을 조정할 것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향을 큰 틀에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늘려 나가되 총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한지
-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대학 구성원 간 합의가 있었는지 교육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 2016년 구조개혁 평가 D+등급 대학인 강남대, 고려대(세종)이 신규 선정되었는데, 신규 선정인 올해는 재정이 미지원 되지만, 내년에는 재정지원 가능함. 2016년 선정시 D, D+ 등급 대학이 참여를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학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학생 수가 적은 이유는 모집학과에 제약이 많고(예체능 관련 학과 부

족), 장애인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입학 규정 (발달장애학생의 수학 능력 평가 곤란)때문이므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대입전형 개선이 필요하며,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대학들이 스스로 방안을 찾아야 할 것

○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조사대상 총 368개 대학중 200개교(54.3%)가 개선요망 등급임을 볼 때,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수준이 매우 낮은데, 장애대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공립대학교의 장기적, 체계적인 지원 대책은
- 장애대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이 입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향후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맞춤 교과목을 개설한다거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준비가 필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낮은 대학은 불이익을 주고, 점수가 우수한 대학에는 예산 지원 및 대학평가 시 가산점을 주어 장애학생 지원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
-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학습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한국체대 김성조 총장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 한국체대 2010년 레슬링 교수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참여자 명단’ 또는 ‘지도자 명단’을 요청해 김○○ 교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지도자 자격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김○○ 교수가 위 명단에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규정과 다르게 지도경력을 인정받고 채용된 것이 효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당시 임용규정대로 처리할 필요

○ 한국체대에 대하여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 신규 채용된 교수

들의 채용과정 전반, 연구윤리 위반 관련 소속 교원들의 연구실적, 교내 산학협력단 운영 전반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

-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관련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2013년 11월 25일부터 11일간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회계감사를 나갔고, 총 27건을 적발해, 법인 측에 처분을 했고, 이 중 5건이 현재도 이행중이며, 특히, 건국대 법인 측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 겸 이사장 등 5명에게 경고조치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건국대법인이 감사결과를 조치하지 않고 있음.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인 화양동 1-37번지, 4-16번지, 4-17번지 토지 2000㎡를 비롯해, 총 33개 필지(638,943㎡)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대학에서 이행되도록 조치할 것
- 강원대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6억원 외 2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부 의견은
- 동국대가 교비로 학교법인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집행한 내역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 동국대 총장 표절과 관련하여 교육부 및 연구재단의 직권 조사 가능 여부
- 지난 7월 여수 한영대학에서 학점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는지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관련
  - 2013.8.경 임원취임승인취소 된 조준상 등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구재단측 인사들이 2016.9.28. 이사회를 구성한 행위의 사립학교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교육부 승인여부
  - 조준상 측의 교육부 승인을 요청한 날이 언제인지, 승인요청에 대한 교육부의 처리방침
  - 조준상 등이 구성한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 총장 등 주요보직자 임

## 명 등 행위의 법률적 효력 여부

- 조준상 등이 한민족학원 이사장 등을 참칭하며 대학과 그 소속 교직원, 임시이사진들에게 통보 등을 하는 행위가 현행 사립학교법, 형법 등 현행법 위반이 아닌지
- 조준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교육부가 인지를 하고, 경위 파악 및 실지조사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교육부의 무대응이 오히려 사학비리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 조준상 측의 관련 제반 법규정을 무시한 도발은 결국 교육부가 정상화 조건으로 조준상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특히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오히려 조준상 같은 비리사학 경영자들이 다시 법인운영권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적 틀로 악용되는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및 현재 정상화를 위한 조준상 동의의 법적 근거 및 효력
- 조준상 측은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은 무효, 따라서 임시이사가 한 행위 모두 무효,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교육부와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이 무효, 불법 행위였는지
- 법인 이사회 부존재 상태에서 임기만료 된 임시이사들이 행한 긴급처리권이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특히 조준상 측은 임시이사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며 애초 교육부와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결정과 이후 직무수행의 정당성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은
- 한민족학원은 조준상 측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외 학교법인이 당연히 해야 할 행위(2013년 감사결과에 따른 소송 수행,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확충 등)도 이사회 부존재로 할 수 없는 바, 법인으로서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위한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2016.10. 현재까지 계속되어 사실상 정상적

인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정상화 보다는 파행에 따른 문제가 지속된다면 교육부 해산명령이 불가피 한 바, 한민족 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한 세부절차, 구체적 일정 및 학생 및 교직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 세계사이버대와 학교법인 정상화와 관련 전 이사장 동의를 정상화 전제조건이 되는 법적 근거 및 사유
- 정상적인 대학 학사 운영을 위해 교직원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향후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절차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 여부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김만균교수 성적조작 등 업무방해 사건 관련

- 경기과기대가 ‘13.11.경 김교수의 성적 조작 문제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
- 법원 판결 전에 자체조사를 거쳐 학과장 보직해임 등의 조치 절차
- 당시 한영수 총장이 탄원 내용을 묵인 한 것은 아닌지
-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음”이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학교의 은폐 정황을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지
- 김교수의 소프트웨어 구입비 횡령 의혹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없이 “횡령사실이 없었다.” 라고 하는 바, 학교에서 실제 감사를 했는지, 감사에서 적출된 사실이 무엇인지
- 김교수가 강의 선정이나 강의교수 임명 등 권한을 갖고 탄원을 제출한 교수 학생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동인과 학교 당국의 탄원인들에 대하여 재임용을 이유로 공판 진술 위증 교사 의혹도 있는 바, 이를 포함한 경기과학대의 사건 은폐 및 김 교수 비호 의혹에 대하여 교육부는 그 진상 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 경기과기대를 설치·운영하는 산업기술대와 그 학교법인 관련하여 교육부 공직자가 법인 이사로 선임된 배경, 교육부 공직자가 특정 사학 법인에 이사로 선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기본 및 수익재산 출연 내역, 경기과기대 설립 인허가 신청

## 서류 사본

-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명지대학교 등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되어 현재 징역7년 복역 중임. 유영구 전 이사장의 동생이자 명지대 총장인 유병진의 결재 없이 교비가 지출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장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유병진 총장의 해임 요구 및 향후 고발 조치 계획이 있는지
- 2015년 명지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에서 (주)명지병원장례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인데도 명지병원장례식장의 운영 수익을 취득한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이를 회수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어떠한 징계나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와 명지학원의 기본자산 손실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명지학원 서용범 부총장의 차명계좌 운용에 대한 민원( '16.6.)에 대하여 교육부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와 부총장 징계·고발 조치 계획이 있는지
-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와 일방적 폐과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농성한 학생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소함. 또한, 총장실에서 농성한 8개 학과 학생대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학의 안정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생 고소 및 징계에 대한 철회 내지는 완화를 검토해 줄 수 있는지 교육부와 대학의 협의를 바람
- 2015년 4월 수원여대 이재혁 전 총장의 횡령액 변제를 위해 교내구성원 및 동문회에 모금운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민원 및 진정에 대한 조사여부 및 조치사항은
- 수원여대 교직원 14명 집단징계해고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이로 인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낭비(각종 법률비용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초래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해 교육부의 의견은

- 수원여대 교직원 14명 집단징계해고 관련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및 법인 이사진 등에 책임을 묻거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있는지
- 2010년 교육부 민원 실태 조사 관련, 결과 처분 중 이재혁 전 총장의 6개월 무단결근 기간에 부당 지급된 급여 26,133,330원의 회수처분 이행여부
- 부산대병원 감사결과 관련자 징계를 비롯한 향후 조치 계획 보고 필요
- 경북대병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향후 조치 계획 보고 필요

### <평생 · 직업교육 관련>

- 현재 실시 중인 일학습병행제가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상승한다고 홍보하기보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취업자의 과반수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학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 대상 학교에서 빼고 취업 기반이 열악하지만 취업 열 의가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것
- 직업계고에 대한 진학 및 고졸인력 수급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공공기관에서의 고졸 충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이고, 기술직 9급 공무원에 대한 NCS 기반 채용 계획을 세워서 고교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
- NCS 교과 교육과정 전면도입 학년인 2018년에 맞추어 전문교과 표시 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 전문성 확보방안은 어떠한지
- 300여개가 넘는 NCS 수행기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관련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NCS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 도제식 교육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성과분석 후 연차적으로 추가하고, 참여기업 발굴에 도움을 주는 환경 구축을 하는 것은 어떠한지
- 직업계고 입학정원 미달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의 고졸채용 확대정책 및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시행은 어떠한지
- 지난 8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료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어왔던 교육부 업무지침은 무력화되었음. 따라서 의료행위 관련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로 인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 의료행위관련 교육 중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지, 실교육과정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한 대책은
- 성인문해교육과 관련된 진행사항과 국가지원에 대한 내용과 예산확보방안
-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대학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교 등 인프라를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관련
  -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추진과정에서 졸속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발생했고, 오히려 평생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게 한 측면이 있는데, 동 사업을 제대로 정비해 추진할 필요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사이버대학 등 유사한 과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 2015년 12월 30일 발표 이후 5개월간 졸속추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는



- 당초 교육부는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원대학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된 기간보다 상당수 늦춰진 5월에 대학이 선정되었고, 이어 7월에는 추가공모까지 한 사유
- 이화여대사태 이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현재 9개 대학의 준비상황은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교육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성인들에게 대학 문을 개방하는 대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교육부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교수,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과 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평생교육 단과대학 문제로 이화여대 학내에 경찰이 진입했는데 알고 있는지
-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치에 거부운동이 벌어졌던 이화여대 사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은 결국 대학 9곳 중 7곳이 미달이었으므로,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사업이 아닌지
- 무리해서 진행시킨 이번 사업에서 대학 9곳 중 7곳이 미달되는 등 수요 예측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시며, 평단사업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된 자료가 있는지
- 졸속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정책 추진으로 벌어진 이번 이화여대, 동국대 등 사태에 대해서 정책책임자로서 사과 및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국사편찬위원회】

- 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역사 바로알기 대회’를 열었는지
- 역사 교과서 편수실은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

로 역사학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라 지적

- 지난해 역사 교과서 편수실 인사요건이 개정되면서 역사 교과서 편수실장만 서기관급 일반공무원을 보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 편수실장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청와대 교육수석이나 교육부와 편수 관련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회차별 합격률 격차가 크니 격차를 해소할 것

###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국립특수교육원이 해당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설계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실습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국립특수교육원의 향후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지 협의할 것
-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지도·그림이 삭제된 역사교과서가 배포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 시각장애인 용 역사교과서에 지도·그림을 넣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7일 만에 점역교과서가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림과 지도가 있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내년에 나올 국정 교과서 19종도 엑스비전테크놀로지에서도 점역하는 것인지
- 엑스비전테크놀로지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서의 점역에 손이 많이 가고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자동점역시스템으로 일주일 만에 점역이 완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최근 5년간 소청심사 신청한 사람 중 36.9%가 징계가 낮아지고 있어 사실상 자기 식구 봐주기 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지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교사로 구성되어 자기 식구 봐주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

### 【국립국제연구원】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유학 지원 사업 대상자 407명 중 취업자는 116명에 그친다고 지적
- 국비유학 지원 사업으로 1인당 24억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사업 대상자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것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원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81%, 여성이 2%밖에 되지 않음. 이에 대한 검토의견과 개선이 시급한 것 아닌지

## 나. 시·도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영양교사 배치 확대,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함
- 9시 등교제와 관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 교육감 선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국정역사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은지
- 국정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을 기존의 편향성 문제가 있던 인사들로 구성한 이유 및 보조교재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교육청 평가 최하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
- 교육감이 출판기념회를 위하여 초청문자와 초청장을 보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 것에 대한 논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문제
- 교육청은 9월 13일 검찰로부터 조 비서실장이 수사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의원면직(사표수리) 처리를 했다가(9.26.결재) 9월 28일 언론을 통해 조 비서실장의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회피 내지 교육감에게로 수사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사전 차단 조치는 아니었는지, 이에 연루된 해당 교육청 사업과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 감사관이 음주 상태로 공립학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되는 등 교육청 청렴성에 문제가 있음
-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의 사학법인(사립학교) 또는 유관협회에 재취업하고 있음

- 미복직한 노조전임자 9명에 대한 직권면직 및 노조사무실 퇴거요청 등을 한 이유는
-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이유는
- 동구학원 등 교육청 처분 불복에 따른 대책 및 사학이 행정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 사립학교 감사 시정요구 미이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저소득층 급식비의 실질적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저소득층에 대한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사업비 등이 감소하는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은
- 청계재단의 수입 중 약 30%만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여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향후 장학금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교사들의 의무연수, 직무연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전문성과 유지를 위하여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연수비 지원도 늘려야 함
- 학교정화구역 경계 측정시 영업주가 거리를 측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교육청에서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생활기록부 조작에 대해 가벼운 처분을 하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징계 관행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유치원 교사의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검증된 유치원에 한하여 특별활동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 공진초 이적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2013년에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공향고 이전이 연기되면 마곡단지 내 12,600세대에 달하는 세대의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수험을 앞둔 학생과 2018년 공향고 진학예정 중학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매각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등, 공향고 이전을 조기에 착수할 것
- 혁신학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치성향 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혁신학교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혁신학교의 양적성장 집중으로 질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지적에 따른 혁신학교 안착 대책과 과중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교사 처우개선 방안,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확실한 체계 구축 방안 필요
- 학교 업무용 S/W를 본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일괄구매 한 방식에 대한 문제점
- 시·도교육청별로 급식단가가 차이가 심한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급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이 사무분장규칙으로 교육장에게 일반고교의 지도·감독사무를 맡긴 것이 적법한지
- 교육청의 통합구매·공동구매 입찰로 장애인생산시설은 판매기회 조차 상실하고 있음
- 스쿨넷 사업과 관련하여 일선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94.8억원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

- 교원은 여성이 많은 반면 교장이나 장학관은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이 높는데, 여성 교장이나 장학관의 임용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수원에게 교원연수를 위탁한 것은 전교조 일감 몰아주기 및 정치 편향성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례 재정의 필요성
-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및 석면제거가 저조하고 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필요
- 하나고 감사 처분 요구 이행 사항
- 자사고와 외고의 학교법인이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교복주관구매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낙찰된 업체가 아닌 타 업체 교목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 교복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교복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479명에 불과하므로 남녀 교사의 성비 균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교사로 특채된 경우가 있는지, 없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사회복지요원이 지적장애학생을 성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학교에서의 초등대응이 미흡하였고 교육청에서도 성추행 사건으로만 의심하는 등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평교사 출신이 내부형 교장공무제로 교장이 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학교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 문제점 및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및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학교의 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편차도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단순 반복 숙제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시기 상조이지 않은지
- 교육청 차원에서 체육특기생 및 체육입시생을 대상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도핑교육시스템 마련 필요
- 서울체고 태권도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의혹에 대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 학생선수들이 금지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사립초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
-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매트나 카펫 트랙 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녹색어머니회에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 교권침해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고졸 채용 확대 및 고졸 출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자사고 입학정원의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나 차상위 계층 자녀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16개의 자사고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 자사고와 자기소개서 제출시점을 재협의 하여 입시전형절차를 다시 만드는 방법 추진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서연중학교 부지 교환 사유와 향후 계획
-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조와 관련하여 사교육참여 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에 대한 입장
-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시범 운영시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의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 지역의 동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만덕고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교육지구를 계획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로 직선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의 지난 선거과정과 선거비용지출액, 뇌물수수 혐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 효과와 전문가 검증 을 거치지 않고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시책 남발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사학법인(사립학교) 재취업에 대한 대책은
-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 문제점 및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
- 학교의 최저 급식 단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는 흡연공간에 대한 점검 필요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

와 더불어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는지,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만 저소득층 학생들만 별도 장소에서 소집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될 필요가 있음

- 부적절한 계기 교육으로 인한 교사 징계 현황
- 영양교사 배치 비율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영양사 근무 환경 개선 및 영양교사에 대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설치를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유치원 교사의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특목고 학생들의 해외 체험학습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은지
-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교육희망만들기 멘토사업’의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생활기록부 조작에 대해 가벼운 처분을 하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징계 관행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검증된 유치원에 한하여 특별활동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
- 교원은 여성이 많은 반면 교장이나 장학관은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이 높는데, 여성 교장이나 장학관의 임용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 부산은 식당에서 배식하는 비율이 전국 최저이고, 교실에서 급식할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급식시설의 예산 우선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생 탈의실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
-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매트나 카펫 트랙 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부산 소재 특성화고 일부 학생들이 노동 쟁의 중인 파업현장에 불법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바 있는지, 파견 당시 근로표준협약서가 작성했는지 여부
- 특성화고 학생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과 무관한 일터에서 사망, 자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학생 취업의 질을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취업률에 따른 차등성과지원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사립초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
- 부산시교육청 건물 내에 NIES서버가 위치하고 있는데, 교육청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버 훼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학교의 수도 요금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가남초등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에는 운동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교권침해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교육청 내 고졸 출신을 위한 업무 개발 등 고졸채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부산시교육청에서 단식 농성 중인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 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비서실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금원을 받아 현재 수사 중인데 교육청 부패 문제가 심각함
- 교육감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해도 본인이 임명한 고위 간부가 저지른 뇌물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남은 2년간의 임기동안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향후 계획

- 작년 10월 교육감과 직원 6명이 해외를 다녀왔는데, 그 경비를 복지 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였음
-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심각한데 직선제 폐지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의 지난 선거과정과 선거비용지출액, 뇌물수수 혐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 효과와 전문가 검증 을 거치지 않고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시책 남발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아주 저조한데 그 원인은
-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당초 9월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어떤 재원으로 편성하였는지
- 누리과정 도입이 발표될 2011년 당시에 시·도교육감들이 동의하였고, 교부금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인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 일선교육청은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위헌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 같은 공식적 이의 제기도 없었고, 지난 5월 감사원 결과 편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 문제점 및 교육감이 생각하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 우레탄 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소홀함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캐트나 카펫 트랙 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학생의 수면권과 조식권 보장, 학습 부담 완화라는 취지로 시행한 등교시간 정상화의 효과가 있는지, 시행 전 의견수렴은 충분히 거쳤는지
- 교육비 부담 경감 공약의 이행율이 저조한 사유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줄지 않는 이유 및 향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 필요
- 전교조 지부의 사무실 불법점유 상태에 대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조치 시행과 그 결과
- 교원의 생활기록부 조작 비위에 대한 미온적인 징계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검증된 유치원에 한하여 특별활동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학교 재난 안전 교육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나 일선 시도교육청의 지진대비 훈련 등이 여전히 형식적임
- 학교의 수도 요금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이 높지 않음
-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 감소하고 있음
- 교사들의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적발된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음
-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실시 현황

- 수석교사 신규 미임용 사유 및 활성화 방안
- 2020년까지 초등학교 9교를 포함해 총 13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통폐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
-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
-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 선발 및 배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등 처우개선 필요
- 내부형 공모교 중 15% 이내만 평교사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 내부형 공모형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선발된 7명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인데, 전교조 출신에 대한 특혜 아닌지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침 마련하고,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인천교육청의 경우 농어촌학교 등 교육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1.48점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
- 교권 침해로 교사들 병가, 전보, 휴직 신청 급증 교권침해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졸 채용 확대 및 고졸 출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불량교복에 대하여 신고나 수사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는데, ‘스쿨룩스’ 교복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신고나 수사 등을 하지 않는 이유와 교육비 지원 항목에 교복비를 추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 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의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안전연수와 관련한 교직원 전체 이수율이 낮은 상황인데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급식 운영 실태가 어떠한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 수의 계약방지, 관리감동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개발 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진행 정도 및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 자유학기제에서 사용된 교재에 복한 얘기가 없고 군비 축소 필요성만을 담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누리과정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였는지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 2016년도 경상경비가 증가한 이유는
-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의 지난 선거과정과 선거비용지출액, 뇌물수수 혐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 효과와 전문가 검증 을 거치지 않고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시책 남발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전교조 광주지부에 퇴거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와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낭암학원에서의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사장과 법인 관계자가 구속 기소되었는데, 향후 사학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은
- 사립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입시를 앞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신속한 대처에 미흡했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견책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징계임
- 급식비 미납율이 높은 편인데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감액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 학교의 수도 요금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검증된 유치원에 한하여 특별활동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 최근 3년간 계기교육 관련 징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
- 교원은 여성이 많은 반면 교장이나 장학관은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이 높는데, 여성 교장이나 장학관의 임용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 통학버스에서 원아가 방치되는 사건이 재발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모 수석교사가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수석교사의 재임용 심사 및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성화고 학생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과 무관한 일터에서 사망, 자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학생 취업의 질을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취업률에 따른 차등성과지원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매트나 카펫 트랙 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 교권침해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 교육청 내 고졸 출신을 위한 업무 개발 등 고졸채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평교사 출신이 교장이 된 사례와 긍정적인 변화 내용은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침 마련하고,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진보교육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학교주변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학교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 및 구청과의 협의 내용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대전광역시교육청】

- 예지중·고등학교 이사의 학교발전기금 부당 강요, 횡령 등으로 인한 학교 비리 문제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
-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심각한데 직선제 폐지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의 지난 선거과정과 선거비용지출액, 뇌물수수 혐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 효과와 전문가 검증 을 거치지 않고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시책 남발로 교원, 학

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의 학교 급식 부담 비율이 약 40%로 전국 최저 수준이므로 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담 비율에 대한 최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공문 발송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8% 증가함
- 서울고법 판결 이후 전교조 대전지부에 5회에 걸쳐 퇴거요청 독촉 공문을 보낸 이유 및 향후 계획, 불법단체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온수제조기 특성상 중금속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 타 지역에 비하여 성교육 수업 시수가 낮고, 성폭력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 내진 보강 집행계획 예산이 전국 최하위 5곳 중 하나이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세부계획 마련 필요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
-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캐트나 카펫 트랙 등

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부분인 14개 지역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대전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협약내용도 평균수준 이하임
- 화상상담시스템 시범 운영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4천 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에 비해 현재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특성화고 학생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과 무관한 일터에서 사망, 자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학생 취업의 질을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취업률에 따른 차등성과지원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내부형 공모교 중 15% 이내만 평교사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침 마련하고,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대전지역 일부 학교에서 각종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학교별 급식소 위생

상태 점점, 급식안전 매뉴얼 제작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 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수도 요금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체납문제가 심각하고 대전은 약 96억 중 12억만 납부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특수학급의 과밀 정도가 심각하므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울산광역시교육청】

- 취임 후 울산교육의 발전성과와 향후계획
- 교육지원청의 경상경비가 감소되는 반면에 본청의 경우는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방안
-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영양교사 배치 비율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영양사 근무 환경 개선 및 영양교사에 대한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 문제점 및 교육감이 생각하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공문 발송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의 지난 선거과정과 선거비용지출액, 뇌물수수

협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 효과와 전문가 검증  
을 거치지 않고 ‘표’를 의식한 복지포퐁리즘 시책 남발로 교원, 학  
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가 있음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검  
증된 유치원에 한하여 특별활동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  
책이 필요
- 교원은 여성이 많은 반면 교장이나 장학관은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  
이 높는데, 여성 교장이나 장학관의 임용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온수제조기 특성상 중금속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먹는 물 기  
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  
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캐트나 카펫 트랙 등  
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  
가 필요함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
-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예산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점검 및 대책 방안 필요
- 평교사 출신 교장이 없는 이유와 내부형 공모교 중 15% 이내만 평교사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지진 발생시 학생대피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가 없음
- 지진 발생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신설시 기존 학교 통폐합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학교의 수도 요금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교권침해에 따른 피해교사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 교육청 내 고졸 출신을 위한 업무 개발 등 고졸채용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학교 급식비 단가가 교육청 별로 차이가 많으므로 최저 급식 단가 기준 설정하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 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행복기숙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교 학교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시설의 조속한 정리 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여부가 드러나게 된 계기 및 징계 강화 방안
-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어리이집도 교육기관에 해당되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 초등학교 부지 매각 비용을 누리과정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 문제점 및 교육감이 생각하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 울산, 대구교육청 순으로 고교생 무상급식 지원율이 낮지만 학교급식비 미납율도 울산, 대구 순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전면무상급식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적절한 계기 교육으로 인한 교사 징계 현황

-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로 직선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공무직 정기상여금을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교육청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교육공무직과의 단체교섭을 4년 동안 얼마나 진행하였는지
-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방학 중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14년부터 전문상담사의 자격요건을 석사 이상으로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 등 처우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구시 교육청의 슬로건이 ‘대한민국 교육수도’ 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사 금품 수수, 교장의 금품수수, 교사 성추행, 자살 학생 증가하고 있고, 반공 역사 교육은 시대에 맞지 않음
- 학교의 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대한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사업비 등이 감소하는 있는 이유와 그 대책은
-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무 연수 중 하나인 사격 과목의 목표를 학교부적응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 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캐트나 카펫 트랙 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1,006억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영양교사 배치비율 확대 및 성과지표 마련 등에 대한 견해는
- 학교급식비리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사립학교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검증된 유치원에 한하여 특별활동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지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
- 교원은 여성이 많은 반면 교장이나 장학관은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이 높는데, 여성 교장이나 장학관의 임용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례 재정의 필요성
-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및 석면제거가 저조
-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문제가 심각함
- 평교사 출신 공모 교장의 확대 필요성
-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필요성 및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련 공동 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을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지진 발생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

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한 견해는
- 교권침해에 따른 피해교사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 고졸 채용 확대 및 고졸 출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 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해 통학지원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왜 자가 통학 여부만으로 입학에 제한하는지
-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장애인 특수학교에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 제정 필요
- 특수교사 확보 및 특수교사 연수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합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지침 마련하는 한편 장애 인식개선 방법의 다양화 및 적용 확대할 것
- 지금 김일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교육감 저서 ‘416교육체계’라는 책을 보면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라는 파트에 문화적 다양성 포용 교육 강화에 “북한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이해가 중요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포용할 수 있는 상대라고 볼 수 있는지

- 교육감 관사 신축 계획을 재고할 의향이 있는지
- 이재정 교육감 취임 이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혁신공감학교'를 지정하여 100% 가까운 학교가 지정됐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작 '혁신공감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교명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지
- 학교 속의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일본 원산 수종을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 평교사를 내부형 공모제 15%로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장공모제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 교장공모제에 대한 오해 해소와 개선이 필요하며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 및 진행상황, 진보교육감, 전교조 코드인사라는 오해에 대한 견해, 교장공모제의 긍정적인 내용,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하는지 여부, 교장공모제 실시학교에 대한 평가 및 홍보 필요성 등 교장공모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 교육부가 수석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수석교사 제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난 2년 동안 수석교사를 전혀 신규임용하지 않고 있는데 수석교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 경기도 내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과밀학급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교육부의 무리한 학교신설 억제로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
- 학생들의 신체능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 야외 운동장에서의 체육수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경기도내 부일초, 이호중, 중원중, 한국애니메이션고의 경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저소득층 지원이나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 학교폭력 대책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 학교현장에서 폭력, 왕따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세부적인 인성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
-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립 초등학교에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다질 필요
-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 부담경감과 관련해 8.51점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되면서 교내 동아리활동이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 보면 동아리수가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예산도 특목고와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가 현격히 떨어지고 일반고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가 불리하게 진학에 작용되면 잘못된 것이라 지적
- 혁신학교 관련
  - 혁신학교의 수업혁신 성과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보고, 전체적인 수업방식에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은 있는지
  - 올해 기준 현재 경기도 내 415개교의 혁신학교에 약 118억원의 예산을 일반학교 보다 더 투입하고 있음. 혁신학교에 입학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는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 혁신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비해 혼자 공부하는 '자기 학습시간'이 더 적었으며, 시험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감님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 혁신학교가 다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지향한다면서 기본적인 학업성취도조차 챙기지 못하는 교육이 다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인지
-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 부실의 원인, 혁신학교에 대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불만과 전교조 등 정치성향 교사들의 활동부대라는 등의 비판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국가교육과정과의 균형과 조화, 혁신학교 지원금 사용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야간자율 학습

-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상대평가 방식의 대학입시라는 현실에서 대안도 없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결정할 때 면밀한 교육적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비교육적 행위이자 전시행정성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 학교장 재량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인사권을 가진 교육청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지
- 교육감의 독단에 의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철회되고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 야간자율학습 폐지의 자율권 침해, 사교육 의존 확대, 학부모 반대 등의 문제점과 예비대학 교육과정의 실효성이 있는지
- 경기도에서 야자를 전부 폐지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지. 다양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무조건 모든 학교에서 폐지해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관리형 독서실, 사교육비 등 걱정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잘 살펴주기 바람



-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급식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학교급식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 부정급식 관련자는 시장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학교급식 과정에 부정과 비리가 계속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 경기도의 경우 급식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시 위생안전점검 강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 등 향후계획
- 전국 학교들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많은데 그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많으니 조속히 예산확보 할 것
-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석면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학교석면제거 계획과 예산수립 대책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공개 조항이 없고 유해성 조사도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조례 개정 추진 계획
- 시도 교육청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레탄 트랙 문제임. 시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는 흙으로 운동장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임. 대안은 전문가의 성분검사가 끝난 탄성매트 또는 카펫트랙을 설치하는 것임. 이것을 정부가 신속하게 검토하여 진행하고, 교육감도 신중하게 선택해주길 바람
- 학부모들의 불안해소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시 각 학교 현장의 대응이 중요하므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 실시 학교수를 파악하고 학교 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예방조치를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지만 최근 5년간 보건교사 배치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및 향후 대책
- 경기도 지역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취약함을 인지하고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보완조치를 철저히 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
- 교사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는지
-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죄의식 부재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라는 직업의식 부재에 따른 결과, 음주운전 징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감의 대책
- 성희롱, 성매매 교원에 대한 경징계 일변도의 징계처분 문제 및 성비위 교원에 대한 배제 징계 중심의 징계 강화할 것
-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위한 방안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해서 경기도청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미전입액 감소 계획을 마련했는지
- 기초학력보장 사업 집행비 대폭 축소에 관해 시정할 것
-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홍보 시 재학생 동원 및 잦은 교사 출장의 문제가 있는데 홍보예산 집행 기준과 학생 취업·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학생 자살에 대한 대책,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현황과 그 중 2차 조치를 받지 못한 학생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필요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 마련이 필요
-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마련 할 것
- 누리과정 관련
  -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고,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

인 논의들이 교육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유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정치공세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 추정가용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교육재정이 어려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억 원짜리 교육감 전용 관사 신축 강행하고 불필요한 해외 연수비용을 지출해 예산 낭비하며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대해 입장이 어떠한지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들이 혼란스럽고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교육부에서는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현행 시행령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 무상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항목에서 분리해 의무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별도의 항목을 편성하고, 기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역교육현안이나 운영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 유아교육법도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으로 존중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누리과정 교육비는 내년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

- 상위법에 위법한 시행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기에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지원을 교육청에 강요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대해 보완이 필요
- 재정부족으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못하였다고 하나 추후 교부금이 늘어날 예정이고 앞으로 학생 수도 감소하기에 소요예산도 절감될 것이라 지적
- 교육청에서는 재정문제, 법적 문제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교육으로 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처리하고자 더욱 노력할 필요
- 추계가 잘못되었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부에 전달하였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나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교육청에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
- 누리과정사업 초기 교육감들이 국채 발행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하여 이로 인한 부채 누적으로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
- 최근 3년간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감사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민주시민 교과서의 내용이 계층갈등을 부추기고, 시장경제를 매도하는 내용 일색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보은인사의 문제점(교육전문직원 선발절차, 해당 장학관의 임용시 기준, 정차, 검증방식, 보은인사 예방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위장전입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실효성 있는 위장전입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위장전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

- 9시 등교의 효과성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전후 비교 등 정책효과성 근거자료와 시행 전후로 여론 수렴을 한 결과는 어떠한지
- 9시 등교 시 맞벌이 부부의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마련 할 것
- 지역별로 수도요금은 다르지만 교육기관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 2007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L)로 지어진 학교 관련 시설의 매년 임대료와 이자 및 운영비 등이 사업체에 일정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협약서에는 금리상향 등 외부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협약서 조정 등 학교 BTL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절감 논의가 필요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광역학구제(편입학 편의 지원 등)등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교육프로그램 질을 저하시키는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제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 미준수 업체에 대해 제재할 것
- 2014년과 2015년 자율동아리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마련 할 것
- ‘일부 학원가 학생, 학부모 대상 고액 자율동아리 컨설팅’ 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운영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대책
- 지역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가 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교육부에 학생 수를 감안한 배분방식을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지
- 경기도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기간제 교원 채용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타 지역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2017년도 초등학교 수영교육 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
-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며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수영교육에 신경써주길 요청
- 학교 밖 돌봄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 29,037명에게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가 2016.1.4.에 시행된 바 있는데, 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유해차단서비스 비교’의 ‘개선’방안의 관련 업체를 2개로 표기했으나, 확인결과 1개 업체로 드러났음. 기존 1개 업체에 특혜 제공을 숨기기 위해, 2개 업체로 조작하면서 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
-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의 사무담당은 전문성이 있는 전산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조정 필요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의 2016년 9월 현재 정보공개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
- 경기도북부교육청에서는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사업비로 약 58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60%는 이행되고 있지 않음, 해당사업의 미진행 부분에 대한 향후 사업집행계획과 향후 세부추진 절차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것

###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지역에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학생 수 감소로 규모가 작은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폐합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인지

- 작은학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얼마이고 작은학교 사업 활성화 연구에 대하여 입장이 어떠한지
- 교육부가 권고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델학교의 학생 수 증가와 학부모 만족도 상승 이유와 2018년 이후 모델학교의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 폐교에 기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폐교에 대한 해결책과 폐교 임대료 미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강원진로교육원을 타 교육청 혹은 외부교육기관에 대관료를 받고 일부 수익을 내는 등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견해가 어떠한지
-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열악한 농어촌 교직원 관사 여건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왜곡된 인사는 현장 교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을 초래하는데 교육전문직 선발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 교명 변경 시 교육기관, 지역주민, 동문, 교육가족, 학생, 교사 등 함께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 학교수목을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하고 필요하다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견해가 어떠한지
-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누리과정 예산 관련
  -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하고 있지 않는데 보조교재 개발에는

투입할 예산이 있는지

- 누리과정 지원 근거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제기 여부와 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누리과정 지원 근거 시행령이 위법임을 전제로 현재 법령상 의무 사항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법령상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건상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매년 500억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는데 이 불용액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교육부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 보건교사 부족 관련

-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 6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많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소규모학교 학생들은 보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보건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학교의 보건위생 관리 능력이 매우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 교권 침해 관련

- 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등과 같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및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3년간 감사를 1회도 받지 않은 자사고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



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

- 최근 5년간 학교 신·개축사업이 많고, 50억 이상 학교시설공사 10건 중 5건이 학교 이전 관련 공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교육기관의 수도요금 관련하여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강원도교육청의 경상경비 상승 이유가 무엇인지
- 지자체 법정전입금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어떠한지
-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비공개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등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
- 전문상담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비중이 크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확대배치를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은 어떠한지
- 전교조의 공유재산 불법점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할 것
- 교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성 비위 교원의 향후 징계를 강화할 것
- 초등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인력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계획을 마련할 것
- 주요공약인 비정규직 호봉제를 위한 계획이 어떠한지
-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전환비율이 낮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 방과후교실 행정사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지, 방과후행정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의향이 있는지, 방과후 행정사의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있다면 근무시간을 최소한 주20시간으로 변경할 계획 있는지

-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
-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국내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건물의 내진보강 계획과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계획은 어떠한지
-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 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며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 수영교육에 신경써주시기를 요청

### 【충청북도교육청】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재검토 및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충북은 10곳 중 5곳이 2016년 대비 2020년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교육여건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학교 속 일제강점기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심었던 ‘일본 향나무(가이즈타 향나무)’의 교목 지정을 해제하고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

목으로 정한 학교는 우리 나무로 교체하고 필요하면 관리 지원 조례 개정할 것

- 교명은 하나의 랜드마크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변경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동문, 지역 주민, 인근 학교장, 기관·단체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교장공모제 운영 중 평교사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위배 되는 것인지 그리고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현장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 필요
- 5월에 섬에 근무하는 여교사가 마을주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그 후 추경예산 편성 때 통합관사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웠으니 조속히 통합관사가 설치될 필요
-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 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2014년 이후 충북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이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회 운영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에 과도하게 ‘학부모 직업, 영어유치원 경력’ 등을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 필요
-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진로교육과 고교 직업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로교육이 선진국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고 성과는 무엇인지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평생교육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증가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좀 더 내실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초등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전문상담을 해줄 전문상담 교사 현황 파악하고 증원대책 마련할 것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에 대한 재심청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

는데 자치위원회 구성, 전문성 담보 문제, 형식적 교육 등에 대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

- 성 비위 교원의 경징계 비중이 높는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 교원이 다시는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점검할 것
- 지난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및 법률적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민간투자 초·중등학교 시설이 12조가 넘고 평균 수익률이 교육청별로 다른데 이는 협약의 문제로 협약서에 가산율이 고정되어 있고 비밀유지 조항도 문제임. 5년마다 1번씩 재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의 내용 및 수익률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시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의 시급한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하여 제출할 것
- 누리과정 예산 편성여부 보다는 학교의 현실을 돌아보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내국세 중 교육세 비율을 조정하여 의무교육과정 교부금 항목을 신설하려고 하는 누리과정 법안 발의의 유효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각 해당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입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법정전입금 전입시기 명시가 필요한 듯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충북 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투자현황이 타 지역에 비해 낮는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대책을 마련할 것

-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충북교육청의 경우 청렴도 및 향상도 부분에서 1.00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무기계약전환대상자들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2015년 4월 당시 무기계약전환대상자가 2016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
- 무기계약전환대상자들은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
-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 당직기사 근로여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당직 용역비에서 직접인건비 비중이 80%이상 되도록 권고하였는데 당직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할 것
-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경주 지진을 교훈삼아 교육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선진국 수준의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실제적인 재난을 가정한 철저한 훈련 등을 실시 필요
- 충북도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재난 대응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 대책 마련할 것
- 학교시설 내진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석면제거 계획 수립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을 고민할 것
- 우레탄 트랙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흡운동장 이외 탄성매트나 카펫트랙 등 대안 마련할 필요
- 친환경운동장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있으나 조사결과 공개 및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조례 개정 추진 검토할 것
- 안전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도록 관심을 가질 것
- 충북교육청의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 실시 학교 수

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방안 마련

- 최근 4년 전국 초중고 식중독 발생인원이 11,000여명으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 신속한 완료가 필요
- 생존수영 수업시수가 10시간인데 내년에는 20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

### 【전라북도교육청】

- 지역의 특수성,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인다면 서 오히려 교육여건 악화시킨 모순된 상황임. 농산어촌 지역은 현실에 맞게 종합적인 판단 후 정책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 심화 및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 학생수가 10년 전에 비해 22%나 감소했는데도 교육감의 개인적 신념 때문에 심각한 재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와도 되는지
- 지역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갈등과 대립, 복지 포퓰리즘적 시책 남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 최근 10년간 교명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잦은 교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속의 일제 잔재인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

정한 학교의 교목 교체계획과 우리나라 고유 수종교체에 필요한 관리 기준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공모형 교장 중 평교사 출신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떠한지
- 혁신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일반학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침해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15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혁신학교에서 고2와 중3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전체학교 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것이 혁신학교의 저성과를 반증하고 있지 않는지
-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 사이에서는 성과가 있는 교육 메커니즘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겠으나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불만과 전교조 등 정치성향 교사들의 활동무대 등의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게임과학고에 대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변화에 걸 맞는 쇄신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2개교는 2015년에 자사고 재지정이 된 학교인데 자사고 재지정시 회계부정 등의 감사결과가 반영 됐는지
-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관련
  - 4개 교육청(전북, 광주, 강원, 세종)이 개발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제작 진행과 완료 계획은 어떠한지
  - 국정 역사교과서가 아직 개발 중이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보조교재는 무슨 근거로 만들고 있으며, 공개되지도 않은 국정교과서에 보조교재가 왜 필요한지
  - 보조교재 개발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얼마이고,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달리 조속히 확보하였는데 가능한지
  - 보조교재 집필진은 기존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었던 검정교과서 집

필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었던 인사를  
집필진으로 구성하였는지

○ 누리과정 예산 관련

- 다른 지역과 달리 아직까지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학부  
모님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 같은  
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 누리과정 지원 근거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성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상위법 위반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 하지 않은 이유가 무  
엇이며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 시행령이 위법임을 전제로 현행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학교에만 지원하  
도록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근  
거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근거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법령상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건상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는  
데도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지난 5년간('11~'15) 4,000억원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고 작년만 해  
도 795억원이 불용되어 충분히 누리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는데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지난 9.29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그 요지가 무엇인지
- 감사원 감사결과 누리과정 활용가능 재원 상황은 전액편성 가능한  
상태로 분석되었고 1.9조원 규모의 추경까지 이뤄진 상태로 재정여  
건이 개선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현재 국회에는 20.27%의 교부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내용으로 총 13건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 방안인지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은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
-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 경기, 강원 등 3개 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 장학관(교육연구관)을 임용 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자격 검증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기관 중 교육청이 많음.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 정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지
- 특수교육의 확충과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제고에 대한 공약사항대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의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생활지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중앙정부에 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및 충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라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12조원이 넘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자체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입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전입금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해당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입 비율을 낮출 계획은 있는지
- 2017년도 저소득층 학비지원금이 6%정도 감소하여 편성하였는데 교육재정이 어떤 상황인지
- 지역별 수도요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임.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함과 교육청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해보고 지자체와의 협력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에도 각 전교조지부에 퇴거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 종합국감 전까지 불법단체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조치를 마련할 것
- 교사 교권 침해 사례 증가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과 피해교사에 대한 내실 있는 치유지원 대책마련 할 것
- 성 비위 교사의 성희롱, 강제추행, 성매매에 대해서도 배제징계 등 중징계 처벌을 원칙으로 관련 징계양정기준의 강화가 필요
- 성 비위 문제교원들이 교단에 다시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 내진성능 확보한 학교건물 비율이 낮은 상황인데 학교건물 내진보강과 학교석면제거 계획수립과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내진 성능 확보 계획과 지반구조 및 위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악하고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관련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레탄 운동장 유해성을 조사,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여부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교육청의 경우 유해성 조사를 하고 공개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 건강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각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 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그 수업이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할 것
-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에서 14.50점으로 전국 최저치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어가는 만큼 초등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전문상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증원대책 마련할 것
-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고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재재할 필요
- 돌봄교실 관련
  - 돌봄교실의 본래 목적대로 초등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전담 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선 대책과 계획이 필요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금·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데 왜 돌봄전담사들은 초단시간 계약을 하고 있는지
  - 고용마저 불안한 초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들이 학교회계직원 이 받는 각종 수당지급에서도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전체 돌봄교실의 50% 정도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승계나 처우조건에 관한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간급의 저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해당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고용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라남도교육청】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재검토 필요
- 농산어촌이 많은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열악한 농어촌 벽지학교 및 도서지역 교직원 관사 여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 방안은 무엇인지
-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학교명칭 변경은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일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관공서에 집중적으로 심었던 일본산 나무들이 조경수로 심겨져 있어 우리 나무로 교체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데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교장공모제의 평교사 교장 비율을 내부형 교장공모 15%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는 무엇인지 홍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 지침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무지개학교의 지정 개수와 당초 계획 대비 미달 원인,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해제된 학교와 지정기간 만료로 해제된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건설사업 중 학교 신개축사업이 많은 이유와 학교시설공사 중 4건이 학교 이전 관련 공사인데 배경이 무엇인지
-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볼 때 골프장 신설은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의 시급성을 지적
-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의 문제점을 지적
-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입 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특색사업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와 교과서를 대신해 고전 양서 등을 가르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교원 중 음주운전 신분 은폐자의 빠른 징계 필요
- 성 비위 교원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날로 심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피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학교의 식재료 구매 시 특정규격 모델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상품만 구매하는 형태로 급식비리가 밝혀진 상황에서 급식비리가 발생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내진성능 확보 학교건물 낮은 비율과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3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필요
- 납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비용을 조속히 집행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 실시 학교 수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현황 파악하고 확인감사 전까지 개선하여 결과 보고할 것
-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 중앙정부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 건의할 용의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65.1%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경상북도 교육청】

-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직원 관사 거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적극적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필요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10년간 교명변경을 한 학교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학교현장 속 일제 잔재가 심각한데,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할 것
- 폐교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임시활용 또는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폐교와 국유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국가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장공모제에서 교장자격증미소지 교사의 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장공모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5년 동안 평교사 출신 교장은 64명이고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이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에는 한명도 없음.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교장공모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방식 등 입학관련 업무에 대해 지침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천만원을 돌파했는데 이러한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포항제철고, 김천고등학교에 대해 3년간 감사를 1회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할 것에 따른 예산 문제의 해법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청의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교육재정, 학교살림 축소 현실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기초학력보장 집행비가 크게 축소된 사유와 그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예산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기초학력미달비율을 낮추기 위한 예산 증액이 가능한지
- 초·중·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리가 내린 만큼 수익률을 조정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큰데 협약서 등의 제약으로 재구조화 힘든 상황으로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12조원이 넘어 교육재정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2015~2016년에 본청 경상경비는 증가하고 교육지원청 경상경비는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최근 3년간(2014~2016년)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4분기 집중 전입 이유는 무엇인지
- 각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율이 높는데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입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 최근 5년간 건설 사업을 보면 학교 신·개축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학교 수도요금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입찰시 강사들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떼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어 인건비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필요
- 날로 심해지는 교권침해에 대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비위 징계 강화할 것
-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장학사의



교장 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중징계가 필요

- 성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성관련 호기심이 빠져돌아져 표현되므로 성교육 내실화 필요
- 자살시도 학생 및 전문기관 미연계 관심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경북도내 감염병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감염병 관련 대책 수립할 것
- 경주지진 당시 학교 현장에서 재난 대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안전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지진 대비 안전매뉴얼을 보다 세밀화 하여 일선 학교에 보내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피처로 활용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별도의 운영방안이 없어 학생 및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해 발생 시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학교현장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의 재난관리능력, 안전관리능력이 중요해졌다고 판단되는데 도교육청의 자연재난 시스템 구축 필요
- 경북 지역은 내진비율(18%)이 타 시·도 와 비교해 많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학교시설 내진 적용 확대 방안 마련할 것
- 지진피해 학교 138개 학교 중 복구가 완료된 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한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편성하여 대응하는 등 조속한 복구일정 마련할 것
- 학교석면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절반도 넘으므로 학교석면제거 계획수립에 더 적극적인 자세와 예산편성 필요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중 유해성 검사 및 조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실시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드 배치가 경북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면담 및 간담회 개최 여부
- 소방차 진입불가 학교 전체 24교 중 경북이 10교로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는 등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생활지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대한 계획과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이 필요
- 전문상담교사 배치 증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율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전문상담교사가 현저히 낮게 배치되었다고 지적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자 재심청구가 증가하고 있음. 예산과 인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할 의향이 있는지
- 1월 서울고법 판결이후 전교조 경북지부에 무려 8회에 걸쳐 사무실 지원중단 통보 및 퇴거 독촉 통보, 사무실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퇴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임. 퇴거요청을 적극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 신규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13년 대비 2015년까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을 대폭 줄인 이유는 무엇이고 인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청이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무기계약도 전환하고, 퇴직금도 주는 형태로 기준을 정한다면 초단시간 계약의 문제점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경북교육청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초단시간 실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 학교비정규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임에도 2015년 4월 기준 무기계약직의 전환 비율 조사 결과 무기계약 미전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상남도 교육청】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악한 농어촌학교 교직원 관사 여건 개선할 것
-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하여 국정과제에 활용해야할 것
-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및 교사 연수 내실화 필요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 최근 교육수요 변화 및 특성화 학교·자율학교 지정 등에 따른 교명변경이 빈번한 실정이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학교명칭 변경은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교명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업무처리에 신중해야 할 것
- 학교속의 일제 잔재 심각한데, 일본 향나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관리 지원 조례 제정해야 할 것
- 전입금 편성을 별도의 기구인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해 오던 것을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였는데 회의 횟수가 1년에 1번에 불과하여 다양한 재정적,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는 등 다

양하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할 필요

- 경남교육청의 배움중심수업 국외학교 탐방 연수에 교육감이 참석한 이유, 비즈니스석 이용은 특권 아닌지, 문화탐방의 연수 관련성, 학기 중 연수 진행 사유는 무엇인지
- 경남교육청의 배움중심수업국외학교 탐방 연수에 1억원의 예산 낭비, 비서실장과 장학관 포함되었고 문화관광성 외유성이 짙다고 지적
- 경남교육청의 배움중심수업국외학교 탐방 연수가 학기 중 실시된 이유는 무엇인지
- 감사원으로부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적격자를 감사사무관으로 채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당시 채용된 공무원이 현재 재직 중인데 관련업무 계속 수행 등에 대해 향후 판단할 계획이란 답변의 이유가 무엇이며 채용 시 윗선의 부당한 압력 내지 개입 없이 나올 수 없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공모교장제에서 평교사 출신은 고작 64명으로 전체의 2.6%에 불과해 당초 학교 현장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와 달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내부형 공모교장 학교 중 15%만 교장자격 미소지자로 지정해서 사실상 평교사 출신의 교장 진입을 어렵게 해놓은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이 어떠한지
- 수석교사가 2012년 출범당시보다 2015년 제도 도입 5년 만에 3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수석교사 제도가 신설당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남도내 경남미용고와 경남전자고의 경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대책이 필요
- 도교육청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적 성격이 약해 재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관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학교 신·개축사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 경남교육청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대한 검토와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교육재정 학교살림 축소 현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수도요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 수도요금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방과후학교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 지적
- 스마트 방과후학교 성공과 관련하여 디지털교과서 사용 확대 여부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각 해당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입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2년 2.03%에서 2015년 3.93%로 2배 가까이 늘어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2015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의견이 무엇인지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각 시도별 지원액 차이가 많아 총액에서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대책 검토 필요
-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님. 교육기본법 제9조에는 어린이집이 없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학교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수 있음. 상위법 위배되는 시행령은 무효이고, 보통교부금 이원화 체계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 계기교육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하고 위반 시 징계요구 등 엄중

## 조치가 필요

- 학교 성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에 대해 내실 있는 치유프로그램 및 법률적 조언 시스템 마련할 것
- 지난해 내진보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할 것
- 내진성능 보강 및 석면제거에 힘쓸 것
- 경주지진 및 태풍 차바 발생에 대해 경남교육청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
- 경주지진 및 태풍 발생과 같은 재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시도 교육청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레탄 트랙 문제임. 시도 교육청은 이번 학기는 흙으로 운동장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10년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임.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전문가의 성분검사가 끝난 탄성매트 또는 카펫트랙을 설치하는 것임. 이것을 정부가 신속하게 검토하여 진행하고, 교육감도 신중하게 선택해줄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 제정 필요할 것
-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별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차 진입불가 학교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의 확대배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단 3명으로 배치율이 0.6%로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대책을 세울 것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 사무실 퇴거 전무,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 미이행 등 후속조치 부실하다고 지적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정원확대를 막기 위해 신규채용 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5개월짜리 기간제 계약만 반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이 사실인지 또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정할 의사가 있는지
- 학교비정규직의 2015년 무기계약 대상자 중 2016년 무기계약 전환 현황을 조사·비교한 결과 무기계약 전환율이 63.2%로 낮다고 지적
- 학교비정규직 재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중도퇴사자의 자발성 여부를 조사하여 가급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지난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차 조치를 미 실시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할 것
- 교육청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사례가 있는데 교육청 단위의 재취업 가이드라인 마련이 어려우니 법 개정 필요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점검기준에 의한 안전 진단을 통해 시설물 전체의 구조안전성을 진단하고 관급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시공여부를 점검하는 등 증축학교에 대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 학교증축과 관련하여 학부모는 알권리가 있으며, 교육당국과 학교는 학부모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고 충분한 소통에서 오는 설득으로 갈등을 줄일 필요
- 석산초 증축은 내진설계가 미진한 기존건물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진의 위험이 가중되는 안전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유아교육, 캠퍼스형 고등학교 등 연구 해외

연수’는 외형상으로는 국외학교 탐방이만 실질은 관광에 불과하고, 기간도 을지연습 기관과 겹치는 것으로 부적절한 해외 시찰이었음

- 세종시 과학예술영재학교 해외 수학여행 비용이 1인당 470만원으로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고 타 학교 학생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어린이집 또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므로 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견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심각한데 직선제 폐지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의 지난 선거과정과 선거비용지출액, 뇌물수수 혐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 효과와 전문가 검증 을 거치지 않고 ‘표’를 의식한 복지포퓰리즘 시책 남발로 교원, 학생, 학부모가 정책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공개될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정교과서를 대비한 보조교재 개발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정치적으로 편향성인 있는 집필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걱정하다고 보는 것인지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
- 교원은 여성이 많은 반면 교장이나 장학관은 아직까지 남성의 비율



이 높는데, 여성 교장이나 장학관의 임용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 전교조 산하의 참교육원격교육연수원과 교원원격연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교조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연수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보면 특정 교육청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등 연수 내용에 있어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함
- 55개교 중 수석교사를 4명만 배치하고 있는데 수석교사 제도의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결과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 등을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레탄 폐기물 처리시 성분 분석을 통하여 분류를 정확하게 하여 처리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시 마사토가 아닌 탄성캐트나 카펫 트랙 등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볼 것
-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하여 소년체전 폐지 등 장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생존 수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필요
- 평교사 출신이 교장이 된 사례와 긍정적인 변화 내용은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이 있는지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학교 수 및 미실시 학교 수 현황,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수도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편차도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대기업 덤핑 사례가 있는지
-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교육감이 세종장학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퇴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역의 특수성,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마련할 것
- 지역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 방치된 폐교자산을 정리해 국정과제에 활용할 것
-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지정 등에 따른 교명 변경이 빈번한 실정인데 학교명칭 변경은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 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지
- 일제 잔재인 일본산 향나무들이 아직까지 학교에 버젓이 조경수로 심어져 있어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려는 자율교육을 강화한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혁신학교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시행할 것
-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내실 있는 치유지원 대책을 마

## 련할 것

- 수석교사 선발현황 분석결과 지난 2년 동안 수석교사를 전혀 신규임용하지 않았는데 수석교사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 교장 공모제 관련하여 평교사 출신 비율을 15%로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현장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례를 통해 소개할 필요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관한 지침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천만 원을 돌파하였는데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국·공립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각종 편의 제공하는 등 값비싼 사립초등학교를 찾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체계를 다질 필요
- 시도별 교무행정팀 구성 현황을 보면 제주가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지난 3년간 학생자율동아리활동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2016년에는 17개 시·도 중 15번째로 낮은 참여율임을 지적
- 교육감은 자율동아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확인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
- 작년대비 올해 본청 경상경비가 12.4% 상승했으나 지역교육청은 20% 감소하였으나 충북교육청 경우 올해 본청 경상경비가 9.3% 감소했으나 지역교육청은 12% 증가함. 제주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의 사례를 배워 내년부터 올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분기별 전입에 대

한 입장이 어떠한지

-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는 문제는 개별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해보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대부분의 교육청에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마련할 것
- 학생자살 건수가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관심군 학생들에게 2차 조치를 하는 교육청에서의 지원 대책이 필요
- 최근 2년 동안 학교 내진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지적
- 내진보강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 투입이 미비하고 내진보강 집행실적도 매우 열악하니 향후 대책 마련하고 세부계획 마련하여 제출
- 학교 내진 성능 확보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지반구조 및 위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악하고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관련 예산 편성할 것
- 교육청에서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안 되면 학교 안전을 위한 내진설계 특별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정부에 요청하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 및 학교석면제거사업의 예산 편성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내용에 유해성 조사를 한 후 공개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조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청
-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레탄 트랙 교체 비

용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150억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기후온난화로 인한 잦은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한 예산확보 노력 필요
- 학교안전사고 발생비율이 전국 평균 1.83%인데 제주는 무려 3.51%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고로 높고 2014년과 비교해도 0.51%p가 늘어난 수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학생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41%에 달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학교이니 사고 비율을 줄여야 할 필요
- 정기적인 학교 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학교에서의 사고는 최대한 막아야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 수가 부족하니 교육부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인력을 확보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 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 학생 보건과 관련한 예방조치가 매우 미흡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고 봄.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 제주교육청의 경우 1곳의 학교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개선하여 결과 보고할 것
-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폭력과 학업중단율이 낮아지고 학교복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동의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 건의하실 생각이 있는지
-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급식보조원 관련

- 급식보조원에게 단지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 의도적으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 경력 인정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교섭을 했었고 파업과 단식농성까지 거치면서 어렵게 합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경력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 아닌지
-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속한 해결을 요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급식보조원의 실제 경력을 인정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지
- 방학 중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시킨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포함시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지

○ 대체인력비(4만8천원)를 높이거나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대체인력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2015년 교육공무직원 인력 현황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100% 무기계약 전환되도록 할 것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지부에 퇴거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더라도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할지 여부와 전교조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국제학교 NLCS 제주의 현 수용인원의 3배 이상이 한꺼번에 입학하면서 화장실 및 수업공간 부족 등 공간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환경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 2016년 2월 18일 SJA 제주 설립계획을 승인할 당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SJA와 KDC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경영통제를 할 경우 미

국 상법상 미국 법원에서 KDC의 법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본교의 면세 혜택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미국 본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 해울의 CVA OP13 of Schedule 2에는 본교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졸업장을 ‘미국 본교 교장’ 서명이나 인증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 인증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본교에서 실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는지
- 생존수영 수업시수를 내년에는 20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확인감사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며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 수영교육에 대한 관심 필요

## 다.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 【공통사항】

-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 및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할 필요
- 수시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공개할 필요
- 2018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
- 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대학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사립대에 비하여 국립대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상황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
-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차비 수입 징수로 영리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 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16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요

-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제거 계획을 마련할 필요
-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경비로 대체되었지만 교수와 직원 간 큰 편차를 보이는 등 논란이 있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의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추진할 필요
-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 지급 등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대학구조개혁 관련
  - 지방대에 치우친 대학구조개혁 정원 감축결과에 대한 견해
  - ACE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인원 감축이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 대학의 비전,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대학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사 구조조정, 행정 조직 개편, 대학 기능 강화, 경영 효율화, 학생 정원 감축·조정 등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
-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국립대학의 대책 마련 필요
-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감독 대책이 필요
-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

- 총장 직선제 및 간선제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
-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알 수 없고, 담임/입학사정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수시, 정시 모두 결과적으로 일반계고 합격률이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 많음. 입학전형 규정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선발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경북대학교】

- SCI논문 위주로 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논문을 위한 연구에 그친다는 질타가 많음. 공과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거나 신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대학구조개혁 관련
  - 상대적으로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2주기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학과통폐합의 동기와 성과(구조개혁 관련임)
  -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구조개혁 평가지표와 목적이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대학 구조개혁의 향후 전망

- 취업률 하락에 대한 원인 및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필요
- 대형강의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의 질 높은 강의를 확대할 필요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강원대학교】

- 강원대학교 내 석면이 포함된 건물 177개동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 예산 중 70%를 석면제거와 같은 환경개선이 아닌 신축건물에 투자하는 이유
- 환경부와 교육부의 강원대학교 석면관리 실태 조사결과의 차이가 큼.

석면제거를 위해 노력할 필요

○ 대학구조개혁 관련

- 학내 정상화를 위해 취한 노력
- 상대적으로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2주기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구조개혁 평가지표와 목적이 다른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 대학 구조개혁의 향후 전망
-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학과통폐합의 동기와 성과

○ 취업률 관련

- 취업률 저하의 이유와 대책에 대한 의견 및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 강원대의 자체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수요를 감안한 학과별 정원조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취업정보제공 방식의 질적 개선이 필요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부산대학교】

○ 상대적으로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2

주기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대형강의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의 질 높은 강의를 확대할 필요
-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효원문화회관 BTO사업 관련
  - 대학에 많은 상업시설이 입점해 있는데 이에 따른 채무가 740억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률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국립대 연합체 단계별 구축 방안에 대해 반발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

- 부산대는 지난해 대학 특성화 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에서 총장 직선제 실시로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재정적 불이익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총장직선제 등 교육의 본질과 무관한 평가지표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고 있는데,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
- 교육부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해야 하며, 초·중등학교는 학교급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할 필요

### 【전남대학교】

- 창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뿐 아니라 법령 제정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
- 대학구조개혁 관련
  - 대학 구조개혁의 향후 전망
  -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학과통폐합의 동기와 성과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논문심사료 납부액 조정 계획 및 그 사유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전북대학교】

- 약학대학의 2+4학제에 대한 의견
- 취업률 하락에 대한 원인 및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필요
- 대학구조개혁 관련
  - 대학 구조개혁의 향후 전망
  - 교육부가 나서 대학 구조개혁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통제하고 있는 비용지급 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지방대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 교수 임용 지역인재 비율이 줄어든 이유와 향후 대책
- 치과대학 입학생의 비율이 지방대 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충남대학교】

- 대학구조개혁 관련
  - 국립대학으로써 미래의 위기 요인에 대한 대비 전략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
  - 대학 구조개혁의 향후 전망
  -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지
  - 상대적으로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는 대학구조개혁의 2주기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창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뿐 아니라 법령 제정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
- 현재 도급으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시설관리용역 직원의 직접고용 전환 필요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충북대학교】

- 바이오메디컬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관심받고 있는 시점에서 충북대는 오송 바이오생명과학단지과 근접하여 바이오 분야에 특화될 수 있음. 산학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교수채용이 필요
- 취업률 하락에 대한 원인 및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필요
- 2015년 충북대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7건)에 대한 원인 및 대책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경상대학교】

- 대학 구조개혁의 향후 전망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 마련 필요

### 【제주대학교】

- 방호 및 교통관리 업무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원가계산시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등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대학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해외대학 진학 등으로 우수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약학대학 신설 관련

- 제주권내에 위한 제약회사, 바이오 관련 및 산업의 현황
- 향후 약학전공자들의 역할
-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갖추고 있는 제반조건
- 약학대학 신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향후 어떤 절차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총장임용 관련

- 장기화되고 있는 총장 공석 사태에 대한 자구노력 등 대책
- 교육부가 제시하는 총장 직선제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
- 총장 공석 기간 동안 가장 큰 문제점
- 교육부의 3차례의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에도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 재정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총장 선출 방식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총장후보자가 결정적인 흠결이 없는 한 대학구성원의 결정을 존중해 승인함으로서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이 아닌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현직 교수가 외부 자문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 및 규정신설이 필요
- 내부 겸직규정을 위반한 교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징계 등 관리가 필요
- 차별금지 인권 가이드라인 논의에 대한 총학생회와 학교 측 양측의 입장
-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는 올라갔지만 성과는 미미함. 지속적 관심에 비해 기초과학분야가 아직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
-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꾸준한 신진연구자 지원 대책 필요
- 법인화 이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육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지진공학연구센터가 2005년 정부 사업비 중단 이후 운영 부진 및 역할이 유명무실해짐. 학교차원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지원도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
- 대학구조개혁 관련
  -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사외이사제도의 철저한 감독 필요
- 자연계열과 공대의 합격 포기생이 많은 것에 대한 견해. 개선대책 필요
- 자유전공학부의 성과 및 학생들의 관심도
-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제 벽을 허무는 혁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공학교육에 있어 실무형 강의가 많이 도입되고 산업현장의 실제적 기술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야할 필요
- 파견금지업종에 대한 위장도급정황이 발견되었음. 기계/전기시설 도급계약자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필요

- 비학생조교 관련
  - 서울대조교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함
  -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당사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
  - 협의체 재구성 계획 및 활동계획을 보고할 필요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조치가 미흡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이 필요
-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연구지원비의 법적근거 및 용처
- 지역균형선발 전형 관련
  - 최근 들어 서울 등 수도권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지
  - 지역적·사회경제적 교육환경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기회균형선발 관련
  - 기회균형선발 비중이 국·공립대 평균의 절반 이하임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정원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균형선발된 학생들과 정시선발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오히려 정시선발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으나 졸업 시점에는 다시 역전됨. 서울대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폭넓은 활동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학생부조작, 입시부정이 증가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학생부종합전형이 감감이 전형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향후 평가내용 공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예술대학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일부 특정 고등학교에 편중되고 있음. 지역균형선발제도 등의 제도보완 필요
- 인권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서울대의 상징적인 의미와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보호같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 총학생회 자치규약으로 정립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 필요
-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 창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뿐 아니라 법령 제정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
- 법인화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정부지원 연구비가 많으므로 기부금 확보나 수익사업 수행에 더욱 노력할 필요
- 평창, 수원, 시흥의 캠퍼스 조성사업은 수익사업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추진 상황 및 성과 현황
- 시흥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
-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과 강의컨설팅 확대 필요
- 기부채납 건물에 입점하는 상업시설에게 법적 예외를 적용하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하는 이유
- 사기업의 교육전문시설을 서울대에 입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삼성 디자인학교, 서울대 캠퍼스(연구공원) 확장 이전 및 학과 신설 관련 개요 및 진행상황
- 감사원 감사결과 직원 인건비성 경비 과다집행 지적에 대한 서울대

## 의 입장과 조치점검

- 해외대학 진학 등으로 우수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늘어나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 필요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학년의 경우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필요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 들고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논문심사료 납부액의 조정을 검토한 적 있는지
- 남부학술림 무상 수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절될 필요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조직을 개편하고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에서, 고등교육은 대학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창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뿐 아니라 법령 제정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
- 매트릭스형 교육제도의 개념, 진행상황, 향후계획
- 비학생조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바이오 중심대학 관련
  - 인천대 특성화 계획의 배경은 무엇인지
  - 바이오 특성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은 무엇인지
  - 바이오 특성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과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 입학금 산정기준 및 지출용도 공개 여부



## 라.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 【공통사항】

-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관계 법령에 따른 여성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지
- 임신순번제에 대한 각 대학병원장들의 견해
-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출산과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임신순번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성정원제와 같은 대안의 검토 및 도입이 필요
- 국립대학병원에서 매년 크고 작은 화재 및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 마련이 필요
-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국립대학병원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보다 부담금 납부로 버티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
-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과 전공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특정과목의 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는 의료의 질의 문제로 이어져 국민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진료보조인력(PA)운영 관련

-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 PA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낮은 인건비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 PA활용에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은지.
- PA의 업무범위, 권한 등의 조정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의 환불 조치 및 근절 대책 필요
- 국립대학교병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
- 2세 응급중상환자 사망사건 관련
  - 국립대병원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전원이 타당하였다고 생각하는지
  - 전원을 위한 신속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 과다출혈을 확인했는지
  - 응급처치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 권역외상센터관련
  - 권역외상센터의 당직의사가 계속 근무를 하는지 여부 및 외상환자 전원 시 핫라인 설치 방안에 대한 의견
  - 국립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전원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권역외상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
  - 전원할 때 실시간으로 인근 병원의 수술가능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책임을 느끼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 할 필요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
- 정부지원을 받는 국립대병원이 일부 병원의 과도한 복지혜택, 직원 등에 대한 병원비 할인 등으로 경영난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의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병원 당국의 의지와 대책이 미미함. 매년 반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에 대한 의견 및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국립대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 국립대병원의 장례용품 마진을 책정 기준
  - 장례용품이 각 병원마다 심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 장례용품의 구매단가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마진률이 상승하는 등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을 실태를 점검하고 폭리 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 필요
- 의료비 허위 또는 부당청구, 미반환 예약금의 환불 조치 및 대책 마련 필요
-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서울대학교병원】

### ○ 故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 수술 전과 후의 구체적인 진료 경과
-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또는 협의를 하였는지 등 작성 경위
-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 외인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사인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므로 책임자를 가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정의인 백선하 교수는 병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입장
- 주 진단명이 외인성 급성 경막하 출혈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사실에 대한 의견
- 보험청구의 질병 사유와 진단서의 사망 사유가 달라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
- 故 백남기 환자의 EMR 로그기록 27,178건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1조, 서울대병원 의무기록 관리규정 위배 여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경위
-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소견서 발급 거부 여부
-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

- 치료과정에서의 부원장의 개입 여부 및 역할
- 백모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 후 허위진단서 작성  
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사인을 정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
- 사망진단서 작성권자
- 전문가의 의견의 존중될 필요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병원 기록물 관리 부실
- 감사 선출 과정 및 구성원
- 타 국립대병원에 비해 내진설계가 미흡한 사유 및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정부지원 요청 필요
- 국립대학 병원 중 환급금액이 가장 많은데, 진료비를 많이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입장
- 토너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의 건립  
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견해 및 향후추진의  
사에 대한 의견
- 관련 언론보도(뉴스타파)에 따른 비처방물품의 수가물품 교체여부
- 노조 관련
  - 현재 노조가 파업 중인지 여부와 노조의 주된 요구가 무엇인지
  -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여부
  - 성과연봉제를 도입에 대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을 필요
- 헬스커넥트 관련
  - 설립 과정

- 헬스커넥트의 경영 실적이 부진한데 추가 출자 계획이 있는지
- 헬스커넥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서울대병원 의사(기금교수) 중 서울대 전임교수로 임명된 인원 현황 및 보수액 현황
- 서울대에 지원하는 교육연구지원비의 법적 근거
-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상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정원을 늘려 인력부족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 첨단외래센터 관련
  - 첨단외래센터 건립의 목적
  - 첨단외래센터 지하1층을 편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부대상업시설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 첨단외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대기업(두산)에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지
  -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가 필요한 사업인지, 지하1층 전체를 모두 부대시설로 채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
- 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급여에 비해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off일에도 교육 등이 실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필요
-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함. 공정한 채용절차 확보가 필요
- 분당 서울대병원의 다양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의견

## 【부산대학교병원】

- 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급여에 비해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off일에도 교육 등이 실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병원 내 감염관리실은 있으나 전담의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겸직형태의 의사만 근무 중임.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진료비 선수납(예약금) 관련
  - 미반환 예약금 발생원인
  - 집중 환불기간, 자동환불시스템 등 환불처리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 예약금을 지불했으나 진료하지 않은 건에 대해, 일정을 조정해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
  - 이미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 요청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이므로, 진료과 의견을 수렴하여 요양급여기준에 합당하게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부산대병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급여대상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 지적되었고, 환자들이 직접 진료비 과다청구를 이의제기 하여 대학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은 금액 규모도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 부산대병원 양산분원 장례식장은 매우 낮은 마진율(26%)을 보이는 반면, 본원은 37% 마진율로 같은 병원에서도 11%의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장례용품이 각 병원마다 심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 방안 및 적절한 마진을 조정 필요

-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가 넘어 국립대학병원 중에 항생제 처방률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남.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국립대병원의 간호직 배치전환 원칙은 무엇인지
-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 후속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제증명 발급수수료 관련
  - 제증명 발급수수료 기준
  - 본원과 양산분원의 제증명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 일반(보통)진단서의 경우 이미 병원비를 지불했으며 후에, 서류를 발급받을 때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 상해진단서의 경우 기간에 따라 두 배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
  -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 및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 필요

## 【경북대학교병원】

- 대구경북 지역의 거점 병원인 경북대병원은 잠재적 지진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 지진 위협 이외에 병원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내원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 본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당면하고 있는 내진설계 및 석면제거를 위한 리모델링과 개보수 필요
-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전담의사의 충분한 정원 확보와 관련법 개정 추진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 노력할 필요

-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의 최근 6년간 평균 마진율은 41%로 매우 높고, 올해(6월 기준)의 마진율도 47%로 국립대병원 중 최고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필요
-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 후속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급여에 비해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off일에도 교육 등이 실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병원 내 감염관리실은 있으나 전담의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겸직형태의 의사만 근무 중임.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의 대책 마련 필요

## 【경상대학교병원】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병원 내 감염관리실은 있으나 전담의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겸직형태의 의사만 근무 중임.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
- 경상대병원이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허위 부당 청구한 금액이 16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데, 환자에게 환불조치를 요구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불 조치를 했는지

### 【전북대학교병원】

-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필요
- 교육부감사결과 치과등에서 사용하는 치과재료구입비용을 병원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환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전가시켜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지
- 지역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
-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므로 재검토 필요
- 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급여에 비해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off일에도 교육 등이 실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병원 내 감염관리실은 있으나 전담의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겸직형태의 의사만 근무 중임.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의 대책 마련 필요
-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가 넘어 국립대학병원 중에 항생제 처방률이 과다한 것으로 드러남.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
- 국립대병원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해 중증응급환자 대

기시간 및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증가하는 등 개선 노력 미흡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 권역 내 미세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전북대병원은 유일하게 인력부문 법정기준 미충족 판정을 받았는데 내실보다는 외형확장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 【전남대학교병원】

-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을지훈련 기간중 병원장 해외출장의 적절성
- 골든타임에 환자 전원을 거부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의 문제점 및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가장 높은 점에 대한 개선책 필요
-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관련
  - 간호사 자살사건 이후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수술실 배치전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 수술실 간호사 자살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합의 이후 경과과정은 무엇인지
  - 중앙수술실 위원회의 구성
  - 수술실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 및 조치 내역은 무엇인지
  - 수술실의 인력 및 근로조건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야간 교대작업에 따른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원내 보건교육의 실시 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 정신보건관리 대책의 시행 경과

- 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급여에 비해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off일에도 교육 등이 실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제주대학교병원】

- 진료비 선수납(예약금) 관련
  - 미반환 예약금 발생원인
  - 집중 환불기간, 자동환불시스템 등 환불처리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 예약금을 지불했으나 진료하지 않은 건에 대해, 일정을 조정해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
  - 이미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 요청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이므로, 진료과 의견을 수렴하여 요양급여기준에 합당하게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충남대학교병원】

-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가 교육부 감사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당징수 금액의 환불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자 징계가 필요
- 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급여에 비해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off일에도 교육 등이 실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 대책은 무엇인지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병원 내 감염관리실은 있으나 전담의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겸직형태의 의사만 근무 중임.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병원의 대책 마련 필요
- 어린이병동 입구에서 실시된 고압가스 충전 사례와 소아암 병실에서 사용된 공업용 독성물질 WD-40 사용 사례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행정이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며, 진상을 파악하고 환자중심 행정을 펼쳐나갈 필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
- 진료비 선수납(예약금) 관련
  - 미반환 예약금 발생원인
  - 집중 환불기간, 자동환불시스템 등 환불처리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 예약금을 지불했으나 진료하지 않은 건에 대해, 일정을 조정해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
  - 이미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 요청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 번거로운 일이므로, 진료과 의견을 수렴하여 요양급여기준에 합당하게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 【충북대학교병원】

- 병원 간호인력의 경우 급여에 비해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off일에도 교육 등이 실시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퇴사자가 계속 발생하여 간호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말기환자들의 경우 국립대병원은 최후의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전담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병원의 대책

### **【강원대학교병원】**

-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및 여성근로자의 복지 정책마련 필요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치과병원은 어린이집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치우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임산부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치과병원은 어린이집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치우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임산부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지진대비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치과병원은 어린이집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치우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임산부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

## 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립대학 교지확보율이 높은데도 매년 교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 재단에서는 이러한 사립대학에 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용자 심사 시에 재정지출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
-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사립대학 재정 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는데, 행복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행복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 필요
- 대구지역 행복(연합)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이사장의 견해
- 폐교예정이거나 폐교인 학교들이 상당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대우자판 특정금전신탁(CP)의 투자손실은 투자 결정 이전에 자산운용 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후에 외부 회계법인의 문제제기도 무시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투자손실임. 사학진흥재단 정관 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투자결정 및 관리에 관여한 이들에게 변상책임을 끝까지 요구할 필요
- 대우자판 특정금전신탁(CP)투자과정 및 사후관리에서 드러났듯이, 투자를 전후한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학진흥재단의 대책은
-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에 있어 전문성 및 투자상품의 다양화 등 안정적 자산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1) 정부의 평생교육 투자가 매우 적고, 2)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하며, 3)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1) 국가 투자의 획기적 확대, 2) 각 지역대학들의 평생교육센터로의 전환, 3) 교육방송과 방송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

-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회와 논의하여 조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을 제출하고 추후 성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수행중인 'KOCW'사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의 'K-MOOC'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 및 사업 당사자들의 협의 계획 및 통합에 대한 의견 질의
- 한국형 온라인 대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K-MOOC의 강좌별 최종 수강완료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의도와 주요 임무
- 의료법 제27조와 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의료과목을 교육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였는데, 여러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료행위 관련 교육 현황 및 신청현황
-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 중 하나로 의료행위관련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료법에 적법하게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의료행위 관련 교육 중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과 실내교육과정 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대책은
- 고령인구비율이 높음에도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의 선정에 소외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원장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구 중남구 지역에 평생교육수요가 많아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후 지금까지 역사·영토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이에 재단은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이 아닌 정책·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그동안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적극적·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의향
- 5년 12월 18일자 공문으로 요청한 15년도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회수해야하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향후 재단은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 동북아역사재단은 지정과제를 기초연구 위주로 추진하고, 재단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각 연구과제의 투명성·효율성 및 질 향상을 위해 공모과제의 과제 수·지원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향후 추진의사
- 동북공정 관련
  - 동북공정에 대한 의견 및 철저한 대응 요구
  - 우리역사인 발해사 연구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 발해는 지배층이 고구려인인 엄연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것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는지
  - 발해 5경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 중국은 동북3성 관련 논문을 200권이 나와 있고, 수천편의 연구가 나와있는데 우리는 논문 자료가 있는지
  - 동북3성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전문가들이 많으므로 직접 가서 그 사람들과 발해사에 대해서 교류하고 역사를 확립할 필요
- 일본 위안부문제 관련

- 100억원 규모로 합의하여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
- 한일협정 합의문에서 인정하는 한일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일본의 검정교과서에 반영되지 않고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 여성들이 모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이 일본의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IOC 홈페이지에 일본 국적으로 표기된 故손기정 선수와 故남승룡 선수에 대한 기재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한체육회와 어떻게 공조할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할 것
- 독도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 역사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한 행사에서 나눠준 지구본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문제 지적
- 임기 2년 정도 남아있는데, 재단 독립청사 건립 진행상황은
- 역사교과서 편찬 관련
  - 심의위원회에 속하는지
  - 편찬 지침이 어떠한지 및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인지
  -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당연직 심의위원이라고 했는데 맞는지
  - 교과서의 원고본을 봤는지
-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 상황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는지
- 일본의 검정교과서에 통일신라와의 관계, 원나라와의 관계, 국호문제, 임진왜란 등의 부분에서 전혀 그동안 개선을 요구한 바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재단 창립취지에 따른 역할이 미흡함
-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서술을 재단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부족하므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
-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사업 관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절차, 연구책임자 변경 등에 있어서 법령과 재단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이루어짐
- 책임자 처벌 자료에 의하면 연구자 16명에 대해 했어야 하는데 8명은 퇴직처리하여 불문했고, 1명만 중징계, 나머지는 경징계를 했을 뿐이므로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
- 기존 동북아역사지도 폐기 및 재추진 여부와 재추진팀 구성방식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
- 동북아역사지도에 지난 5년간 45억원을 쓰고 폐기하기로 하였다가 재간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 활용에 필요한 결과물(지명 정보 D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를 철저히 할 것
- 재간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것
- 지난 8년 동안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어도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8년간의 문제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기동 원장에게 교과서 원고를 본 장소가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이야기하라고 메모를 준 것인지
- 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에 선발된 연구지원서 및 보고서에 대하여는 관련 규칙에 따라 ‘영구’ 보존토록 하고 있는데도 연구전담부서에서의 관리가 소홀한 상황에 대한 대책
- 동북아역사재단에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연구업무 진행 및 성과물 활용, 외부 요청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연구성과관리시스템’ 도입계획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회관운영에 있어 임대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증

식을 위한 대책과 서울회관 재건축 관련 추진경과와 예산마련 계획

- 사학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충실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므로 외부전문가의 확충 필요
- 세월호 특조위의 대관 취소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민이 공감하는 일에 대하여 공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요구
- 공단 장기투자계정의 회전율이 단기투자계정보다 높거나 장기계정에서 1년 미만의 주식투자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 사학연금기금의 고갈에 대비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 사학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와 미환수액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면 실제 기금고갈시점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직무상요양비 승인을 저하에 대한 지적 및 이를 높이는 방법
- 사학연금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요구

### 【한국고전번역원】

- 번역인재양성사업의 현황에 대한 질의
- 번역사업이 문집과 역사문헌번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 특수고전번역은 전체 실적의 10% 수준이고, 연간 번역량도 전체 151책 중에 14책에 불과하여 여전히 번역사업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전번역교육원 수강생들이 수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석사나 박사학위

혹은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이 필요

- 한국고전번역원의 각종 번역사업에 대한 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며, 외부 번역인력에 대한 처우가 낮음으로 인해 번역인력 지망생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번역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외부 번역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 역사문화 번역작업은 단순히 한자만 잘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한국고전번역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번역작업에 참여하는 역사전문가수는 20%에 불과하여, 번역작업에 투입되는 역사전공자수를 늘리거나 기존 인력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 고등학교에서 나이스(NEIS)에 무단 접속하여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사건이 발생.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쉽고 학교 밖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개인정보 노출, 해킹 위험, 학생부 정보 조작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
- 지난해 외부업체 개발자가 개인 노트북의 시건장치를 풀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위치로 이동하여 인터넷을 접속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점검하고 조치했는지(해킹 유무, 보안 관리자가 함께 있었는지 유무)
- 지난해 DDoS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언제 수사의뢰했는지 및 교육부의 신고와 유출여부 확인 미흡에 대한 지적
- 외부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음. 동일한 IP로 여러 차례 했다면 사전예방 차원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수행중인 'KOCW'사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의 'K-MOOC'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 및 사업 당사자들의 협의 계획 및 통합에 대한 의견 질의
- 전국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서버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와 재해복구시스템(D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 질의
- 현재, 나이스(NEIS) 시스템의 백업이나 재해복구시스템 등의 현황과 재난에 대한 대비책
- 대구에 신설될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시스템을 이전해 나이스(NEIS) 백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기관의 입장은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사전 분석자료 및 정부지침 검토자료 내용 질의
- 소프트웨어 교육, 자유학기제, 디지털교과서 등 정부 정책 지원 방법에 대한 질의
- 에듀넷의 기능을 잘 활용해 시도 교육청의 평가 문항 등 교수학습자료를 전국 모든 교사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개선할 것
- 원격연수 콘텐츠 관련
  - 서울시 등 5개 교육청에서 참교육원격연수원과 이례적으로 수의계약 맺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강의(연수)하고 있는 사실 파악 여부
  - KERIS의 원격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추진 근거 및 원격연수 콘텐츠 내용심사 과정 및 적부판정 기준
  - 참교육연수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초등 평가 혁신>과정에 대한 콘텐츠 내용심사 결과 및 그 적정성 여부
  - 콘텐츠 내용심사의 윤리적 규범이나 편견 심사기준과 연수내용의 정확성, 윤리적 규범(편견)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 내용 심사 적합성 기준을 영역별로 P\* 2개 이상, 전체 합계 4~5개 이상의 경우로 보다 강화하고, 기술적 기반 심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연수 내용의 정확성이나 윤리적 규범(편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비중을 늘릴 것

## 【한국연구재단】

-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액 기준세계 6위에 해당하는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나 사업화 성공률 등이 저조한 실정임. 우리나라 R&D 정책의 주요 문제점인 1) 미흡한 성과, 2) 잘못된 평가기준, 3) 부처 이기주의를 해결할 방안으로 1)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2)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감사’로 전환 필요, 3) 기초연구에서 중복과제 허용 필요, 4)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과제 확대 및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5)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로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재단의 연구결과물 관리가 부실한데, 연구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 연구 사업 지원 시작부터 결과물 제출 마감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물의 질적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학술단체가 연구재단에 학술지를 제공한 것은 등재지 평가 때문이지, 원문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한 것은 아닐 텐데, 원문 무료서비스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상 연구자들에게 ‘저작권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는 명백한 ‘권력의 강요이자 횡포’라고 할 수 있는데, 관련 사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지
-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등 세계적인 대학들과 민간산업계에서는 ‘연구재단의 무료공개서비스가 해외 수출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국연구재단이 국민에게 무료공개 서비스를 해야 할 학술논문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논문인데, 이들 논문은 해외 출판사와 독점 계약이 체결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구독비를 내야 함. 이는 심각한 국부 유출이고, 학술주권 문제로 그 대책은
- 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재(후보)학술지 평가방법을 살펴보니 70점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주관적 개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
- 등재(후보)학술지의 평가위원 5명의 평가점수 산출 시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책 필요
- 학술논문이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재단 지원예산을 회수한 경우가 있는지
- 대학에서 표절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장(소속기관)이 검증·판단하고 재단에 통보하게 되는데, 총장이 연구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 동국대총장 논문 표절에 관하여 재단에서 직접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지
- 큰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재단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을 제대로 할 필요
-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정밀정산 현장 점검률 5%는 과소한 것 아닌지
-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선정에 있어 중복·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재단에서는 별도심사를 다시 열게 되었는데, 평가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 연구재단은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지역사회 기여 등 공공성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고등교육평가원」과 같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대학평가 전담기관을 만들어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검증을 해나가야 할 것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 고등교육 분야 평가자 풀을 만들어서 각 대학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선정평가가 끝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 하지 않는 이유 및 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평가위원들에 대한 관리현황, 평가위원 명단 공개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견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 사업에서 직군별 쿼터를 두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본 바가 있는지 및 매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고 연구재단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이 정부기관 퇴직자들의 노후보험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깰 수가 없고, 올해 상반기 선발인원들을 보면 정부기관 출신 고위직 인사에 심하게 편중된 구조라는 지적. 선발과정에서 정부기관 출신을 일부러 더 치중해서 뽑으신 것인지, 선정평가에서 장관급 3%, 차관급 2%, 공공기관장급 2% 가산점수를 주는데 왜 주는 것인지, 특정출신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건 상식적 수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기숙사 건축 차질 없이 추진바람
- ICCRS 참여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 대전·충청권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 국가장학금 홍보 및 대학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학

### 자금 지원센터의 추가적 설립 필요성

-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 인하 필요
-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방안 필요
-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학생을 상대로 약 37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근본적 해결 대책이 아닌 학생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
- 과거 고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전환대출 등 저금리 전환대책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
- 기존 변동금리 상품 대출자에게 고정금리상품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대책은
- 예상 조달금리와 실제 조달금리의 차이에 따른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
-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 필요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지원현황과 학자금 대출을 완납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평균 연체해소 기간은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대학원생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정부의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 작년 말 반값등록금 달성 홍보를 하였는데 대학의 장학금 지원금 중 1.8조원은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전부터 확보된 지원이며, 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재원이 아니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보

## 기 어려움

-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 방안은
-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아직 상당 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뒤 국가장학금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지적
-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7분위 평균액(59만원)이 보다 10분위 평균액(92만원) 보다 많거나 지방인재장학금 분위별 지원 총액이 1분위 지원 총액(58억원) 보다 10분위 지원 총액(68억원)이 더 큰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분위별 낮은 분위 학생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적기준 완화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실질적 대학 등록금을 고려한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급규모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
- 이공계열에 편중되지 않고 인문사회 등 다양한 역량의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것
-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다시 귀국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해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필요
-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중복지원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정작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 중복지원 관련 법까지 개정하며 중복지원 환수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소송 등 강제 수단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이에

전해는

- 중복지원 강제 환수 조치 등을 감행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가장학금 2유형은 별도의 지급 기준도 없고, 학생에게 바로 집행되는 등 집행 관리가 부실한데 2유형 수혜자 현황 및 이중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에서 수도권에 편중 및 일부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
-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에서 인재추천제의 채용 특혜 여부
- 대학재정지원대학 D·E 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 필요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장학재단 이사장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의 친분에 대한 질의
- 장학재단 이사장의 한민고등학교 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 【한국학중앙연구원】

-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 2014년 말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한중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였는데, 원직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낮은 근무평점이 출산휴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별이고 모성보호의 출산정책에 맞지 않으며, 향토문화전자대전 회의록을 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2년전부터 조직적으로 대량해고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감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

을 할 것

○ 기관장 선임 관련

- 원장직 수락 전 이기동원장이 청와대나 교육부로부터 지시나 협조 요청 또는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
- 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서 연구실적 서류나 이력검증 서류 없이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추천과 교육부 이영 차관의 재청으로 일부 위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기동 원장이 선임된 과정에서 청와대나 교육부 등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의혹에 대한 질의
- 본인과 일면식 없는 이승철 이사가 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원장 지원을 위하여 제출한 이력서도 없고 본인의 하겠다는 의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추천에 의해 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비상식적임
-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원장 선임이 조속하게 추진되는 등 선임 과정이 정상아님.
- 한중연 원장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원장 선임과정이 불투명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심의가 이루어지며, 공모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등 문제가 있어 기관장에 대한 인선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 공무담임권에 저촉되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특정 인물을 이미 내정해서 검증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은 아닌지
- 이기동 원장을 선임한 것은 국정교과서를 정당화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원장 자리에 앉힌 것

○ 기관장의 거취 관련

- 한중연의 발전을 위해 사퇴할 생각이 있는지
- 본인에게 일할 기회를 더 주고 지금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민주당위원들이 요청한 사퇴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임시키겠다는 뜻인지, 필요한 경우 지켜보고 다시 조치하겠다는 뜻인지

한중연 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력서 한 장 없이 기관의 장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역량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이 자리에 나온 것임. 그런 문제는 기초적인 태도나 자세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음

- 이기동원장 선임회의시 이사장이 기관운영 경험이 없는 점 등 문제를 지적한바 있으며, 국회 대응 문제 발생을 우려하였는데, 국감 당일 그대로 상황이 전개됨. 그럼에도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은 이사장 본인이 했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또 어떤 외압이 있어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며,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사장도 책임 있는 결정 필요
- 역사관, 감정조절능력, 심신상태 미약과 행정능력 없음이 밝혀졌으며, 국감시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임을 긍정도 부인도 못한다고 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심의위원이라 밝힘. 도저히 자질과 능력이 안되는 이런 사람조차 위원들의 질의내용과 비판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이고 엄중한 판단을 요구함
- 국감 당일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변명으로 일관함.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한번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된다고 생각함
- 한중연원장에게 지난번 국감장에서 보여준 행태와 인터뷰 내용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육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 이기동원장의 국감장에서의 태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이 들 정도였고, 이기동 원장을 추천했던 이승철 이사가 사임을 한 무책임한 행태를 고려해서, 교육부총리께서는 직접 당시 상황의 녹화물을 보고 차관님과 협의하여 수일내(국감결과보

고서 채택 전)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기 바람

- 질의답변과정에서 있었던 고함, ‘새파랗게 젊은 것’이라는 표현 등에 대한 이기동 원장의 입장 표명 요구
- 국감장 외부에서 이기동 원장이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 수모를 당하고, 차라리 안하고 말지’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발언 진위 여부 확인 및 사과 요구
- 이기동 원장은 편향적인 역사인식과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여성위원을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지
- 이기동 원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와 사죄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음
- 이기동 원장의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요구
- 이기동 원장의 저서 비극의 군인들을 보면 일본 육사출신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이고 친일적인 역사관이 엿보이는 용어가 대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민족의 시각에서 표현할 필요
- 82년도에 나온 책인 비극의 군인들을 이제 와서 다시 증보하는 이유는
- 국정교과서 편찬 관련
  -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등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 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원회 위원에 당연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 국정교과서 집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국정교과서 초본을 봤는지 및 초고본과 원고본에 대한 의견 및 주요 지적사항을 밝혀 달라
  - 국정교과서가 올바르게 집필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국정교과서 시대 구분 및 시대별 분량 배분에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 고대사·중세사보다 근현대사 부분에 지면이 많이 할애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국정교과서 원고본을 본 장소가 어디인지
- 졸속으로 집필하는 문제 지적
- 건국 시기와 관련하여 2015년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국사 과정에 대하여 마련한 지침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 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원장처럼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이가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심의한다면 교과서 서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집필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의제기가 분출된다면 또다시 재집필을 할 것인지, 집필진과 심의위원 명단은 언제쯤 밝힐 것으로 보는지
- 교과서 포럼에서 제작한 ‘한국근·현대사’ 책에 ‘좌파 역사학계에서 범한 오류가 바로잡혔다’라고 쓴 추천사의 의견이 현재도 같은지 및 추천사를 쓴 것은 책 내용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지
- ‘한국근·현대사’ 책의 내용이 동의하지 않으면 좌파인 것인지
- 김구선생의 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 5·16 쿠데타에 대하여 군사 혁명과 군사 정변 중 어떤 것으로 보는지
- 한중연의 ‘대한민국 정체 확립과 근대화 전략’ 연구과제에서 대한민국 정체성과 제주 4·3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한 견해
- 공산폭도 세력에 의해서 4·3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4·3사건의 희생자가 다 공산 폭도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선정한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과제에서 친일 문제 부분이 약술되어 있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친일 문제를 무감각하게 다루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므로 향후 연구 과제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안을 마련



할 것

- 친일인명사전 편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반대하였는데 그 의견이 동일한지 및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견해
- 백제는 반도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음. 우리 민족의 대단한 해양세력의 권위를 떨친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고 백제사를 제대로 복원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
- 나치, 731부대 등 제국주의의 잔재들이나 일본의 식민지배가 근대화  
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 을미사변과 의병에 대한 내용을 일본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쌀 수출  
이라고 표현하는 교학사 교과서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 교학사교과서를 옹호하는 성명에 이기동 원장의 이름이 올라가있는  
데 내용에 동의하는지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광복 70주년> 관련 서적 판매 중단  
및 배포 물량을 회수하고 차후 집필진 구성 시 균형 잡힌 역사학자  
로 구성할 것
- ‘사진으로 보는 광복 70년사’의 출판사 선정 심사가 일련의 정황  
상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고, 한중연 출판실의 자체출판 방식이  
아닌 위탁출판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 ‘사진으로 보는 광복 70년사’의 내용 수정은 누가 지시했고 이 지  
시는 누가 받아서 실행했는지
- 광복 70년 기념으로 한중연에서 출판한 책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에서  
대한민국 건국으로 변경하도록 출판 이후 수정이 되었는데 어떤 과  
정을 거쳤는지 및 출판사 선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
- 광복 70주년 과제 중 한국의 교육 70년의 결과보고서에 초중등학교  
교과서 서술의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함에도 건국,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한국의 교육 70년에서 체제 순응을 거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선동이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음
- 9억 8천을 들인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사에도 건국이란 용어로 변경되는 등 편향적인 서술이 보이므로 이 사업에 대하여 전면 중단할 것
-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사 위탁 출판사 선정관련 제안서 등 자료 일체
- 위탁 출판 공고가 한중연 외 어디에서 공고되었는지
-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용률이 높음에도 내용상 오류가 많아 대부분 민원을 통해 수정하고 있는데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 외국교과서의 오류를 적발해 시정을 요청한 것에 비해 반영되는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외국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인 바,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는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조정(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일임)을 통해 예산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역사·영토 및 주권 문제는 국가의 핵심이익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교과서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됨. 이를 담당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노력은 미흡하므로, 오류 시정 및 한국 바로 알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 작년 한해 거의 매달 부서장급 인사를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 교원 정원을 감축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불구하고 최근 신규 교수 5명을 임용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
- 한국학대학원 교원 정원 감축 필요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만 23명에 이르러 사실상 퇴임 후 모든 교수가 명예교수로 임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명예교수 임용 후 활동 실적은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드러남. 예산 투입 없이 명예교수를 연구원에서 제대로 활용할 방안은
-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버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있는 취지에 맞도록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 매진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보, 보물 등이 5년째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등 장서각 본도서 1만2천여개 중 8천여개(63%)가 훼손 되어 장서관리가 엉망인데, 2010년 이후 장서각 본도서 점검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한중연의 대책은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와 관련하여 오염, 열화, 충해, 충분, 마모, 결손, 구김, 찢김, 기타 사유로 손상된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소장 자료 보존상태 점검을 위한 상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공감한국학 관련
  -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감한국학’의 편향성이 질타를 받았는데도 2015년에는 겨울방학으로 연수시기를 옮겨 상당부분 동일한 강의를 배치하고 시행한 것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국회를 무시 하는 것 아닌지
  - 당시 지적을 받았던 편향적인 강의자료집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1년 반이 지나 그대로 쓰는 것은 지나친 불통이며, 무성의한 것 아닌지
  - 자료집 내용이 현재 역사교육이 북한의 대남전선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군사정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장 교육과 동떨어진 인식을 지닌 분이 강의를 해도 되는지
  - 이기동 원장은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기존의 한국사 역사교과서

에 대해 좌편향 교수와 교사들이 쓴 교과서를 비판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연수는 편향된 것이 아닌지

- 지난 1월 실시한 교사 대상 공감한국학 집중 연수에서 이념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교사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강사를 섭외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지진대비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대학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담당직원 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과 협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
- 각 대학의 운동부특기자에 대한 성적관리 학칙과 관련하여 학점관련 학칙 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 대학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칙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대교협이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최근 3년간 학과 통폐합이 빈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족 문제
-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므로 대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
- 대학재정 지원을 위한 법령체계 미비로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재정 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대학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방안 필요

- 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UP) 제도가 있으나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대책 및 해당 제도의 선전·광고 문제에 대한 지적
-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이후, 대학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접수 및 관리 절차
- 민원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력관리와 철저한 공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 수시모집 기간에 대학공통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재발을 방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전담 기관으로서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 상태를 대비하여 원서접수대행사와 함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비훈련도 시행하는 것이 필요
- 학교 현장의 취업계 관행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취업 준비중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며, 대학별로 상이한 취업 학점 인정 여부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부종합평가 관련 운영 자기소개서 대필,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의 80%가 위촉사정관으로 전문성 부족, 교사의 부담 및 컨설팅학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할 것
- 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검증 절차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사항, 즉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입학금 현실화, 졸업유예생 지원에 대한 의견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에 대한 사후 평가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므로, 최초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학령인구감소, 대학구조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 수록 대교협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립대 총장 직 선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겠는지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 해서 발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전문대학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할 필요
- 전문대의 평생교육관련 재정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한국교직원공제회】

- 출자회사 The-K제주호텔의 인력 채용 시 비정규직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
- 출자회사 The-K제주호텔의 외부업체 용역계약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기준이 명확치 않으므로 보완책 필요
- 더케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현황
- 학교장터 시스템 관련

- 학교 현장에서 소액 입찰에 사용하는 학교장터 시스템을 도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 일선학교의 학교장터 이용권장을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문 시행 및 이용실적을 공개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한 지적
- 이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대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직접운영수익률이 8.7%로 타공제회보다 월등히 높는데, 그 비결은
- 공제회가 투자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조건 SOC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발생 문제 등의 개선 방안
- 한국교직원공제회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평균연봉(6,484만원(알리오))보다 2,523만원이나 많은 9,007만원에 달하는데, MRG민자도로 투자로 수십년 간 수익을 내는 공제회의 고액연봉은 과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라는 지적
-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공제회지만,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지원에 18억(166회)을 지출하여 이는 SOC사업장 MRG 수익분의 0.3%에 불과한데, 앞으로 사회공헌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줄 것
- 2012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제회에서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
- 현행법상 공제회 결손지원 근거를 고칠 필요가 있으며, 공제회는 자산운용에 관하여 교육부·국회·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데, 공제회의 자산운용 관리체계·운용성과·투자심의·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 등 감독을 일원화할 필요
-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본회 투자금액 8,552억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난해 1월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할급여금을 만든 이유는
- 분할급여금은 제도시행일 이후에 퇴직한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여된 세제혜택을 더 많은 교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공제회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이는 회원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가.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사항>

- 문체부 여성 직원도 고위직에 올라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필요
- 수습직원에 대한 책임사무관제를 운영하고, 과도한 업무부여 방지 필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 요청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거부를 명시하는 등 법률 위반사항 시정 필요
- 정책연구결과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문체부의 연구결과물 중 미공개 건은 즉시 공개하고, “전체비공개” 선정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필요
- 문체부 통계포털 “문화센터” 통계입력 관리 필요
-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김희석 씨와 같이 부정한 돈벌이를 위해 정보력 등이 취약한 지역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한 대책 강구 필요
-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행태가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 조정 3개 과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하고 향후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대 자제 및 중복 사업 등에 대해 검토 필요
- 생계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배려한 새로운 사업 개발 필요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중요성이 큰데 처우개선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문체부 갈등관리 업무가 상당히 요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과주의 매몰의 전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 출범 시 제시한 국정과제를 완료할 필요
-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필요
- 문체부 과장급 이상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 연속성 및 정책 일관성 저하, 단기과제 집중에 따른 비현실적 정책남발 등의 폐해가 우려되는데, 공무원의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를 만들 필요
-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달 이상 공석인 고위공무원 직위가 32개나 되며, 한 달 이상 무보직이었던 고위공무원도 6명이나 되는데,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방석호 전 사장 관련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문체부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 방석호 전 사장 관련 다시 확인된 사실을 재조사가 필요
-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승마특혜 관련 조사에 따른 압력에 못 이겨 끝내 “명예퇴직” 했다고 한 보도가 사실인지 조사할 필요
-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 문자 발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불법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어 지하경제 근절 방안 마련 필요
- 인터넷, 모바일 등 불법도박 시장을 찾아내고 감독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불법도박 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신고제 등을 도입해 세수확보 및 단속실효성 확보 필요

-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대응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자금을 수면 위로 드러내 사회적 자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문화정책관>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특정 장르(도서·영화)에 편중되어 있으며, 문화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이용 분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나눔티켓 사업은 홍보(대상자 알림 시스템, 자동 회원가입 등)가 중요하며, 티켓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92.6%)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 NH농협에 제기되었던 민원(적은 수수료, 민원 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관카드사(NH농협) 선정 이유가 무엇인지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자격 검증 시스템 및 홍보(부처 홈페이지 사업 소개), 주민센터 발급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잔액 이월 가능 여부, 시내버스타uer(관광) 및 ‘문화가 있는 날’과의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중요한 사업만큼 소속기관 등 자체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퇴근 대신 주중 2시간의 초과근무 및 상사와의 단체관람 불만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우리말의 고품격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어전문관을 지정하고 전문용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서 능동적으로 전문용어의 직접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학술용어에 대한 어문규범 특례규정을 ‘국어기본법’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미래부가 진행 중인 다언어 입력 플랫폼사업의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외국인 한국어 교육 시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
- 파견 국가의 비자 문제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 파견 시기를 조정하고 교사의 파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교원자격증 소지자 파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정확한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원 해외파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파견 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추진하는 문화ODA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 협력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직장인들의 휴가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여가와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 문화재관리를 위한 사찰 관람료 징수 논쟁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관련 사업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규정 때문에 수학 교육 현장에서 용어 표기의 혼란이 생기고 있는 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는 오랜 시간 일관성 있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수학교과서의 ‘최댓값, 최솟값, 근삿값, 대푯값, 기댓값, 꼭짓점’ 등의 용어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 문화가 있는 날 자체에 대한 인지도 조사보다는 국민의 실질적인 문화향유 수준 및 인식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현재 국어기본법 제4조만으로 충분히 지역어를 육성하고,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 지역어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어 보존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규정 보완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없다고 보는지
- 지역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사업 현황 및 예산 규모는 어떠한지
- 지역어와 관련된 2017년도 사업 및 예산 요구 현황은 어떠한지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비해 지역어에 대한 연구자 수나 논저 수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신방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한국어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역어 보존 및 육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경상북도의 경우 최근 지역 내 방언 연구량과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인구 고령화로 지역어 조사 대상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연구 인력 또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지역어과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국립국어원의 조직 내에 지역어를 연구하는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지역어 보존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립방언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지난 참여정부시절 추진되었던 ‘남북지역어조사사업’ 및 ‘직업별 전문어 조사 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 문체부 또는 국립국어원에 전국 지역어 보전 발전 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지역 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격차가 존재하고, 문화 나눔의 확산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지방을 우선 배려하여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다문화 사회·통일시대 문화정책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 문화융성 위원들의 출석률이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향후 문화융성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 문화융성위원회는 정책추진현황 점검 및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내실 있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 아래 우리 문화예술정책의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지향적 문화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문화 사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문화라는 것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경험과 함께 문화향유 욕구도 높아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가 지역인들에게 보다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 다양한 장

르의 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예술인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지자체가 고유한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지원해 미래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
- 관광브랜드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CREATIVE KOREA와 통합하겠다는 것은 전략적 일관성이나 계획 없이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다음 정부 출범 시 브랜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등 국가 차원의 대형 브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문화다양성 업무 소극적 추진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방안은 무엇인지
- 국외 한국어 보급 브랜드 통합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 전체 세종학당 강사 478명 중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171명(35%)에 불과한 바, 파견교원의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확대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교원자격증 소지자 파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정확한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원 해외파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독립성과 선진 연구체제도입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예술정책관>

-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체부에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 2015년 5월, 청와대로부터 블랙리스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관리·처리 지침과 함께 하달되어 실제로 예술계 곳곳에서 검열·제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지적
- ‘정치검열’로 정부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 지원심의 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아리랑콘텐츠 개발 사업진행방식에 대한 개선 및 목표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국립오페라합창단 재 창단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현재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 3명이 국립합창단에 재입단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립예술단체장 임명에 대한 검증절차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소규모 공연장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연장 관객 관리에 대한 안전 지침과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정기적 안전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미술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 미술시장과 작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미술품 유통과 관련하여 투명한 세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와 미술진흥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작용과 잘못된 정책 양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
- 예술인 패스와 관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은 혜택 수준이 미미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사업 취지를 못 살리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시설 또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절반 정도 몰려있어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
- 보상 합의 지연으로 6년 째 제자리걸음인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사업의 결론을 조속히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관련,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이 줄어든 이유와 교육자 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현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법 제6조4호), 교육기회 제공 현황(법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현황(법 제27조의3),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현황(법 제15조) 등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는 바, 법 시행에 대한 우려 지적
- 최근 3년간 2개 지역센터만 지정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낮은 예산집행율의 이유가 무엇인지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시행 부진 이유가 무엇인지
- 양적으로만 팽창해 유향 상태에 놓인 지방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i)공연이 활발하고 콘텐츠가 풍부한 문예회관 사례 연구분석, ii)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iii)우수한 문화전문 인력 육성, iv)콘서트 뮤지컬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연구, 연수 기능에 대한 강화방안이 무

엇인지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2015년 4월 완공 후 5월 말에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개관은 작년 11월에 했다는 지적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약 6개월동안 운영도 하지 않으면서 센터의 관리 비용이 지출되어 국고가 낭비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이사장을 장애인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은 신종호씨로 임명한 이유 및 지금까지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구성이 완료 될 예정인지
-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사업이 중단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 전국에 118개소(사립 53, 공립 65개소)의 문학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문학관 중에서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활용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 시조나 수필 등 장르 특화, 또는 작가나 인물에 한정하지 않고 근·현대 전반을 전시 관리하는 문학관이 있는지
- 인근에 위치한 근대건축물을 매입하여 한국근대문학관을 활용, 국립한국문학관으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예술인복지재단에 어떤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는지
-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절반이 넘는 151건, 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등이 계약서 작성을 장려하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문예기금이 지난 40여 년 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서 큰 역할을 했으나, 2003년 말 모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고갈 위기를 맞이했으며,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
-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국립예술단체장 임명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증절차가 미흡하고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공연티켓 1+1은 준비미흡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 바, 향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단체들의 보조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공공시설물이거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다보니 체계적으로 관리되는데 비해, 중·소 공연장은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아 위험 요소가 많고,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소규모 공연장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
-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법 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문체부 공연장 실태조사 자료는 2014년 자료뿐이고, 2016년도 등록 공연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인원 11명 중 실질적으로 5명만 안전지원, 안전진단 업무를 보고 있어 공연장 안전관리를 총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 소규모 공연장 안전키트 지원사업이 진행중인데, 현재 100개소 중 67개소만 참여중인 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 현장에서 안전키트의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방염, 노후 안전시설 지원, 안전교육 등이라는 지적
- 안전키트에 대한 설문조사 등 현장 의견 수렴이 없었고, 홍보도 미흡해서 지원율이 낮았다는 지적
- 소규모 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지원율도 낮고 홍보가 안 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
- 공연장 안전에 관련해서 현장을 잘 아는 공연 전문가, 엔지니어, 교수 등 민관 합동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

- 공연장 관객 관리에 대한 안전 지침과 매뉴얼 개발, 보급 및 정기적 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체계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연장 안전관리 정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예술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며, 단기적 관점의 재원 확보보다 근본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현재의 예술생태계에서 신진예술가들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
- 신진예술가에 대한 기금사업에 좀 더 집중하여 시장진입을 도움으로써 예술가의 자생적 예술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우 문화창작 기반이나 여건 등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
- 지역 거점별 교류사업이나, 비수도권 예술가들을 발굴·성장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예술가들이 지원금을 받는 절차나 정산 과정 등이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지적
- 보조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로비를 이사회에 승인도 거치지 않고 문체부에 무상임대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아리랑 콘텐츠 개발 사업이 사업목적 및 추진체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
- ‘15년 아리랑대축제의 경우 K-pop스타 위주의 일회성 행사로 방송사 협찬으로 상당액을 사용하였는데,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지

-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기금을 받고도 작품집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예술위원회의 회의록 문건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실제 블랙리스트가 각종 지원 사업 심사에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례들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바 있음.
- 예술계 곳곳에서 정치검열, 제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치검열’로 정부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체부에 보냈는지, 블랙리스트가 산하기관 심사 등에 적용되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중징계 필요
- 문화예술 지원심의 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문화기반정책관>

- 국립박물관 수장고 상황이 100%가 넘는 곳이 많고, 문화재 관리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등록 사업 추진 시 단기 일자리 늘리기가 아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체부 산하 박물관 소장품의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중원문화권을 비롯한 고유한 지역 역사 및 문화 발굴에 관심을 가져 지원해 주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2016년도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미정리유물 등록사업이 단순 장비 사재기 및 단기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닌지
-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입비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미술관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책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지역적 편차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8의 지진 발생 시 국립경주박물관의 피해가 미미한 바, 재난대비를 잘 한 모범사례라는 지적
- 국립경주박물관의 재난대비방법을 타 시설에 확산할 계획이 있는지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사서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문체부의 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 <콘텐츠정책관>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허가과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법인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부실하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취소 필요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은 위계에 의해 명백하게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허가신청 서류에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전경련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필요
- 기안 결재 시 날인이 되지 않은 정관 파일을 첨부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은 누락한 것, 일과 시간 이후 법인설립 허가 결재가 정상적인 절차인지
- 미르재단 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
- 미르재단 설립 시 총회 회의록이 설립요건이 아니더라도 회의록이 허위자료이므로 과태료 처분 필요
- 한국관광공사 서울 사옥의 용도 변경, 125억원의 기금전용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돌연 사표를 내고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부임하며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 피력 요구
- CGV 좌석별 차등요금제로 가격 인상, 영화상영관 행정지도를 통해 편법적 가격인상에 대한 조치 필요
- 영화관 판매 팝콘 가격이 공정거래 위반이라 판단되므로 적극적 행정지도 필요
- 사드로 인한 업계 피해상황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콘텐츠업계 사드 피해조사 등 분석 후 신속한 대책 마련 필요
- 게임문화진흥계획에 민간기업의 재원(458억원)으로 (~을) 마련하겠다는 부분 재검토 및 정부 규제 폐지를 위해 게임문화재단 100억 원 출연 강요 중단과 관련자 책임 조치 필요



- 영진위 사무국장의 지나친 여비, 근거 없는 통신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조사 및 징계조치 필요
- 최근 한국영화 동반성장을 위해 부율이 극장 45%, 배급사 55%로 조정되었는데,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참하고 있는 반면 메가박스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바, 공정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 필요
- 원천콘텐츠로서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사업인 아카이빙 사업의 강화 필요
- 만화 아카이빙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만화박물관과 한국만화도서관을 문체부 산하에 두고 직접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문화융성 실현과 국산 공연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CT 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필요
-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의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 마련 필요
-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관객들에게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문체부-영진위-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 마련 필요
-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 요소와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 검토 및 기술수요 예측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국내 게임산업에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모바일 게임 모니터링 부실과 관련해 모니터링 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미성년자들을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게임산업 중복규제를 게임법으로 일원화하고, 섯다운제 폐지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자 환불시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나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의 확대 적용 계획 수립 필요
- 현행 과징금 제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징금)에 의한 시행규칙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사업자, 모바일게임사업자 등이 빠져있어 하위규정 정비 필요
-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게임 개발과정 중 질의하는 경우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
- 게임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현행 행정·형사적 제제 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별도의 후속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
- 게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책 필요
- 게임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 게임산업진흥에 적극적 지원 필요
- 등급분류 수탁기관(G.C.R.B.) 재지정을 위한 준비와 대응방안 필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사업자 안내나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음
-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문제가 있는 제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의 중단 필요
- 영진위의 보조금 관리규정 상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

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영진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문체부 감사관실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소관과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관련자 조치 필요
-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해결 및 제도 개선, 영진위 조직 정비,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인 단체들과의 대토론회 필요
-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업계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콘진원의 지원과제 선정·평가 방식 개선 필요
- 완성보증지원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출연금의 46%가 구상권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진흥원측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아시아문화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특혜 의혹, 전 문체부장관 보좌진의 인사 및 예산 전횡을 행사한다는 제보와 관련 특명감사 필요
- 통일된 문체부의 R&D 전문기관이 없어 기획,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바, 문화기술과 스포츠기술이 접목 등 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관리기관 통합이 필요
- R&D 지원 시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최근 5년간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0.9%로 미미한바,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요소 파악 및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검토하고 기술수요 예측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2012~2015년 콘텐츠진흥원의 연구 중단 사례가 19건인데, 중단된 연구과제는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므로 연구과제 수행

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데,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 강구 필요

## <저작권정책관>

- 캐릭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수입경로 차단과 캐릭터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영화 및 방송음악 저작권료 편취 문제의 개선 필요
- 바둑 기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한국기원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의향이 있는지
- 영화 및 방송음악 저작권료 편취 문제를 개선 조치 필요
- 문화통상팀의 ‘과’ 승격 및 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의 개정 필요성 검토 필요
- 해외저작권 보호 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등 저작권보호원과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저작권보호원 역할을 정립할 필요
- 「저작권법」상 “방송”은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에 한해 적용되므로 아프리카 TV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업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지
- 아프리카 TV와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소송 변론기일 하루 전에 공문을 보내 방송으로의 계약변경을 지시한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 아프리카 TV의 법적 성격에 대해 법제처나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행정소송과 업무개선 명령 불이행 관련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사태를 방치하지 않아야 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에서 K-pop의 저작권 관련 수익을 받아오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대한 행정명령 남발

## <미디어정책관>

-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3개 상영관의 관람요금 인상 및 매점 판매 상품의 비싼 가격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 메가박스의 공정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
-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에 대해 하루 빨리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인터넷신문이 최근 10년 동안 10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낚시성 기사, 반복기사, 선정적 기사와 광고 등의 문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 인터넷매체의 사이버언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포털이 단순한 뉴스 중개자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익을 향유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적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사)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을 글로벌광고인재센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 청개구리광고학교 이사진 9명 중 이동수 전무 및 김홍택 대표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 인터넷신문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시행률이 39.4% 불과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역할이 막중하나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줄 수가 없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
- 빛마루 개관 3년차로서 가동률 저조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는데, 가동률 개선을 위한 노력과 현재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 빛마루 가동률 저조('15년 56%, 16년 54%)는 방송제작 환경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진단은 어떠한지

- 빛마루 개관 시 착공 당시보다 스튜디오가 20%이상 급증('11년 476개 → '13년 573개)하였는데 이러한 변동추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닌지
- 제작환경 변화에 따라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빛마루의 시설전환 등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종무실>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관련 정산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 시스템 구축 필요

### <체육정책관 · 체육협력관>

- 문화체육관광부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와 감독권이 있으므로 관련 의혹의 적극 해소 노력 필요
- K스포츠재단의 설립 의혹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조사 필요
- 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설립허가가 신청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점, 허가신청서를 서울까지 와서 받아간 점, 창립총회 회의록과 재산출연내역서 등 신청 서류의 문제점, 전경련을 통한 출연금 할당 모금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감독 부실 문제와 설립허가 취소 가능 여부 등 지적
- 회의 없는 창립총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검토 필요
- 국회 입법조사처의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취소 결단 필요
- 전직 체육국장 및 과장의 명예퇴직 관련 문제
- 늘품체조 선정 및 스포츠영웅 선정 문제
- 스포츠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

## 하는 제도 마련 필요

- 스포츠 선수 성폭력 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 레슬링협회는 항공권 구매를 1985년부터 지금까지 31년여간 세종 여행사에서 독점하여 왔으며, 최근 10년간 확인된 항공료만 22억 3,000만원에 달하고, 선수들이 신는 레슬링화도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하는 나쁜 행태를 보인바,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조사 및 시정 조치 필요
-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종목별 전담팀 구성 및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지원 필요
- 현행 체육중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에서만 도핑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운동부 선수 및 코치(지도자)에 대한 도핑교육 확대 필요
-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현황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부담금 부과 등 대책 필요
-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정책 수립 필요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 필요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체육청 신설 필요
- 체육특기자 문제 등 대학스포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레저스포츠 안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스포츠강좌 수강이 어려운 유·청소년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 선정 지연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 안전의 사각지대인 스크린야구장을 체육시설로 관리 필요
-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프로스포츠 경기장 지진 대비 등 안전 매뉴얼 마련 필요



- 국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을 국제기구로 격상 필요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점검 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산업·문화·관광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 하에 올림픽준비 컨트롤타워를 만들 필요성 제기
- IOC홈페이지에 아직도 일본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과 이름 되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일반학교 운동부에서는 전문적인 도핑교육이 전무하여 도핑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실업팀 확대방안 마련 필요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스폰서십 유치에 대한 관심 필요
-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실속 있는 대회로 치러질 수 있게 철저히 준비 필요
- 평창슬라이딩센터 안전상태에 대한 확실한 점검 필요
- 체육시설 합동점검 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 필요

## <관광정책관 · 국제관광정책관>

- 문화관광축제 지원대상에 매년 같은 축제가 선정되고 있는데 평가 지표 개선 방안 등을 통해 신규축제의 진입방안 마련 필요
- 공유민박업을 기존 업계와의 충돌을 조정하면서 제도권 내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20년 단위의 장기플랜 수립 방안 마련 필요
- 호텔등급 표시 변경에 대해 2019년까지 신규 표시제도가 공존함에 따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암행평가 비용을 호텔에 부담시키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굿스테이’의 당초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관광산업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관광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는 원인을 파악한 후 맞춤형 대안을 검토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을 마련 필요
-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캠핑장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국내여행사들이 해외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필요
- 관광특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관광특구 중심 지역 활성화 및 외국인 유치 전략 마련 필요
- 지역에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관광특구의 기본요건 충족 미달, 지자체와 문체부 통계자료 상이,

제주도 특구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등의 상황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제도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통역안내사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대책 마련 필요
-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와 관련, 매출실적을 평가할 때 일정기준 이상이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데 제출한 여행사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과도한 매출경쟁을 초래하는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지역할당제 고려 및 자치단체 추천여행사 우선지정 제도 도입과 서울과 지방 전담여행사 지정개수를 별도 지정하되,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 필요
- 근대화, 산업화, 한강의 기적 등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축약 형상화할 수 있는 대표 건축물 건립 필요
- 밀라노엑스포 소관부처 변경 및 한국관 감독이 차은택으로 변경된 이유, 예산 증액 및 업무이관 이전 업체변경 관련 법률자문 의뢰 실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밀라노엑스포 사업기간이 3차에 걸쳐 연장된 사유와 정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필요

### <국민소통실>

- 정부부처가 언론사 기사를 사실상 돈을 주고 사서 부처에 유리한 보도를 나가게 하는 정책 홍보 방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문체부의 대책 마련 필요
- 국정홍보 사이트인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국정과제가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작성된 문건이므로 확인하여 개선조치 필요

- 문체부장관은 정부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정부 주요업무 발표 시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그 방안을 마련 필요

## 나.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내진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사업 제적생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난 8월 무대미술 실기시험 당시,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았던 문제 및 출신학교·학원에 대한 질문을 금지한 면접규정을 위반한 면접관의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떠하였는지
- 입학시험 징계자에 대한 입학시험 관리지침 변경 내용은 면죄부를 주는 방향이 된 것은 아닌지
-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징계자에 대한 관리지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등록금외 납부된 실험실습비를 징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 한국예술종합학교 실험실습비 징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금년 초 해임된 실기조교 건과 관련하여 각 원별 실기조교 해임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최근 5년간 한예종 교원 겸직 승인율이 100%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 한예종에서 제출한 직원 현황과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직원 현황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 2013년~2016년 10월 현재 정규직·비정규직·무기계약직 현황이 어떠한지

- 무기계약직 전환내역은 어떠한지
- 2013년~2016년 각 년도별 및 각 직급별 1인당 임금보수 평균액은 어떠한지
- 2013년~2016년 각 년도별, 각 직급별 무기계약직 1인당 임금보수 평균액은 어떠한지
- 2013년~2016년 각 년도별 무기계약 대상자 수와 전환율,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2년 도래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건별 사유는 어떠한지

### 【국립중앙박물관】

-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품 중 27% 정도가 미등록 상태인데, 신속하게 등록하여 유실·도난 등을 대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립국어원】

- 교과서 등에 쓰이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를 일관성 있게 표기할 수 있는 방안(국어기본법 특례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역어 보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한글맞춤법 사이시옷 규정 때문에 수학 교육 현장에서 용어 표기의 혼란이 생기고 있는 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는 오랜 시간 일관성 있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립중앙도서관】

-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시행이 필요하

다는 지적

###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 2016년도 외부강사 채용 부정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악원 외부강사 채용 시 심사위원이 아닌 국악원 내부직원이 심사점수를 채점한 것은 전형적인 부정이 아닌지
- 모집공고에서 응시자격을 국악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을 명시해 일부 기존 강사들은 지원조차 못하고, 일부 강사는 규정에도 없이 예외를 적용하여 특혜 채용한 것에 대해 원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선발과정에서 경력 15년차의 전문강사를 평가점수 최하점으로 탈락시키고 국악강습 무경험자인 내부직원 자녀를 선발한 것은 어떤 기준인지
- 문체부 장관은 국악원의 위와 같은 채용 부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국악원의 2016년 외부강사 채용은 대단히 부적절했으며 내부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진으로 인한 위험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문화재 안전을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 취한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 지진 이후 국립민속박물관의 건물상태는 어떠한지
- 국립민속박물관은 진도 4.5이상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지
- 국립민속박물관의 건축물 보강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지,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조하였는지
- 내진보강을 이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 【국립중앙극장】

- 국립극장 용역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책과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립현대미술관】

- 유료회원 이탈수 증가에 따른 유료회원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립현대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미술관의 핵심업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운영기관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바, 잘못된 규정을 재개정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전문가인 관장을 중심으로 독창성, 기획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인사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이, 미술관 주요업무는 문체부와 협의하거나 문체부가 위촉한 위원장이 각 위원회를 맡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정이라고 보는지



###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

-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및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을 통해 사업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나, 국립국악중 · 고등학교의 사업성과는 사실상 대학교 진학결과로만 측정되는 것 아닌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전남도청의 역사 현장들이 사라져갈 위기, 광주시민 및 5.18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 필요

### 【해외문화홍보원】

- 재외문화원장 및 재외문화원의 관리·운영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순방 문화행사의 준비 과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 필요
- 외신지원센터는 산케이 신문 외신기자증 발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차후에는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 필요
-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케이스포츠재단 등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

##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전체회의에 당연직 위원 참석 비율이 낮아 개선 필요
- 불법 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 도박시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현재의 매출 총량 산정 방식은 매출 총량 초과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사감위에 실질적인 현장 감시요원 제도 도입 등 사감위의 기능과 조직 개편안 마련 필요
- 청소년 도박이 심각한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주민들과 마찰 중인 용산 화상경마장이 매장을 확장하는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데 대하여 사감위의 실태조사와 조치 필요
-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 등의 사감위 활동에서 벗어나 범정부적 단속기구로 격상시키는 정부부처 차원의 협의 추진 필요
- 불법도박을 제대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수익 환수 사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사감위 등이 심의 없이 즉각적인 조치 필요
- 최근 불법 사행행위로 인한 도박중독으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는 상담자가 늘어나고 있는바, 지역적인 불균형과 온라인 도박시장의 확산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문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검토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정감사 시 회의록 축소 제출 및 관리 미비에 대해 관리규정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 '16년 기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수혜 작가의 작품집 미발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문예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후원 감소로 공연계가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문화접대비를 활용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 소외계층 나눔티켓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 올해부터 주관처 공모사업을 통해 특정 기획사를 통한 사업 진행으로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 주관처 선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일부 기획자의 특수관계인 집중 출연 및 일부 기획사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
-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시키고, 협약 체결 주체를 공연단체에서 공연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 불만 및 단체와 극장간의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 아르코미술관의 경우 관장이 부재중이고, 조직구조 또한 문학시각 예술본부 아래에 속해있어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인 역할 및 역량을 보여주기 어려운 구조라 판단되는 바, 향후 아르코미술관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정감사 시 회의록에서 미르 경총 회장 발언, 블랙리스트 발언 등 민감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 조작하여 제출하고 원본이라고 위증을

한 바 있음. 책임자 등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중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블랙리스트, 정치검열 문제가 회의록 문건을 통해 확인됨.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문체부를 거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침으로 하달되어 지원 사업 심사에 적용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중징계 필요

### 【세종학당재단】

- 해외 한국어 보급 수요 증가에 따른 파견되는 교원의 성격은 사실상 공무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나, 관용여권 발급이 되지 않아 교원 파견 지연되는 등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
- 세종학당에 국외파견되는 한국어 교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용여권 발급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해외 파견교원의 관용여권 발급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브랜드 통합이 되었는데, 교원 재교육 및 연수에 대한 세종학당재단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 세종학당 양적인 확대 및 모바일 교육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
- 중국의 자국어 보급기관인 공자학원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운영예산에 대한 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세종학당 파견교원은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교원의 처우가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데, 이에 대한 향후 처우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세종학당재단의 경우 정규직 정원대비 비정규직이 135%로 많은데, 비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브랜드통합 이후에 관계부처로부터 업무 통합에 따른 예산을 이관 받았는지
- 현지 세종학당의 열악한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정원의 100%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 인원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문화소외계층 의무참여비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소외계층 참여 모집 미달 시 실질적인 조치나 규정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고도화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연구, 연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연구용역 관련, 2012년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위탁시기가 적절했는지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약주체 문제, 지역센터 중앙일원화 및 2017년 사업 추진에 대한 진흥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문체부의 입장이 바뀐 이유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당초 사업취지에 맞게 대도시가 아닌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 등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시설 등의 접근기회가 취약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국공립 문화예술교육 시설에는 문화예술교육사를 올해 2월 18일까지 의무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배치 대상기관인 1,749개 중 단 39개, 2%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
- 올해 신규강사 증가 수, 예술강사를 배치하지 못한 학교 수, 배정된 예산은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 예술강사 미배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수급 조건은 어떠한지
- 문화재단에서는 예술강사 수업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의일만 근로일로 신고하기 때문에 예술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은 어떠한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양적으로만 팽창해 유희 상태에 놓인 지방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문예회관에서 피아노 구매시 국내 브랜드 구입 유도 또는 선호하는 해외 브랜드라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관련하여, 소외계층 의무초청 달성율이 2012년 77%, 2013년 78%, 2014년 80%까지 올라갔다가 지난해 69%로 크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사업 관련하여, 소외계층 의무초청 비율 미 달성기관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 **【한국문학번역원】**

- 기관의 현재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2016 비정규직 목표관리계획서에서 받은 비율보다 증가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목표비율 5%를 준수하기 위한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 관련하여 월 임대료, 월세보증금, 월 관리비, 계약기간은 어떠한지
- 임대차 계약에 앞서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여부와 협약 조건에 대한 단서 내용은 무엇인지
-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 관련된 계약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
- 문화역서울 284(구서울역사)는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임원급 보직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
- 문체부 국가브랜드개발지원반 사무실의 진흥원 갤러리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무상임대 기간 및 이사회 의결 여부, 문체부 사무실 임대 요청 시기, 문체부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예술계 영향 최소화 및 문화예술공연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대책은 무엇인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적 권리와 기본권이 어느정

도 개선되었다고 보는지

-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 중 34건은 여전히 처리중이며, 70건은 별도조치 필요로 사건을 종결시킨 바, 사건 하나하나를 더욱 꼼꼼히 챙겨서 단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시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국악방송】

- 내년 7월 대전국악방송 개국을 위한 시설설치 예산만 반영된 채 인력은 엔지니어 1명만 확보되어 정상 개국이 우려되므로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 사실이 있는지
- 국악가요 1위와 2위 곡이 무엇인지
- 전국 가시청권을 갖기 위해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지
- 영상채널 확보 가능한지

### 【예술의전당】

- 수익사업에 열중하기보다는 공연을 개발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자체 공연전시 예산 부족 시, 국회·정부에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2차 공공기관 정상화 명분아래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이 비정상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 예술의전당의 수지차기관 지정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시상식을 폐지하고, 예술대상 예산의 전환사용 계획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
- 서예박물관 전시 중 전통서예 전시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
- 향후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등 전국서예가 자문위원 조직 등을 통해 서예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
-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 사유 및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 소속외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한국박물관문화재단】**

- 성과연봉재원에서 준비한 9천만원의 판매장려금 재원 중 3회에 걸쳐 3천만원을 판매지원금으로 활용하고 남은 재원을 반납한 후 해당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 사장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 적 있는지
- 사장은 재단 내에 일선의 금전수수 비위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연세대 김형수교수 관련 R&D 과제성과 미흡 및 관리 부실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필요
-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지원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지원 편중 문제 개선 필요
- 벤처단지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콘텐츠 개발 사업화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종합감사 필요

- 모바일게임서비스 약관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용 관련 표준약관 개선 필요
- 사드배치 관련 중국시장 진출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중국 자본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 전망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국산 캐릭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의 근절 대책 필요
-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빙샘전자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기관인 머큐리소프트는 원장이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회사로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있으며, 최초 국가 연구과제 제안자(전자부품연구원)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항목이 단편적인바, 계약서 내용, 연습생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계약기간 내 데뷔여부, 계약을 둘러싼 분쟁 등 조사항목을 대폭 확충할 필요
- 중국의 우리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에 변호사 채용을 검토할 필요
- R&D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기술수요와 시장예측 등으로 성과도출 노력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모사업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공모 선정작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VR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유통망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학교산협단과 연계되어 있는 와이맵이 벤처단지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닌지 검토 필요
- 해외 게임기업의 먹튀 영업방지를 위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및 게임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중국의 K-드라마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른 해외진출 개선방안 및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인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빗마루 이용료 인하 및 가동률 제고 등 빗마루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영화 광고 시간에 들어가는 수익을 관객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영화산업 제작현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지원제도 홍보, 문체부와 영진위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최소화 필요
-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의무화 및 기술적 플랫폼 구축 방안 제도 마련 필요
-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 할 수 없도록 규제 필요
-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영화 정책연구조사에 소비자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SSL9000J 콘솔 장비를 영화제작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영화인들이 요청도 하지 않은 렌더팜 사업에 140억원이라는 기금을 쓰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설계용역을 엘지엔시스와 수의계

약한 것도 적절하지 않음

- 렌더팜 구축 사업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엘지엔시스, 쌍용정보통신, KT로 대기업만 참여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 기존 사무국장에게 지급하지 않던 통신비, 관사비 지급(관련규정 제정)에 대한 개선 필요
-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서 출장기록 없이 출장을 실시한 이유
-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기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메가박스로 하여금 부울과 VPF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 방안 마련 필요

### 【영상물등급위원회】

- 일본 감독 작품이 한국 감독 작품으로 둔갑하고, 성인물의 대사가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다소 높음으로 결정되어 등급 심사 판정이 허술한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6%에 달하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바,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최근 등급분류 받은 한국영화 중 청소년관람불가(청불) 영화가 지난해는 52%를 넘는 등 한국영화에서 청불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청불 한국영화 증가 현상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청불 중심으로 한국영화가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배경과 영화시장의 미래, 영화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필요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균형 갖춘 규제의 적용”이 필요한 바, 게임산업 진흥

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 불법 뽑기 게임기의 사후관리 필요
- 등급분류거부게임물의 운영 및 등급분류신청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 필요
-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게임 과몰입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힐링센터 필요
-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지나친 규제, 예외 사유 필요
-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진열된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게임물을 철거할 필요
-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확대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방안 필요
- 미성년자들의 모바일 게임 사행성에 관련한 장치마련 시급,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시정조치를 어기고도 차단되지 않은 채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점, 사업자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선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2017.1.1일자로 시행되는 직권재분류 조치 등을 비롯한 각종 강제 권한을 이용한 불법사행성게임의 오픈마켓 모니터링 및 도메인 차단을 강화할 방안 및 계획 필요
-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 인원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선정성 등급 분류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
- 사전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 필요
- 국내소비자 및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주는 먹튀 영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불법 성인게임장은 극성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은 퇴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위원회 대책 마련 필요
- 불법적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 중국발 “극한도전” 등 중국의 방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마련 필요
- 유관기관 간 협조하여 국내 캐릭터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 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 검토 필요

### 【아시아문화원】

-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 활용방안 재검토하여 5.18정신과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구현하고 5.18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용에 대한 건설적 대안 마련 필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고 사재기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가 증가함.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 두 명의 이사가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둔 이유가 무엇인지
- 10개월 가까이 이사 2명 공석, 전문성 부족한 인사를 임명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회가 파행 운영될 우려가 있는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정관에 미디어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나, 당연직 이사의 불참율이 높다는 지적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조항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
- 이사진의 출판 전문성과 경력 등이 자격이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횟수를 2회에서 좀 더 늘려 이사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도서정가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과금을 올렸음에도 위반 정도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사재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신고자 포상금제도 시행되었음에도 왜 아직도 기승을 부린다고 보는지
- 상근위원과 심의위원 단 2명의 사전 심의 후, 약5~7명의 심의위원이 심의회의에서 단 1시간 만에 안건 설명만 듣고 형식상 심의하다보니 선정적인 만화책임에도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문제점 지적
- 현재 진행되는 간행물 심의 절차가 형식적 심의절차에 그치지 않고 심의위원 역할에 맞게 꼼꼼히 사전 심의와 회의가 이뤄지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한국언론진흥재단】**

- 재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경유 정부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대책을 세워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
- 광고대행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광고대행 업무기관의 복수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정부광고와 관련하여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광고 직거래와 관련하여 언론진흥재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 정부광고 직거래 감소를 위해 재단은 어떤 대책과 활동을 시행하였는지
- 현행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는 10%로 민간 광고대행사들의 수수료 요율이 통상 15~20% 수준인 것과 비교해 5%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해외광고의 4%에 비하면 높은 책정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인하 방안은 무엇인지
- 정부광고 직거래 금지를 통한 대행수수료 확대 추정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 일부 보수언론매체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 언론진흥기금의 고갈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 언론진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언론진흥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문체부에 해결요청 또는 협의를 있었는지
- 올해 4월 <뉴스저작권 위탁 신문대상 2016년 지면(PDF) 수집 및 가공사업>을 입찰에 붙였는지
- <뉴스저작권 위탁 신문대상 2016년 지면(PDF) 수집 및 가공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진행해서 가격입찰을 통해 3순위 업체까지 결정되었는데 1, 2 순위 업체가 모두 협상이 결렬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당초 제안에는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조정안을 들고 협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3차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런 조건을 일부러 제시한 것은 아닌지

### 【국제방송교류재단】

- 아리랑국제방송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19대 국회에서 설립근거법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 20대 국회에서 설립근거법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 이직률이 높는데 인력유출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지
- 특히 보도기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 보도기자 중 계약직 현황은 어떠한지
- 타 언론사 대비 채우는 어느 정도인지
- NHK월드 대외홍보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언론중재위원회】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해당보도와 이에 근거한 비난 댓글이 인터넷 상에 그대로 전파, 복제돼 피해 발생하고 있는 바, 인터넷 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땅콩회항’ 사건의 한 승무원 사례처럼, 정정보도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상에는 잘못된 언론보도가 복제 전파되고, 명예훼손적 댓글이 검색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언론중재법은 신문, 방송 등 전통매체를 중심으로 마련된 정정보도 게재 청구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잘못된 인터넷 기사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나 위법적 기사 댓글이나 폼글 등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지적

- 인터넷 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 사이버 언론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사이버 언론이 포털과 제휴를 맺으면 영향력이 상당해지고, 포털이 허위 기사나 협박성 기사의 주 유통 경로라는 지적
- 포털이 단순 뉴스 중개자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익을 향유하는 만큼 이에 상응한 공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 인터넷 미디어 언론피해 구제 필요성은 인정되나, 언론중재위가 마련한 관련 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 또한 적지 않은 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
-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좁히기 어려운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섬마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와 이에 달린 위법적 댓글이 인터넷 공간에 검색·전파돼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기존의 피해구제수단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합당한 피해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
-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한 인터넷 상 보도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민체력100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유해성 검사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 스포츠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과 홍보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케이토토 감사자료 요구 거부가 계약해지 사유인지 확인 필요
- 스포츠포토 공영화 추진 관련 검토 필요
- 공공기관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케이토토 비리 문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 스포츠센터 매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개선 필요
- 에콜리안 골프장의 운영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검토 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 필요

### 【대한체육회】

- IOC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국가대표선수 선발규정 개정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올림픽 AD카드의 배분 시 비실무자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필요
-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대학운동부 해체를 막을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책 마련 필요
- 약물과 편파판정 등 스포츠 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 필요
- 레슬링협회는 항공권 구매를 1985년부터 지금까지 31년여간 세종 여행사에서 독점하여 왔으며, 최근 10년간 확인된 항공료만 22억 3,000만원에 달하고, 선수들이 신는 레슬링화도 폭리를 취하면서 판매하는 나쁜 행태를 보인바, 관행처럼 이어져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조사 및 시정 조치 필요

###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체육선수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대처방안 마련, 등급분류의 ‘등급’이라는 단어에 대한 대안 모색 필요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 및 수당 등 처우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인력이 부족한바, 가맹단체의 인력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비장애인 실업팀에 비해 장애인 실업팀 수가 현저히 부족한바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은퇴선수 지원 사업 추진 시 기초 현황 등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필요

### 【태권도진흥재단】

-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에 비해 태권도원의 운영실적이 저조한바, 태권도원만의 차별화된 전략마련 등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태권도진흥재단의 사무소가 2013년 무주로 이전한 후 직원들의 퇴사가 증가한바 직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퇴사를 막을 방안 강구 필요
- 태권도원 홈페이지 운영에 일부 오류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필요
- 태권도원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매몰되지 않고 성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 공정하게 심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 필요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제주도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에 6번째로 높은 도박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지역센터 설치 검토 필요
-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관광공사】

-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며, 방한 중국 관광객이

전체 외래객의 48%로 중국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바, 외래관광객 시장 다변화 대책 필요

- 공사에서 실시하는 팸투어 관련, 상품화 및 기사화 실적 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밀라노엑스포 업무 이관 관련,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업무 이관 이후 급작스러운 예산 증액과 감독변경 사유 확인 필요
- 문화창조벤처단지와 K-Style Hub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증액 배경,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적정 여부 확인 필요
- 전체 통역안내사 2만 7,400여명 중 아랍어 통역안내사는 2명에 불과한데,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 확대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관광경찰 업무 중 무자격 가이드 단속 등 일부는 관광산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외래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조정 필요
- K-Style Hub 공간 활용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후 추가로 한국창조산업연구소에 연구용역 발주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일본은 비자 발급조건 완화, 한국형 면세점 유치 등 공격적인 관광정책으로 관광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반해, 한국은 관광수지 적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경주지역 관광산업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 관광청 등과 협의를 통해 경주지역 외래관광객 유치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밀라노엑스포 소관부처 변경 및 한국관 감독 변경 이유, 업무이관 이전 업체변경 관련 법률자문 의뢰 실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및 제주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 소재 여행업체 대상 컨설팅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공사 운영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 필요

- K-Style Hub 사업 추진 중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사업 추가한 배경 및 관련 예산 증액 하루 만에 승인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사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계획 변경의 부적절성 지적
- 밀라노엑스포 업무 이관 전, 하청업체 변경 가능 여부 법률자문 의뢰 사유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에도 불구하고 감독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관광산업은 메르스, 사드배치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광자원 수도권 집중 및 콘텐츠 부족,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 만큼, 일관되고 장기적인 관광정책 수립, 관광콘텐츠 다양화, 외국인 친화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 등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한 공사 견해 표명 필요
- 지역 축제 대부분 소액으로 진행되는 주민 화합형 축제인바, 정부차원에서 경제 활성화형 축제 지원 및 육성 필요
- 공사 추천 숙박업소, 해수욕장 등 브랜드 선정 관련 평가과정 및 운영 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추천사업 자제 및 일관된 선정기준 수립 필요
- K-Style Hub 개관일정 지연 및 조성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의견표명 필요
- 바이두 한국지도 서비스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만큼 ‘동해’ 표기 공식 요청 필요
- 앵커호텔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관광공사와 제주 ICC의 협약 관련 불공정계약 재조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취하 등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구글 한국지도 반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국민정서 고려 후 신중히 결정 필요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외국

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역사 시험 확대, 추가교육 실시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사 면세사업 운영 당시 과도한 할인 혜택 제공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부감사 및 윤리교육 필요
- 인천공항면세점 기준환율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결정에 따른 관련자 내부징계 등 후속조치 필요
- 창조관광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업 지원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 상당수가 실패하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2013년 도입 후 1년 만에 폐지되었는데, 국내 여행산업 및 내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재추진 검토 필요
- 밀라노엑스포 업무 이관 전 하도급업체 변경 법률자문 시 전시영상 분야만 의뢰한 사유 및 예산증액 배경에 대한 공사 의견 표명 필요
- 그간 한류관광 콘텐츠는 대중문화 인기에 의존하였는데, 지속적인 한류관광을 위해 K-Pop, K-Drama를 넘어 전통문화, 한식 등으로 콘텐츠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K-Style Hub 사업계획 변경 관련 청와대 교문수석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감사 이후 K-Style Hub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별도 보고 필요
- 올림픽을 활용한 한·중·일 관광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수행 필요, 올림픽 개최지역 중심 관광로드 구축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및 지속적인 마케팅 수행 위한 통합 브랜드 구축 필요
- 호텔업 등급심사 암행평가 시 숙박, 룸서비스 등 관련 경비의 피평가자 부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정 및 피평가자 대상 교육 등 대책 마련 필요
- 호텔등급 표지 부착 비율이 8.6%에 불과하며, 평가결과 허위 또는 미부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관광특구 내 한식메뉴판 오역 등 영터리 외국어 표기문제 개선 필요
- 잦은 조직개편으로 일관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해외지사 주재원의 근무 관리 규정이 허술한 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자체수입 비율 저하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국 저가 방한상품으로 인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원하는 저가 방한상품 현황 파악 및 개선책 마련 필요
- 2015년 신입사원 채용 관련 감사원 지적 관련 적절한 내부조치 필요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의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피해사례가 증가 추세인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수도권 및 부산 등 특정지역에 MICE 행사 개최가 편중되고 있는데, MICE 산업 균등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 공사가 만든 관광브랜드(Imagine Your Kore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브랜드(Creative Korea)가 론칭되자마자 국가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브랜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남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공사 역할 강화 필요
- 정부 관광정책이 홍보·마케팅 중심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확대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의 철저한 관리 필요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저조로 고용 분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GKL의 순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세계 카지노 업계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필요

- 공기업인 GKL이 VIP 고객 대상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고, 카지노 관광객 모집행위가 불법인 중국에서 현장 에이전시를 통해 편법으로 VIP 고객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조치 필요
- GKL 사회공헌재단 전체 예산에서 사회공헌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3. 문화재청 소관

#### 가. 문화재청

- 문화유산 모바일 앱은 젊은 감각과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작하고, 앱 개발 시 기획단계부터 활용성·중복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중도가자 훼손과 관련한 감사를 내부인사 위주로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 유사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 보완 필요
-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 훼손 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복원용 실측도 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장인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할 필요
- 문화재청의 내부청렴도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이므로 실효성 있는 부패 방지제도와 보다 높은 제재조치 마련 필요
- 세종시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전국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문화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20명(1.2%)에 불과한바, 일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는 경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문화재 관리 인력과 예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죽방 등 선조들이 다양하게 사용해왔던 해양문화와 관련한 지혜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 필요
-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 전통무용분야 3개 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인정 조사 관련 민원이 많으므로, 인정 반대 측의 주장을 다시 듣고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 할 것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하여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무형문화재의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 도모 필요
-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전수교육관 건립이후에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
- 전수교육관 시설에서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단일 종목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다는 다수 종목이 입주하는 종합전수교육관 우선 지원 필요
- 군부대 내 문화재 관리담당자(민사작전담당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 육의전박물관 등 발굴 후 이전보존 조치 된 유적의 관리 및 관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보존 조치 목적을 훼손한 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도 적석층에 대한 현상변경 전에 문화재청에서 부분완료 승인을 한 이유와 강원도에서 섬을 팔 때 파헤쳐진 문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레고랜드 출토문화재에 대한 종합보존대책 마련 필요
-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신청이 없어도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예정부지에서 조사된 지식묘의 새로운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중도에 대해 문화재청의 직권조사 계획 수립 필요
- 중도 레고랜드 유적의 현장보존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유적 이전 보존 필요

- 인골이나 미라 관련 유품은 문화재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인 인류문화사를 탐구하는데 미라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 마련과 입법적인 노력 추진 필요
- 2012년~2016년 기간 중 발굴조사기관 미수금은 66억 6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와 같이 과도한 미수금의 발생은 부실 발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굴조사기관이 그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발굴조사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도록 보완 대책 마련 필요
- 폐사지 조사 예산이 연간 2억원에 불과하여 지난 4년간 32개소중 4개소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발굴조사가 가능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필요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심각하므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 그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합의서 마련 필요
- 발굴과정에서 출토하여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인력보강과 관리체계 및 처벌규정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진대비 문화재 대응 매뉴얼 보완 및 상황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경주 지진피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된 지진 대응체계를 갖추고 개선된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정책 추진 필요
- 문화재청의 안전 매뉴얼 검토 결과, 문화재 특성이나 재해 유형에 따른 상황별 대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문화재청의 준폐를 걸고 훈민정음상주본 반환을 위한 노력 필요
-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64%이고 41만 화소수 이하의 방재시스템(CCTV)이 44%이므로 화재보험 가입 노력과 방재시스템 화소수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CCTV 수리기간이 평균 약 5~7일 소요되는데, 20일 이상 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투입을 통한 신속한 개선 필요
-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등 문화재 532건에 설치된 CCTV(3,549개)중 45%가 저화소(41만)이고 국보·보물의 경우에도 저화소 비율이 43%로 야간 식별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개선 필요
- CCTV에 범인이 포착되더라도 30일 이후에 도난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므로, 문화재 도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개인, 사립학교 및 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진 등 재난재해 방지 대책 필요
-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대상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전기설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중 소방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문화재 감정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 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과 감정관실 확대 설치 필요
- 문화재 도난방지, 화재 대응 등에 IOT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비치된 소화기(분말, 청정) 전수조사 필요
-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한 박물관 건립이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으므로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고, 건립비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 필요

- 남한산성 아래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통과 되므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 바람에 고속도로 건설 관련 계획 제출
-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세계유산센터 관리인력 21명이 충원되지 않고,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인력 충원계획 보고
-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의 인력이 적으므로 더 많은 인력 증원 필요
-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기존의 현판을 떼어낸 후 前 대통령 친필 현판으로 교체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문화재 주변 공사와 관련한 진동으로 문화재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진동 허용기준을 문화재 관련 법령에 마련 필요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검토 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및 허가율이 떨어지므로 서면검토를 지양하고 현지조사 강화 필요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영월 등을 연계한 관동팔경 거점 유적과 강원도의 자연유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탐방루트 등) 과 지원 지원 필요
-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신라왕경 복원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된 추진 필요
-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담 실시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정치적 행정이므로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 필요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수위조절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면서 사업기간도 짧고 효과적이므로 울산시와 함께 검토 필요
-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대책 마련 필요
- 국정감사 후 상임위 차원에서 반구대암각화 관련 전문가, 울산시장, 문화재청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 개최 필요
- 국외문화재가 환수된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여 85%가 수장고에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대학박물관의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홍천 물걸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선(보물 제542호)의 하대석 한쪽 부분이 2003년 발견되어 춘천박물관에서 보관중이며 나머지 하대석은 외부에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훈민정음해례본 간송본의 앞 두장은 오류가 많으므로 국보지정을 해제 하거나 오류 부분 재복원 필요
- 정밀실측이 완료되지 않은 석조문화재 및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첨성대 하단 관상용 잔디가 첨성대 훼손을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첨성대 외에도 석조문화재 주변 잔디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삼척 홍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의 문화재적 지정가치 검토 필요
- 대구 경상감영의 역사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적 지정 필요
-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조선왕조실록 진본 전시 필요
-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E, F 등급은 보수를 완료하고 D등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K-wood 인증을 획득한 목재 사용 필요
-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접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 확보 필요
- 송례문 단청 소재 개발과정에 단청장인 및 기술자 등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청 소재 개발 이후 송례문 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일정·목표 등) 마련 필요
- 문화재수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 필요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민간 문화재 수리 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드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문화재수리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수행 및 자문위원회 운영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문적인 문화재행정 차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추진 필요
-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고 월성발굴조사의 중장기계획 제출 및 보고
- 신라왕경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자 및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참여자 선정에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과 사전검증 강화 필요
-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 필요
- 경주 월성 마스터플랜 수립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발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필요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신라왕경 지구에 대한 발굴 등 개발사업이 유네스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책임 있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지역문화재 발전 및 활용도 제고와 지역문화의 국민 향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필요
- 경복궁 주·야간 CCTV 화질이 41만화소이어서 200만화소의 CCTV와 선명도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높은 화소의 CCTV로 교체 필요
- 현재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창덕궁 빈청의 복원에 고증이 없다고 하

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므로 복원 필요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종묘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뚜렷한 기준 마련 필요
- 조선왕릉 내 다목적 산불방제 차량이 소방 활동 보다는 경내 경상관리와 출장업무로 인한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4대궁에서 개관일에 농약을 살포해 관람객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대궁을 포함하여 문화재 전반에 걸쳐 농약 살포 현황을 조사하고 휴무일에만 안전관리를 준수해 농약을 살포하도록 조치 필요
- 문화재청은 화성 태안 3지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건설교통부 등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와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 보고 필요
- 국외 독립운동유적지가 905개 있는 바, 국가보훈처 소관이라고 배제하지 말고 국외 독립운동유적지가 문화재보호법상의 국외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 필요
- 명성왕후를 시해한 일본검(히젠도)이 일본 쿠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회수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문정왕후어보가 3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지지부진 하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중요민속문화재 174곳 중 10%가 빈집으로 있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서 문화재 등록 추진 필요
- 「한글 1.0패키지」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사유와 향후 계획 제출
- 소실·훼손의 우려가 큰 우리의 근대 문학 서적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등록 필요
-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도 등록문화재 개념 범주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예비문화재 제도’ 검토 필요

-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한 조유진이 정부 대표도 아닌데, 정부 대표로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제출
-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사실을 적시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노력 필요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으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른 국내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나.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대학원의 교수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문화재청은 대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학원 전임교원 확대방안 노력 필요

### 【국립문화재연구소】

- 증도가자 훼손과 관련하여 유물 조사·분석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
-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보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경주 지진피해 조사 시 첨성대에 직접 사다리를 걸치고 조사한 것은 부적절 하므로 현장조사 실시방법 개선 필요
- 최근 취약한 안전방재 연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문화재안전성 평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 【국립고궁박물관】

- 89%이상의 조선왕실 유물이 한번도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장고 개방 확대 및 홈페이지 활용 등 방안 마련 필요
- 왕실유물 특성상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들다 보니 다른 유물 복원작업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립무형유산원】

- 전승공예품의 해외 문화원 대여 후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노력 필요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대구·세종에는 실적이 없으므로 지방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재단】

-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한국의집 취선관 내 페랑디 - 미르 요리학교 운영 관련)은 한국문화재단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전무하고, 설립 및 운영취지의 진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 재검토를 통한 취소 필요
- 2017년 미디어파사드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약정서를 통한 협약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통한 사업 수행자 선정 필요
- 2017년 미디어파사드 사업의 예술감독 위촉은 비경쟁 방식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개선 필요
-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및 식음료·공연 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재단법인 미르와의 업무협약 관련 자료제출 거부 행위와 허위 답변 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 등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 필요

### 【국외소재문화재단】

- 2017년도 국외소재문화재단 예산안(37억) 중 환수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환수예산 증액 필요
- 국외소재문화재단 설립이후 4년 동안 환수실적이 6건 8점으로 저조하므로 국외재단 임무 중 환수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수대상 문화재 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적으로 환수 추진 필요
- 원활한 환수 작업을 위해 국외 문화재 보존·복원 및 홍보 사업 적극 활용 필요

###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1. 교육부 소관

##### 가. 교육부 및 소속기관

###### <일반 사항>

- 교육부 소속의 여러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할 것
- 역사교과서 광고 등에 있어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방송국과 협찬고지 방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과 협찬방식이나 수의계약으로 콘텐츠를 입맛에 맞게 제작하고 송출만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는 형태를 광고를 집행한 것은 탈법적 행위이므로, 본 사안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부패 혹은 성 관련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국립대 전보조치를 금지할 것
-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를 해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정책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고,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 재정투자 확대 방안, 교육격차해소법을 통한 기회균등 방안, 보편성 확보 방안, 초·중·고·대학교에서 창의적 인재를 교육시키는 방안, 평생교육 대폭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교육부에서 주최한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와 방과후학교 박람회의 세부 행사인 한국교육개발원 부스에서 기념품으로 배부한 지구본에 일본해가 표기되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할 것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동해 표기 문제 등에 있어서 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할 것
- 일본 역사교과서에 한일 위안부 합의문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시국선언 및 시위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퇴직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다시 협의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인사교류 형식으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는 추가로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하는데 파견기간이 너무 짧으니 개선할 것
- 교육 자치를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을 보내는 것과 대학교에 사무국장을 보내는 것의 중지를 검토할 것
- 시·도교육청 퇴직자들의 시·도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학교법인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을 검토할 것
- 시도지사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와 같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포함하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것
-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편향된 교육을 수수방관하고 직접 자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
- 창업교육 활성화 관련
  -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 진로전담교사 등에게 창업 관련 연수 및 정보제공을 통해 취업 뿐 아니라 창업 진로 상담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
- 창업전공, 또는 현장경험을 보유한 교육자가 적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포함한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교재를 제공할 것
- 창업과 창업교육에 대한 정보 습득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마련할 것
- 사회적으로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생생한 체험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생 창업교육(컨설팅, 연수, 네트워킹 등)을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 등 창업 문화를 조성할 것
-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는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차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교육이 실제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의 실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
-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관계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할 것
-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창업교육에 대한 표준적 정의와 단계별 내용,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창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차원의 인성교육진흥기관 설립 추진을 검토할 것
- 도교에 있는 제2동경한국학교 신설이 어려워져 현지 교민들의 불만이 많으므로 제2별관 신설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
- 동경한국학교의 경우, 3년의 임기로 파견되는 교장과 이사회 등과의 마찰로 인해 구두 혹은 서면민원이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지 한국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할 부분에 대해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선임 과정에서 업무능력이나 행정능력의 부족과 관련하여,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므로 업무능력과 자질이 적정하지 않은 이기동 원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불구하고 최근 신규 교수 5명을 임용하였는데 교육부 허가 없이 뽑은 것에 대하여 문제여부를 확인할 것
- 고전번역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인원 및 번역작업수행 예산이 부족하여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의 번역작업 완료 예상기간이 30~40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난해 DDoS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교육부의 해당사안 신고 및 유출여부 확인이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교육부장관은 연수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KERIS에서 원격교육연수원을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미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재, 인가취소 등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평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평가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한 원격연수원에 대해서 인가취소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허술한 원격연수를 대폭 줄이고 집합연수를 확대해 원격연수와 일정비율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학교별 자율연수를 활성화하고 거점학교에 인근 학교 교사들이 모여 교과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 교육부 지침(1인당 연수비 25만원)만큼은 단위학교에서 연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원감축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감축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한국교육원장 선발에서 민간 공모는 8건에 불과했고, 교육공무원이 독식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원의 감사 결과 각종 징계사유가 나오는 등 근무기강이 해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재 한국교육원의 경우 교육부 자체 감사는 매년 4~5곳에 불과하고, 원장 임기가 3년임을 고려해 볼 때 임기 중 단 한번의 교육부 자체 감사도 받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물 법정 의무구매 비율 미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기준 이행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학교 특정일의 피크전력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개선, 기본요금 인하 등을 포함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변경된 학교 전기요금의 할인 제도가 초중등학교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전력사용량을 분석하여 할인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
- 학교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도요금이 지자체별로 격차가 크고 일선 학교 요금이 공업용·상업용 등 다른 요금에 비해 비싸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아 및 특수교육 관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현황과 장애학생 지원 역할 충실도(행정업무 지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는 지적 등)에 대해 점검하고 보고할 것

- 부족한 특수교사의 증원을 위해 특수교사의 수급은 일반교사 수급 정책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 관리를 해야 하므로, 특수교사 정원 및 교원 수급 관리, 배치 기준 등 대안 마련할 것
-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사업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장애학생 인권, 장애인 직업교육, 평생교육 사업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원장을 개방형직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조 인력이 전국에 8000명 정도 있는데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직업의 명칭이나 근무조건·여건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것
- 공진초 이적지 주변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수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하므로, 미설치 지역에 우선하여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진초 이적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당국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노력을 강화할 것
- 특수교육대상자 건강검진 및 증진의 조기 개입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의 정신사회적 건강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 통합교육 연수 시 장애학생 옹호, 장애학생을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 운영, 상호 관계형성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고, 교사 1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통합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실행 지침을 마련하며, 비장애학생과 그 학부모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학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할 것
- 교육청별 장애영아 특수교육 지원대상의 선정 배치관련 지침, 업무현황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 시정조치 할 것
- 과밀학급 문제, 특수교사 정원 확대, 기간제 교사 비율,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부족, 일반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도장애학생 교육권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할 것

- 유아특수교육과의 교원임용률 평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 임용된 자도 교원 임용률에 포함하여 산정할 것
-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6년 공립유치원 담임수당이 11만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인상하지 않은 상황으로(11만원 유지) 공·사립 유치원에 공평한 기준을 적용할 것
-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규제제도 범위에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운영상 현실을 반영하여 완충적 제도운영과, 교육 등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
- 교육부가 어린이통학차량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
- 영유아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는 편법 영어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장애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누리과정 관련
  -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패널티와 보상을 확실히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
  - 경기, 강원, 전북도 충분히 이월액과 불용액을 조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 시도교육청의 추경에서 누리과정 미편성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금액을 삭감한다던데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피해를 생각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증가하는 지방교육채의 문제와 지방교육채 부담의 시도교육청 전가 문제를 개선할 것

## <초·중등교육 관련>

### ○ 사교육 관련

- 교육부 담당자가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의 보고서를 정책 자료로 활용할 것
- 사교육 관련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측면이 일부 존재하므로, 사교육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통계를 생산할 것
- 평균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수준, 지역 간 사교육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할 것

- 영재학교입학자의 출신지역·출신학교 쏠림현상이 있고, 영재교육대상자가 지나치게 수학·과학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체육을 포함한 능력·잠재력 중심의 영재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학생의 학습 속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학교교육에서 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이 없다면 대책을 마련할 것
-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예산 확충,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경제·사회적 취약계층과 기초학력 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과도한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별로 수학여행비 격차가 커지게 되면 학생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교육활동” 차원에서 수학여행의 패러다임이 소규모 테마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테마형 수학여행 콘텐츠를 갖춘 지역으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할 것

-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최근 운영비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바 교육부 차원에서 녹색어머니회 운영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영업시설 통계에 따르면 최근 각종 신변종업소 등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바 불법적인 신변종업소의 영업 단속을 위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거리 측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령이 없어 문제이므로 정화구역 분쟁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할 것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결석 학생 가정 방문 시 방문 거부 가정에 대해서도 점점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교재·온라인 교육을 개발·보급할 것
- 초등학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초등학교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초등학교 단위에서의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니 종합대책 마련할 것
- 초등학생의 음주 및 흡연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을 교사, 학부모, 법조인, 경찰 등 동등한 비율로 구성해 객관성을 높일 것
-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은 시·도교육청에서 피해자 심의는 시·도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재심 기능을 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강화하도록 할 것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공식 통계자료를 함께 공개할 것
- 전국의 성폭력 신고접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충분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등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

- 학교전담경찰관이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치할 것
-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많고, 여경 비율이 32%에 불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찰청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반학생보다 높은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저가 낙찰로 인한 질 저하 문제, 강사료 감소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할 것
- 초등돌봄교실 관련
  - 초등돌봄교실 정책이 예산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어 전담사의 여건 하락 및 돌봄교실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에 따른 예산확보 및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여부를 기준으로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존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및 근무시간 확대를 검토할 것
  - 돌봄전담인력에 대한 탈법적인 근로계약, 무료노동, 행정업무 필요시간의 근무시간 인정문제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부는 돌봄교실 위탁운영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어 위탁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위탁운영 문제점을 점검·분석하고 충남교육청사례와 같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 돌봄전담사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중요한 전문 인력인데 시도



마다 제각각인 채우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돌봄전담인력의 채우기준을 상향평준화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 관련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심리 상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초등학생 피해응답률 감소율이 중등학생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는 97명만 배치되어 있으므로, 초등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할 것
- 교육부 ‘15년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산정식’을 보면 당초 초·중·고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5개 학교당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개선할 것

○ 자유학기제에 대한 토론회 결과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들의 배경 등에 따라 실제 운영이 천차만별이고 연속성 문제 등 여러 개선 과제가 있으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것

○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실시로 인하여 가격 인하 효과는 있지만 업체 간 담합, 입찰방해 행위, 학생 참여율 저조, 낙찰업체 수익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할 것

○ 교복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교복에 대한 학생 건강권 문제 고려할 것

○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용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내실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현행 교육비 지원내용에 교복비 지원을 추가할 것

○ 수능시험에서 제2외국어에 아랍어와 베트남어의 지원자가 많은데, 이는 난이도 차이에 의해 점수를 쉽게 획득할 있기 때문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능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측정을 표방해 왔으나 문제풀이 기술에 매몰되어 창의력 및 사고력을 갖춘 학생 선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능시험 자체의 개편을 검토할 것
-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놓여온,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사회적 배려대상자
-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 학생부종합전형의 안착을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
  -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교의 역량을 집중해서 비정상적으로 명문대 합격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과정에서 학교 간 교내동아리 차이, 특목고·자사고 유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작용을 점검하여 능력·노력 외의 요소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소논문-보고서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할 것
  - 적정한 교내대회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의 교내대회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DB를 갖추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생부 작성용 교내대회 남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별, 교사별 학생부 기재수준 차이를 해소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서울-지방, 자사고·외고-일반고 간 기회의 차이가 큰데 서울 강남의 학교가 아닌 지방의 학교들도 동아리 활동실적이나 교내 대회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입시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부 기재에 관한 제도개선이나 나이스 시스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교 현장에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교내 경진대회, 경시대회 등의 학교별 편차문제와 성적이나 경진대회 결과 조작가능성 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관리 투명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학생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학교 현장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자기소개서 불법 대필이 성행하고 있으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할 것
- 대입에서 자기소개서 표절의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니 표절학생 평가방식을 대학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입시컨설팅업체가 1년 사이 300%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 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입시컨설팅업체에 대한 단속시점을 조정하여 보고하고, 제반대책을 마련할 것
- 자사고가 학생부 전형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학원가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사고 진학을 위한 고액 컨설팅 및 면접과외가 기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부모대상 여론조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데 해당 전형을 줄인다거나 개편방안을 찾아야 할 것

○ NEIS의 복구시스템의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할 것

- NEIS는 해킹, 사이버 테러에 취약하며 입력자가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바로잡기가 어려운데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1,493억원이 투입된 NEIS 시스템의 학부모서비스 제공에 있어, 학부모 신청 후 담임교사 승인까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방학기간 중 교사의 NEIS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하여 학부모들의 시스템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찜통교실 해소 등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현실을 살펴볼 것
- 부총리는 탈의실 법적근거 마련 및 실내 탈의실 확충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할 것
-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과 같이 사립 중·고등학교 교내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역사 국정교과서 관련
  -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를 통해 역사교과서 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잉여 예산이 있기 때문이므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를 비롯한 전체 실국 기본경비 15%를 절감할 것
  - 웹전시 계약업체는 올해 3월 만들어지고 6월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아 9월에 5천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함. 업체의 홈페이지가 부실한데 해당업체의 11월 웹전시 사업 수행 적격여부를 재검토할 것
  - 이번 교과서가 이념 편향성을 탈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과서 개발, 보급, 교육 등 시간이 부족하므로 미리미리 대비하고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철저히 할 것
  -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 1월말 경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 후 교사들에게 보급한다면 새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준비하기에 촉박하므로, 역사 교사들에게 사전에 별도 연수나 교수·학습 자료 등을 지원할 것

-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현행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한 교사,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적 검증을 위해 제작·배포를 1년 후로 연기 시행할 것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있는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수립했다는 교과과정의 기술방향과 헌법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을 개선할 것
-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는 것부터가 왜곡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는 우려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국정교과서를 폐지 또는 수정할 것
- 역사교과서가 국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국정교과서를 무력화하고 다른 내용의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도교육청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사용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정교과서 집필 방향을 보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균형 있는 서술’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산업화를 더 부각시키거나 독재정권의 과오를 축소하지 않도록 할 것
- 고등학교 한국사 개정 시안을 보면 4·19 혁명 등 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역할 토론에서 토론 참가자로 시위 진압 경찰과 시위 관여한 부모를 포함시키고 있어 시위에 대한 평가토론으로 본질이 왜곡될 수 있으니 개선할 것
- 외부에서도 친일 미화를 위해 독립운동사를 축소한다든지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역사 교과서를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를 1년 동안이나 잘못 올려놓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실무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

- 백제는 근초고왕때 산둥반도, 요서 지역, 중국 강남을 지배하였고 그 이후 일본 땅을 점령한 해양대제국으로, 국정화 편찬 집필 시 백제사에 대해 제대로 서술할 것
- 최종결재본이 완성되고 나서 시각장애인용 점역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점역 작업이 약 7일 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제대로 된 시각장애인용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역사 국정교과서 외 교과서 관련

- 2015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서 작성한 초등학교 1·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보면 어려운 수준의 문장이나 전문용어 외래어 등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수학익힘책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개선할 것
-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까지 6일 만에 점역을 끝내야하는데 부실점역으로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 중학교 교과서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관련 가격조정명령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서 검정 심사 수수료가 약 2천2백만원으로 과도하므로 인하를 검토할 것
- 교과서 검정 시 민원처리비 등의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할 것
- 교과서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교과서 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검정심사 수수료에 대한 국고를 지원할 것
-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해 재점검할 것
-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서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를 쓰는 등 잘못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교과서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마지막 확인 감사 때까지 전수조사 후 보고할 것

- 외국인학교는 입학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는데 수능 부정의 경우, 1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것처럼 외국인 입학 부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제한조치를 취할 것
- 2018년 신설되는 ‘과학탐구실험’ 과목 적용을 대비하여 과학실 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 과학실 인프라를 확충할 것
- 교육당국이 민간 기업 제공 클라우드 기반 교육도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발생한 일선학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학생학부모 서비스(SMS통지 기능 포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스쿨넷사업에 대해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사항과 같이 각급 학교 보안설치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행할 것
- SW교육 관련
  - SW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각 교육청별로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 확충예산 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육감과의 의견 조율을 추진할 것
  - 노후 PC, 컴퓨터실, SW교육이 가능한 교사 부족, 지역별 격차 등 SW교육 인프라 문제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사의 SW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담당 교사를 확보할 것
  - 정규과수업과 방과후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연계를 통해 SW교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정규교과 편성이 2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에 맞춰 모든 제반 사항 확충 및 세밀한 지원정책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코딩 관련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무료

웹사이트 소개, 관련 박람회 개최 등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교원, 학교행정가, 과학계, 건축대표, 청년대표, 고등학생 대표 등 다방면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할 것
- 2009년부터 추진된 교과교실제 사업이 당초 목표(90%) 대비 50% 정도에서 정체되고,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감축되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동 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보완할 것
-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통일안보 강연교육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므로, 강의자에 대한 사전 확인 및 강의 내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강연자들의 강의 선정 기준을 수립·관리할 것
-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위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리대로 한글교육을 실시할 것
-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할 것
- 소년체전을 대폭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들의 학업량을 줄이고 예체능 활동을 늘릴 것
- 창의인성·꿈과 끼 교육으로 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예술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자체부담금 모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 이를 개선할 것
- 한글과 더불어 한자 교육이 중요하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한자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통해 사교육 시장의 거품을 최소화하고 영어교과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을 보충할 것
- ‘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남학생의 상대적인 학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것



- 초·중등 BTL 사업이 15~20년정도 남아 있는데, 수익률 변경에 대하여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폐교재산 활용 관련
  - 폐교재산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여주 도자기 체험 등 마을 특성을 살린 체험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현재 미활용 폐교들을 수학여행지 또는 청소년수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기업시설 유치를 촉진할 것
  -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임대 폐교재산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할 것
  - 폐교자산 매각보다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현행 정책을 재검토할 것
  -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국가가 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이 보유중인 전체 폐교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것
  - 교육부는 미활용중인 폐교재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매각 또는 임대 시에도 본래의 목적인 교육·문화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할 것
  - 전북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소규모 통폐합 추진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추진의지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
  - 도심지 사립학교 이전 축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사립학교가 택지개발부지로 신설대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혹은 학교부지확보 관련 개별법령 개정을 통한 부지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총량제는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

## 영할 것

- 학생 수 감소에도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비효율적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행정 수요가 적은 교육지원청은 인접한 교육지원청과 통합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기, 인천 지역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과밀학급이 되고,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기적·장소적 불일치 발생하고 있는데, 통합 지역과 신설 지역에 시간차를 두고 교육청의 재량권을 부여할 것

## ○ 교권 침해 관련

-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공무상 병가·휴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
- 교권 침해 피해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전문상담사가 없거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 엄중한 처벌, 피해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권 침해에 있어서 단순히 전보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 교사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교육현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충원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 ○ 교원 복무 관련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6.9.28.)에 따라 금품수수 관련 비위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대응을 돕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
-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내 교원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학교 측에서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이 드러날 시 해당 관

련자와 학교장을 처벌할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 성 비위만큼은 해임과 파면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
-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교원들의 비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할 것
- 음주운전 징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교원들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방교육, 강령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서벽지 근무 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였는데 보급률이 낮고(25%)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 현재 정년 때까지 한번 받게 되어있는 자격연수를 최소한 교원입직 20년 전후로 한차례 이상 더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전교조 시도지부 사무실과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
- 교부금의 교부기준과 관련하여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가 반영되도록 학생 수 교부 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축소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며, 시도교육청 지출구조를 효율화할 것
-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관련
  - 2008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9%는 지원하지 않았고 지자체별로 광주 17%, 경남 95% 등 차이가 크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지원분을 정산할 것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법률 자문은 결과에 따라 짜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재검토할 것
  -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해

결합 방법을 강구하고, 교육부가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할 것

○ 학생 안전 관련

-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의 지역 간 편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통합 재해복구체계 구축 관련 시·도교육청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국가 차원에서 재원 전액을 확보할 것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금 운영을 사고 후 보상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검토할 것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 협조할 것
- 학교시설(유치원~대학)의 내진보강은 학생 안전문제인 만큼 교육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주 등 9.12 지진피해지역 학교의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진에 대한 대처 방법’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하고, 지진 대비 동영상 매뉴얼 내용을 보완할 것
- 교육청과 협의하여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 학교별, 학교 내 건물별로 내진설계 여부를 상세하게 공개할 것
-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대피소’의 위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할 것
- 현재 재해복구에만 사용했던 재해 특교 예산을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예에 협조할 것
- 학생들이 VR·AR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하고, VR·AR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것

- 전국의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재난 대응에 대해 더 철저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도교 방재를 참조하여 자세히 지진 대처요령을 안내할 것
- 재난 발생 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및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실제 위급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3개년 기본계획부터 재검토할 것
- 작년 전국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율이 38.8%로 낮는데 이에 대한 보완할 것
- 학생이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학교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 지진 등 안전 대비 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
- 교육부에 내진설계와 석면, 학교 우레탄 운동장 문제 등 학교 안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인력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 태풍 “차바”에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의 침수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우레탄이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구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니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구분 요청할 것
- 시·도교육청에서는 운동장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에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로드맵과 친환경 우레탄, 카펫트랙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최근 인조잔디운동장 역시 유해성 기준치 초과 논란으로 교체한 사례를 고려할 때, 유해성 연구를 먼저 시행한 후 우레탄 외 대안

을 검토할 것

- 6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학교운동장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11개 시도교육청은 정기 실태를 조사할 법령이 없으므로, 우레탄 트랙 정기점검을 위하여 법령 제·개정을 촉구할 것
- 우레탄트랙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
- 우레탄을 걷어내지 않고 위에다가 보완을 하는 식 등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기술표준원의 KS기준 충족여부 검증 대상은 시료 공장에서 채취한 우레탄이고 중금속 기준이 초과되어 문제된 것은 시공이 끝난 우레탄이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추가경정예산에 우레탄 예산을 신청한 것은 올해 하반기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것이므로 집행할 것
- 우레탄 교체 사업에 있어서 시급하게 이루어질 것과 내년에 해야 할 것 등을 정리해서 줄 것
- 우레탄 속 유해물질이 2배 초과된 곳도 있고 100배 초과된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용 금지시키지 말고 차별화하여 처리할 것
- 학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 교육부에서 석면을 조속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샌드위치 패널 건물이 약 76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 고정식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21.3%에 불과하니 시설 확충할 것
- 학교 유해물질 실태보고 조사 결과 체육 교구와 학습 교구에서 대량의 납과 프탈레이트가 나왔는데 교육부에서는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할 것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체육 교구는 제외되어있고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기준에 학교운동장, 실내체육관,

급식실, 강당이 제외되어 입법적 미비가 있으니 보완할 것

- 각급 학교의 냉난방기 위생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이를 점검하여 살균소독이나 세균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학교에서는 실외활동 제한 등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청을 통해 점검할 필요

○ 학교 급식 관련

-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에 2015~2016년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현황 분석을 공개한 교육부 담당자를 징계할 것
-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에 있어 향후 재정지원 확대, 적정한 보상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충남교육청의 급식지도비 회수로 영양(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기를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여 해당 결정을 철회하거나 적절한 수당 신설을 검토하는 등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 급식시설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향후 1~2년 내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
- 정부합동 급식실태 점검결과 식재료 공급업체가 유통업체를 설립하여 입찰 담합하고, 대리 납품을 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방지 대책
- 일반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둔갑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학교의 급식 운영실태를 공개해야 할 것
- 학교급식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식중독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시 위생·안전점검 강화 등 대

## 책을 마련할 것

-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급식소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장치 및 안전장치 설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학교급식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의 ‘식재료업체와 학교간 대면접촉 홍보 원칙적 금지’로 발생한 중소기업 홍보영양사 약 천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2016년도 초중고 보건수업 미 실시 학교가 25.7%로 많고 보건 교과서도 없는 학교도 전국에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런 현황을 감안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보건교사 미배치교에서는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학생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보건교사를 확충할 것
-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감염병 관련 교육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 문신시술의 부작용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성 교육’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
- 학생의 도박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박 중독 관련 실태조사 확대 실시 등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
-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과 달리 오히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교 학비지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니 개선할 것
- 교장 공모제 관련
  -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교육부 중앙부처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정치 편향적 활동을 한 교원에 대해서는 공모 자격을 박탈하고 전교조 편중화를 방지하도록 법규를 개선할 것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제2항을 삭제할 것
  - 교장공모제가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장공모제가 시행된



학교, 특히 평교사가 교장으로 근무한 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장공모제를 평가할 방안을 수립하고, 공모 교장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으면 더 확대할 것

○ 한국교원대 교장자격연수 프로그램 관련

- 교장자격연수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에서 통합 운영으로 전환할 것
- 2013년 이후 해외교육 체험연수의 공고기간 적절성, 특정업체 선정 가능성, 현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해외교육 체험연수가 대규모 사업임에도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변화를 검토할 것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담임 교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

○ ‘양성평등목표제’와 같은 교사 성비 불균형 문제를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석교사 관련

- 수석교사가 점차 급감하는 이유로 수석교사만의 우대 혜택보다는 수석교사 임용으로 인해 수석교사의 2분의 1로 줄어든 수업시간을 다른 교사가 대신 떠안아야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교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것
- 수석교사의 정원, 권한, 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원에 대한 행자부와의 적극적 협의를 추진하는 등 수석교사제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 교육현장에서 비교과 중심(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으로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가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교육부와 합의했던 처우개선안(명절휴가비 상향과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을 국립학교에 적용시키고, 노동조합과 국립학교회계직원의 단체협약을 즉시 체결해 국립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국립 전문상담사의 경우 영양사·사서와 동일한 보수표를 적용시킬 것
-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교직원의 40% 가까이 되는데, 현재 관리전담 인력이 부족하므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
-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근로조건 저하 등을 막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별 사업계획 중 고용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교육부에서 사전 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정원의 5% 미만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학교비정규직 14만여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2만 4천명, 17.7%로 5%의 목표 대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①기존 근무자 중 1년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②무기계약 전환업무에 결원발생시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 전국 공통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들은 무기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정 근로시간 확대를 검토할 것
- 교육부는 기간제법에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더라도 모두 무기계약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교육부는 근무시간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기준 변경을 검토할 것

- 학교보안관, 당직전담직원, 배식보조, 방과후학교실무원, 시설관리직, 청소원, 기타, 통학차량보조, 매점관리원,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사감 등의 직종 등 무기계약 제외자 비율이 높은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조치와 고용안정 대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퇴직금(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 정기상여금제도를 신설하는 등 전국평균수준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상향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학교회계직원의 장기근무가산금 1년에 2만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해소되기에 역부족이므로, 1년에 3만원 호봉제 도입을 검토할 것
-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설정을 포함한 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 최소한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으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근속수당 개념을 도입해서 2년 차부터 근속에 따른 임금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2017년 1월부터 발생하는 최저임금 위반대책(현재 기본급 시급 6,366원, 최저임금 2017년 6,470원보다 낮음)과 유급병가, 육아휴직, 방중비근무직종 연차휴가일수 상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액(또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교육부에서 체불임금 내역을 확인하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시간외 수당 불법·부당 사례에 대하여 시정계획과 학교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을 검토할 것

- ① 방학 중 휴업수당 또는 소정의 생활안정 수당 지급 ②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공무원과 차별을 해소한 후 방학기간 중인 1월과 8월 시기에 지급하는 방안 ③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하여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동일액을 지급하는 방안 ④ 월급제에 기반한 연봉계약으로 매월 고정적인 기본급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 등, 방학중비근무자에 대한 방학 중 생활안정대책을 검토할 것
- 지자체 또는 타부처의 대응투자로 인건비 재원이 조성되거나 수익자부담분으로 인건비 재원을 조달하는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검토할 것
-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어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립학교부터 임금을 인건비로 예산편성 하는 등 개선대책을 검토할 것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 시 현원의 60%만 반영하고 단가는 임금 중 일부 누락하고 있으며, 산정액의 70% 반영하는 등 기준재정수요(보통교부금)에 실제 인건비 소요액의 40%정도만 반영하여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인건비 전액을 교부하고, 그럴 수 없다면 관련 지침의 “3. 기타사항”을 전면 폐기 또는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교육부 단체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는데, 학교안전공제회 등 제도개선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해 등 단체보험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
-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치료비 및 휴직으로 인한 임금손해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보조’와 같은 명칭을 빼고 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직종명칭 변경, 호칭을 선생님 등으로 통일하는 학교문화 등,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비정규직이 소외감이나 배제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존

중받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안내하고, 직종명칭을 존중감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부당한 사적업무지시 사례들을 포함하여 사적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안내를 현장학교 보급하고, 사적업무 등 비정상적 업무 관행에 대한 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검토할 것
- 학교회계직, 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아닌 교육공무직으로의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 학교비정규직 규모가 총 40만에 육박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과 학교비정규직의 직제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교육부(국립학교별) 질병휴가(유급) 현황을 분석하고 정규직과의 휴가제도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급식실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휴가, 병가,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상시적 대체인력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 90% 이상의 급식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및 질병위험자에 대한 정밀건강검진 실시를 검토할 것
- 학교급식 종사자 배치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급식실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계획과, 2~3식 학교에 별도 대책을 검토할 것
- 급식실 대청소 및 고공작업(천정과 닥트, 배기장치 등 청소)을 실시하다 추락하여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전문업체 활용에 대한 안전매뉴얼 수립방안을 검토할 것
- 현재의 노동력 중심의 급식소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을 것
- 영양교사와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나 교사대

- 체직중인 전문상담사, 사서 등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을 검토할 것
- 영양사·조리사는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가 심각하게 격화되는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을 실시함에도 교육과 연수 등의 기회보장과 지원이 부족한데,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교육과 연수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과 지원을 검토할 것
  -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조기 출근 및 점심배식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과, 병가나 연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확보와 시간외수당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특수교육보조원은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되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과 별도의 직무수당 지급이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국립학교 특수교육보조원에게 국립학교 회계직원과 동일한 보수표 적용을 검토할 것
  -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에 대한 기존의 업무 외에 통학차량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돌봄교실 지원 등의 업무를 별도의 수당지급도 없이 가용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사서 및 사서교사 인력 배치의 확대와 상시전일제 근무(365일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것
  -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초등스포츠강사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시 11개월이 아닌 12개월 단위를 검토할 것

- 2017년도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을 검토할 것
- 초등스포츠강사의 학교별 선발방식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단위 선발제도 방식을 검토할 것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과 소규모 학교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실용영어 교육강화를 위해 순환 영어회화전문강사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영어회화 전문강사 현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2017년 인건비 예산 확보대책(분담비율 변화 등)과 학교별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 단위 인력선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계약고용은 용역회사와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회사가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는 식인데 급여를 줄이기 위하여 두 계약서의 내용을 다르게 하여 계약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고령의 학교비정규직 야간당직기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
- 야간당직기사의 초장시간 노동문제 개선 대책 및 주1일 유급휴일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지급 등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 노력 촉구 및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공약의 경우 현재 여전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1.8명 모자라고 중학교의 경우 3.6명가량 모자라는 상황이니 개선할 것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공약 관련하여 학교마다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별도로 확보하여 배치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도 단계적 확대 배치를 약속하였지만, 2012년에서 16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교무행정인력이 감소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교원업무경감 관련 직종인 교무·과학·전산·행정직 종사자들이 최근 2

년간 약 3천명이나 감소했음에도 교육부는 총액인건비 공문 시행 시 교무행정보조인력 직종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초등스포츠강사 자격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의 연장과 기존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입직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교 운동부의 코치나 감독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시킬 것
- 보건교사·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성과급 평가에서 불리하게 등급이 산정되는데 비교과교사들은 동일 직군끼리 묶어서 평가하는 방안 고려할 것
- 시도교육청의 수요측정 등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각 지역별로 방치된 학교용지 활용·매각을 교육부가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향후 활용 및 매각계획 등의 조치가 잘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학교신설계획이 탈락하는 것은 자칫 학급당 학생 수 증가로 교육여건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감들과 현실적이면서도 적정한 신설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논의를 할 것
- 학교 신설이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남4중’ 신설을 올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하도록 할 것
- 인천지역 사립학교 이전 관련 비리가 심각한데 그 원인은 학교 기본재산 담보설정 승인권한이 교육청에 있고, 학교부지의 담보제공 차입허가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설비 마련 키를 쥐고 있는 시교육청이 이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므로, 교육청의 사립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고등학교 설립 시기 불투명으로 인한 이주 예정자의 혼란 해소와 서충주신도시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고등학교 조기 설립을 구체화할 것
- 초·중·고 사립학교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행령 근거가 미비하여 비리사학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시행령을 조속히 보완할 것
- 전남교육청 ‘장만채’ 교육감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위를 악용한 영리추구 및 특권 남용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충북교육청 우수남 감사관 임용에 따른 공모 과정 문제점 및 특혜 의혹, 감사 부서의 장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책임지지 않고 유 감사관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것
- 전북교육청의 급식지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중복 관련 감사에서, 한별고의 경우 별도 환수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절차상 문제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교육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 서울시 교육청에서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비서실장의 의원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교육부 감사를 실시할 것
-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들의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한글 소프트웨어를 일괄구매했는데, 두 번의 유찰 이 후 99.9%의 가격으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하여 담합이나 유착의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 시도교육청 평가 시 교육청 평가지표를 양적 평가(취업률, 취업률 향상도)에서 질적 평가(4대보험 가입비율, 유지취업률)로 변경할 것
  - 지방재정운용 성과평가지표 중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은 21점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지표인데, 교육부가 재정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교육청에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 자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평가지표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 인센티브로 교육청을 길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평가지표에 대해 객관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시·도교육청 평가제도의 재원으로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을 쓰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센티브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자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마련해 보고할 것

## <고등교육 관련>

### ○ 대학구조개혁 관련

-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주목적이 부실대학 퇴출이 아닌 정원감축으로 변질되어, 퇴출해야하는 부실대학의 연명책이 되었으며 재정지원 사업 가산점을 통해 우수대학이 오히려 감축되고 있고, 대학의 정원 내 입학정원을 구조개혁을 통해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정원 외 입학정원이 오히려 늘어 결국 실제 감소는 거의 없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입학정원 과잉을 메우려 하는 실정이므로, 대학구조개혁 정책 기조를 변경할 것
-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지방대 평가를 실시하는 등 2주기 평가 시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13년 대비 2023년의 정원 감축 목표로 16만명을 설정한 추산은 미흡하므로 2주기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추산할 것
- 정원 외 입학인원의 규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정원 감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학 퇴출 로드맵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퇴출 대상 대학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영

제 사립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재정사업과의 연계로 우수대학의 정원 감축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대학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퇴출하여, 소모적 경쟁이 아닌 전체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등급별 인원 감축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CK사업의 재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대학 중 9월 5일 구조개혁평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재정지원제한 해제된 대학들 3곳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교육부가 마치 이행점점으로 인한 보상을 주는 듯이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여 과정의 공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대학 구조개혁과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융화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과거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대학들이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 E)에 지정된 것은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등급별 인원 감축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이 설립한 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요건의 제척 기피 규정 등 규정 미비를 개선할 것
-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국·공립대학 간 통합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는데,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한 국공립대학간 통합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 약학대학 관련

- 약대 계약학과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마련할 것

- 제약약사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제약학과 TO를 회수하여 원 취지에 맞는 제약산업, 연구약사를 실질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특성화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공급과잉과 간호사·약사·의사 등의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약대 편입학을 위해 자연대 학과의 학생 이탈 등 문제가 많은데, 학제개편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담징수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환급하도록 할 것
- 국립대학병원들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
-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 및 부채증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경영실적 및 공공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종합 컨설팅을 추진할 것
-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대학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병원에서의 장례물품 폭리, 병원 간 격차, 출산비용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대병원에서의 물품도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14년 해외환자유치사업비 정산내역 중 ‘의료관광코디네이터교육 “에 관한 계약을 전남대병원과 광주의료관광협의회가 맺었는데, 양쪽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약상 법적 문제를 검토할 것
- 서울대병원장-백남기 씨 유족의 만남을 중재할 것
- 병원학교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내실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재정운용 관련
  - 대학법인의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것

- 대학법인의 건강보험 법인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
- 용도가 불분명한 대학의 기타적립금 규모를 제한할 것
- 사립대학 교비회계는 학생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우선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 국내 대학에 사용해야 할 적립금 등 교비를 국외 캠퍼스 설립·운영에 사용할 경우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학들의 ‘자산 빼돌리기’와 비리 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구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음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
- 교육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쌓기 행태를 지양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
- 사립대학의 합리적 교비 지출과 법인의 재정 지원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비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학법인의 독단적인 대학 운영 아래에서는 부정비리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회계 문란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
- 사립대학 소송의 절반 이상이 교직원 및 학생 관련 소송이고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대학들이 무리한 징계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것
- 한국연구재단에서 일부 연구지원사업 연구자 선정 시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개별평가가 아니라 패널 전체 합의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인데 이를 변경하고, 평가위원에서 교육부 및 전문기관

직원은 제외되어야 하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학생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주요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법제화하는 한편, 학교별 대학평의회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비밀 유지 조항은 삭제하도록 지도할 것
- 우수한 두뇌들의 해외 유출의 원인으로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나 연구의 독립성 보장 미비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 연구등록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논문심사 비용의 징수근거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폐지하며, 교비회계 수입 내에서 논문심사를 실시할 것
- 국립대에서 특정 석좌교수를 초빙하여 12년 동안 연구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연봉을 지급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석좌교수 운영현황을 총 점검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산학협력단 인건비, 연구비 부적정 집행에 대하여 적발되더라도 해당 건에서만 배척되는 등, 제재 정도가 약하므로, 대학 당국 특히 총장의 책임, 학교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제 조치를 개선할 것
- 목포대, 인천대 등에서 학생들 계좌에 연구수당 지불 후,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R&D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실태와 처벌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화 교육은 무시되고 변호사시험 대비 중심으로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

## 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할 것

-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 자격자 배출 기능에만 집중하다보니 법학전문박사 진학률이 매우 낮아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축소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형 온라인 대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K-MOOC 강좌별 최종 수강 완료율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생 진로교육도 중요하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교육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잡 미스매칭을 막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둘 것
-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출석과 학점 인정과 관련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창업자들의 사후진행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관리할 것
- 대졸 허위취업자를 적발하고도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라는 이유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7,8월에 공시하지 말고 허위취업 실태조사를 한 후 연말에 공시할 것
-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취업률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대졸 미취업자 List를 활용해 이들에게 243개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졸업유예생의 등록금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학비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기숙사비를 22~30% 인하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숙사비 인상은 161곳, 동결이 52곳, 인하는 10곳에 불과하니 개선할 것
- 대학원생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권센터 설치, 대학 측의 명백한 각 사안별 행동 매뉴얼 제정 및 이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의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부 직속의 대학원생 인권침해

##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

- 대학들이 인건비를 아끼고자 비학생조교를 꿈수로 고용하고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립대를 비롯해 사립대까지 전국 대학의 비학생조교 고용실태를 전수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조교 임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대학원생 조교들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
- 각 국의 고등교육 학위 제도에 관한 투명하고 공인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학위인정 정보센터’ 지정을 추진할 것
-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 중도 포기 유학생 과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며, 대학이 단순히 유학생을 받아 등록금 수익에만 치중하게 둘 것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것
  -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확대한다면서 외국인 학생의 불법체류율 요건을 완화해주고,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지표를 오히려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
- 교육부는 지자체·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처별 실태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협의하여 대학 석면관리 실태를 보고하고, 각 대학별 석면 관리·제거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것
- 전국 국립대 40곳의 총 1,766개동(33.6%)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되고 있어, 교육부는 국립대 석면 교체예산을 대폭 늘릴 것
- 대학교의 우레탄트랙에서도 중금속 검출이 확인된 만큼 예산 확보해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특히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의 적극적인 현장관리 및 실태 점검할 것

- 국립대학 시설비 예산 편성 시 학생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노후건물 개축과 리모델링에 우선 투자할 것
-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 국립대병원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상업시설 유치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를 검토할 것
-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지방국립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부분의 채용설명회가 서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지방대학생들은 취업준비단계부터 차별받고 있는데 지방대생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노력을 할 것
-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 이후에 오히려 지역인재 교수임용 비율이 줄어 들고 있고, 일부 거점 국립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율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대’ 육성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노력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것
- 국립대학교 총장 임명 관련
  - 총장직선제가 실시 될 때 재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나왔고, 직선제를 시행할 당시 대부분 국립대학은 교수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상당수 대학에서 학생이나 지역사회는 선거에서 배제되는 등 교수 중심으로 선거가 이루어졌으며, 미국, 유럽 등의 우수 대학들이 총장직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직선제를 간선제로 유도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

- 경북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했지만 2달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총장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총장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것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개선할 것
- 최근 2년간 총장 공석인 국립대학이 4개교인데 교육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으니 개선할 것

#### ○ 이화여대 관련

- 최순실 씨의 딸 정 모 양의 체육특기자로의 입학과정에서의 입시 비리 의혹과 정 모 양의 재학 중 학칙 개정을 통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
- 이화여대의 학칙개정을 통한 개인에 대한 특혜와 교육부의 이화여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이에 관련성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검토할 것
- 정 모 양의 입학, 학칙 개정, 학교생활, 지도교수 교체,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 의혹들에 대하여 이화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 ○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학에 적기 배정하도록 할 것
- 최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핵심적인 흐름은 산학협력이나 산업연계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학의 특성화사업의 경우도 획일화된 기준으로 ‘대학의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으므로, 보완책을 강구할 것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대학의 경쟁력 강화, 역량 강화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바꿀 것
-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와, 교육부가 예산을 무기로 대학을 줄세우고 사업은 감감이로 진행하는 것, 국회 결과 보고도 없이 교육부 입맛에 맞는 대학에 가점을 주어 선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PRIME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감소인원의 76.7%가 순수학문 분야이고 증가인원의 90.7%가 공학 분야인데 분야별로 증감이 편중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것
  - 사회에서 요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이나 교육부 재정사업에 유리한 학문분야에 치우쳐 대학별로 ‘인문학의 위기’ 등 학문간 조화와 형평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이공계 중심의 구조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과 같이 재정지원사업이 학내 갈등과 분류로 이어지는 사례와 ‘노예가 된 상아탑’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정부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 ACE사업을 확대·개편한다는 내용의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발표 이후 2014년 CK 사업 신설, 2016년 PRIME 사업 신설하였는데, CK 사업 선정 지원 대학이 다시 PRIME 사업 참여하는 등 빈번한 학사구조개편과 대학이 사업실현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초래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할 것
  - SCK 사업에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관계없는 자유학기제 여부로 당락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하고, 평가 시 빈번한 기준 변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정비리 대학들에 대한 유의미한 감점, 예산안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페널티 기준을 조정할 것
  -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대학구성원 간 합의가 있었는지 교육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 2016년 구조개혁 평가 D+등급 대학인 강남대, 고려대(세종)이 신규 선정되었는데, 신규 선정인 올해는 예산이 미지원 되지만, 내년에는 예산지원 가능한 것으로, 2016년 선정시 D, D+ 등급 대학이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학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학

생 수가 적은 이유는 모집학과에 제약이 많고(예체능 관련 학과 부족), 장애인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입학 규정 (발달장애학생의 수학 능력 평가 곤란)때문이므로,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대입전형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장애대학생 지원 관련

- 2014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조사대상 총 368개 대학중 200개교(54.3%)가 개선요망 등급임을 볼 때,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장애대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공립대학교의 장기적,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낮은 대학은 불이익을 주고, 점수가 우수한 대학에는 예산 지원 및 대학평가 시 가산점을 주어 장애학생 지원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
-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학습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한국체대 김성조 총장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한국체대 2010년 레슬링 교수 임용 문제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참여자 명단’ 또는 ‘지도자 명단’을 요청해 김○○ 교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지도자 자격으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김○○ 교수가 위 명단에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규정과 다르게 지도경력을 인정받고 채용된 것이 효력이 있는지 검토 후 당시 임용규정대로 처리할 것
- 부산대학교 효원문화회관 관련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건국대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인 화양동 1-37번지, 4-16번지, 4-17번지 토지 2000㎡를 비롯해, 총 33개 필지(638,943㎡)에 대해 교육용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고, 교

육부의 감사결과가 대학에서 이행되도록 조치할 것

- 강원대의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6억원 외 2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을 지원할 것
- 동국대가 교비로 학교법인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집행한 내역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
- 지난 7월 여수 한영대학에서 학점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감사를 검토할 것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과 관련하여, 조준상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경위 파악 및 실지조사 등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한민족학원의 법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위한 임시이사가 선임되도록 하며,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유명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유병진 현 명지대 총장에 대하여 해임 요구 및 향후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
- 2015년 명지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에서 (주)명지병원장례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인데도 명지병원장례식장의 운영 수익을 취득한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이를 회수하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어떠한 징계나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명지학원의 기본자산 손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명지학원 서용범 부총장의 차명계좌 운용에 대한 민원( '16.6.)에 대하여 교육부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부총장 징계·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
-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활성화와 일방적 폐과철회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에서 농성한 학생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소함. 또한, 총장실에서 농성한 8개 학과 학생대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학의 안정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학생 고소 및 징계에 대한 철회 내지는 완화를 위해 교육부와 대학이 협의할 것

- 2015년 4월 수원여대 이재혁 전 총장의 횡령액 변제를 위해 교내구성원 및 동문회에 모금운동을 한 의혹과 관련된 민원 및 진정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를 검토할 것
- 수원여대 교직원 14명 집단징계해고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 등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이로 인한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낭비(각종 법률 비용 및 대체인력 인건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학교 및 법인 이사진 등에 책임을 묻거나 이를 강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2010년 교육부 민원 실태 조사 관련, 결과 처분 중 이재혁 전 총장의 6개월 무단결근 기간에 부당 지급된 급여 26,133,330원의 회수처분을 이행하도록 할 것
- 부산대병원 감사결과 관련자 징계를 비롯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 경북대병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 <평생 · 직업교육 관련>

- 현재 실시 중인 일학습병행제가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상승한다고 홍보하기보다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취업자의 과반수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학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고 취업 기반이 열악하지만 취업 열의가 있는 학교에 지원할 것
- 직업계고에 대한 진학 및 고졸인력 수급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에서의 고졸 충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이고, 기술직 9급

공무원에 대한 NCS 기반 채용 계획을 세워서 고교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

- NCS 교과 교육과정 전면도입 학년인 2018년에 맞추어 전문교과 표시 과목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 전문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300여개가 넘는 NCS 수행기관에 대하여 정밀하게 검토하고 관련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NCS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 도제식 교육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성과분석 후 연차적으로 추가하고 참여기업 발굴에 도움을 주는 환경 구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직업계고 입학정원 미달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등의 고졸채용 확대정책 및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시행에 대해 검토할 것
-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대학을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교육방송과 방송통신대학교 등 인프라를 평생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
-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관련
  -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제대로 정비해 추진할 것
  -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교수, 학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과 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졸속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정책 추진으로 벌어진 이번 이화여대, 동국대 등 사태에 대해서 정책책임자로서 사과 및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국사편찬위원회】

- 편수실장이 교육부와 편수 관련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의혹이 있으니 방지할 것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회차별 합격률 격차가 크니 격차를 해소할 것

###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지 국립특수교육원이 해당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할 것
- 현재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설계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데 검토할 것
- ‘장애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과 실습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국립특수교육원의 향후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지 협의할 것
- 시각장애인 용 역사교과서가 7일 만에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림과 지도가 있는 제대로 된 교과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9명 중 6명이 교사로 구성되어 자기 식구 봐주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니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

### 【국립국제연구원】



- 국비유학 지원 사업으로 1인당 24억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사업 대상자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것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원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대 출신이 81%, 여성이 2%밖에 되지 않으니 개선할 것

## 나. 시·도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치원 교사의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학교 감사 시정요구 미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청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사학법인(사립학교)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 연수를 강화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
-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를 교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정화구역의 경계 측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교육청이 객관적인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최저 급식 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교복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복주관구매 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에 대한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지원, 교육정보화 컴퓨터

## 지원을 강화할 것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혁신학교의 안착 대책과 과중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교사처우개선 방안,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확실한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교육청 차원에서 체육특기생 및 체육입시생을 대상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도핑교육시스템을 마련할 것
- 사립초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녹색어머니회에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사고와 자기소개서 제출시점을 재협의 하여 입시전형절차를 다시

만드는 방법을 추진할 것

- 자사고의 사회배려자 선발 의무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산광역시교육청】

- 만덕고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교육지구 계획 수립과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부산교육청과 부산시가 연계하여 추진 중인 ‘교육희망만들기 멘토 사업’ 이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는 흡연공간에 대하여 점검할 것
- 학생 탈의실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해줄 것
- 부산시교육청 건물 내에 NIES서버가 위치하고 있는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가남초등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의 운동장 설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시교육청에서 단식 농성 중인 직원의 임금 삭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할 것
-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련 공동 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 발생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도록 할 것
-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최저 급식 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석교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할 것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 할 것

-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복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초등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 선발 및 배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및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사립초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졸 채용 확대 및 고졸 출신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관련 제반 업무와 관련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침 마련 및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시도교육청이 국민제안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보건수업을 강화할 것
-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학교급식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당 수의계약방지,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감액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을 성추행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통학버스에서 원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석교사의 재임용 심사 및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것
-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교실에서 급식하는 것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급식시설의 예산 우선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할 것

-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1,006억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련 공동 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 발생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도록 할 것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최저 급식 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대전광역시교육청】

- 사학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최저 급식 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강화할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및 비정규직 전문상담사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사립초 입학관련 공동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 경감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및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가 높은 경우 외부수업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도록 할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화상상담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별 급식소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급식안전 매뉴얼 제작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수학교 신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울산광역시교육청】

-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1,006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진 발생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내 온수제조기의 경우도 ‘먹는 물 기준’에 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질도록 할 것
-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의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최저 급식 단가 기준 마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구광역시교육청】

- 행복기숙사 부지 확보를 위하여 폐교 학교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운동장의 우레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 지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우레탄 폐기물 처리 방식 및 마사토 이외의 우레탄 대체 물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볼 것
- 생존 수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신설학교 용지부담금 1,006억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사립학교의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형식적·전시성 지진대피훈련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학생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련 공동 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진 발생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국민들이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채택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
- 화상상담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원금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 수도요금 절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보건교육을 강화할 것

### 【경기도교육청】

- 지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장애인 특수학교에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는 지침 제정할 것
- 특수교사 확보 및 특수교사 연수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통합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지침 마련하는 한편 장애 인식개선 방법의 다양화 및 적용 확대할 것
- 교육감 관사 신축 계획을 재검토 할 것
-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교명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학교 속의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일본 원산 수종을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 교장공모제에 대한 오해 해소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 내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과밀학급이 등장하고 있고 교육부의 무리한 학교신설 억제로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우려되는데 그



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 경기도내 부일초, 이호중, 중원중, 한국애니메이션고의 경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저소득층 지원이나 원어민 강사 지원 사업, 학교폭력 대책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보완할 것
- 학교현장에서 폭력, 왕따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인성교육 정책들을 추진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립 초등학교에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 공교육 체계를 다질 것
-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 부담경감과 관련해 8.51점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혁신학교 관련
  - 혁신학교의 수업혁신 성과에 대해 면밀히 진단해 보고, 전체적인 수업방식에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올해 기준 현재 경기도 내 415개교의 혁신학교에 약 118억원의 예산을 일반학교 보다 더 투입하고 있는데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할 것
  - 혁신학교 지정 및 관리 부실의 원인, 혁신학교에 대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불만과 전교조 등 정치성향 교사들의 활동부대라는 등의 비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자율 학습
  -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상대평가 방식의 대학입시라는 현실에서 대

안도 없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비교육적 행위이자 전시행정성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 마련할 것
- 교육감의 독단에 의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철회되고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할 것
- 일방적으로 경기도 모든 학교에서 야자를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며 관리형 독서실, 사교육비 등 걱정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재검토 할 것

- 위생문제 뿐만 아니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급식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검토하고 학교급식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부정급식 관련자는 시장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 검토하고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불시 위생안전점검 강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 등 향후계획을 마련할 것
- 전국 학교들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많은데 그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많으니 조속히 예산확보 할 것
-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석면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학교석면제거 계획과 예산수립 대책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공개 조항이 없고 유해성 조사도 임의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 조례 개정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
- 우레탄 트랙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성분검사가 끝난 탄성매트 또는 카펫트랙을 설치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는데 교육감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실시 학교수를 파악하고 학교 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예방조치를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지만 최근 5년간 보건교사 배치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 지역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취약하니 대책 마련할 것
- 교사 성비불균형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할 것
-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자가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할 것
- 성희롱, 성매매 교원에 대한 경징계 일변도의 징계처분 문제 및 성비위 교원에 대한 배제 징계 중심의 징계 강화할 것
-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해서 경기도청과 협의 하고 미전입액 감소 계획을 마련할 것
- 기초학력보장 사업 집행비 대폭 축소에 관해 시정할 것
-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홍보 시 재학생 동원 및 잦은 교사 출장의 문제가 있는데 홍보예산 집행 기준과 학생 취업·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 자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학생 자살에 대한 대책,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 현황, 그 중 2차 조치를 받지 못한 학생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할 것
-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 마련할 것
-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마련 할 것
- 누리과정 관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무상의무교육에 소요되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항목에서 분리해 의무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별도의 항목을 편성하고, 기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역교육현안이나 운영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할 것
-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교육으로 보고 책임감을 느끼고 처리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
- 3년간 감사실적이 없는 자사고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할 것
- 보은인사의 문제점(교육전문직원 선발절차, 해당 장학관의 임용 시 기준, 정차, 검증방식, 보은인사 예방대책)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위장전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후 관리·감독할 것
- 불법 운영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시 등교 시 맞벌이 부부의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 할 것
-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2007년부터 민간투자사업(BTL)로 지어진 학교 관련 시설의 매년 임대료와 이자 및 운영비 등이 사업체에 일정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협약서에는 금리상환 등 외부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협약서 조정 등 학교 BTL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마련할 것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광역학구제(편입학 편의 지원 등)등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프로그램 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입찰제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

하고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 미준수 업체에 대해 제재할 것

- 2014년과 2015년 자율동아리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한 것에 대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부 학원가 학생, 학부모 대상 고액 자율동아리 컨설팅’ 보도가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운영 및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차이가 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교육부에 학생 수를 감안한 배분방식을 강하게 요구할 것
- 경기도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기간제 교원 채용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타 지역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며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초등학교 수영교육 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좀 더 수영교육에 노력할 것
- 학교 밖 돌봄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 29,037명에게 게임중독, 사이버음란물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가 2016.1.4.에 시행된 바 있는데, 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유해차단서비스 비교’의 ‘개선’방안의 관련 업체를 2개로 표기했으나, 확인결과 1개 업체로 드러났음. 기존 1개 업체에 특혜 제공을 숨기기 위해, 2개 업체로 조작하면서 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조치할 것
-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의 사무담당은 전문성이 있는 전산직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업무 조정할 것
-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의 2016년 9월 현재 정보공개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율을 높일 것
- 경기도북부교육청에서는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사업의 미진행 부분에 대한 향후 사업집행계획과 향후 세부추진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지역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
- 2018년 이후 모델학교의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폐교에 대한 해결책과 폐교 임대료 미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 강원진로교육원을 타 기관에 대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열악한 농어촌 교직원 관사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왜곡된 인사는 현장 교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을 초래하므로 교육전문직 선발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명 변경 시 교육기관, 지역주민, 동문, 학생, 교사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수목을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하고 필요하다면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평교사 출신 공모교장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누리과정 예산 관련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법령상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건상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 재검토할 것
  - 매년 500억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는데 이 불용액으로 누리과정 예

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보건교사 부족 관련

-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율 6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에도 많은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니 개선할 것

○ 교권 침해 관련

- 교사들에 대한 학교폭력 등과 같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및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3년간 감사를 1회도 받지 않은 자사고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교육기관의 수도요금 관련하여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비공개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는 등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의 확대배치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전교조의 공유재산 불법점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보고할 것

○ 교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성 비위 교원의 향후 징계를 강화할 것

○ 초등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인력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전환비율이 낮는데 이에 대한 개선계획

을 마련할 것

- 방과후교실 행정사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방과후 행정사의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있다면 근무시간을 최소한 주 20시간으로 변경할 계획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
-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
-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국내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건물의 내진보강 계획과 학교석면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계획을 마련할 것
-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 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고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 수영교육에 신경쓸 것

### **【충청북도교육청】**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재검토 및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학교 속의 일제강점기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심었던 ‘일본 향나무(가이즈타 향나무)’의 교목 지정을 해제하고 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정한 학교는 우리 나무로 교체하고 필요하면 관리 지원 조례 개정할 것



- 교명 변경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동문, 지역 주민, 인근 학교장, 기관·단체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것
- 교장공모제 운영과 관련하여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현장에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할 것
- 추경예산 편성 때 통합관사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웠으니 조속히 통합관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 기구인 지방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에 과도하게 ‘학부모 직업, 영어유치원 경력’ 등을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할 것
-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진로교육과 고교 직업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평생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증가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좀 더 내실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마련할 것
- 초등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전문상담을 해줄 전문상담 교사 현황 파악하고 증원대책 마련할 것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에 대한 재심청구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니 자치위원회 구성, 전문성 담보 문제, 형식적 교육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성 비위 교원의 경징계 비중이 높는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성 비위 교원이 다시는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점검할 것
- 지난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교사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및 법률적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할 것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시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한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하여 제출할 것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할 것
- 충북 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투자현황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와 대책을 마련할 것
-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충북교육청의 경우 청렴도 및 향상도 부분에서 1.00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들은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
-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당직기사 근로여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당직 용역비에서 직접인건비 비중이 80%이상 되도록 권고하였는데 당직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할 것
- 전문상담사의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경주 지진을 교훈삼아 교육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선진국 수준의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실제적인 재난을 가정한 철저한 훈련 등을 실시할 것
- 충북도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을 포함한 재난 대응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니 향후 대책 마련할 것
- 학교시설 내진현황 분석 결과에 따른 내진성능 보완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석면제거 계획 수립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편성을 고민할 것
- 우레탄 트랙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필요 있고 흡운동장 이외 탄성매트나 카펫트랙 등 대안 마련할 것
- 친환경운동장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있으나 조사결과 공개 및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조례 개정 추진 검토할 것

- 안전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도록 관심을 가질 것
- 충북교육청의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 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최근 4년 전국 초중고 식중독 발생인원이 11,000여명으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 신속히 완료할 것
- 생존수영 수업시수가 10시간인데 내년에는 20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 【전라북도교육청】

- 지역의 특수성,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든다는 명분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의 심화,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 재검토할 것
-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으며 대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나 자격 검증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지역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
- 최근 10년 간 교명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잦은 교명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속의 일제 잔재인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의 교목 교체계획과 우리나라 고유 수종교체에 필요한 관리 기준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공모형 교장 중 평교사 출신이 저조하므로 그 대책을 마련할 것
- 혁신학교의 학생 만족도가 일반학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차등지원은 교육기회의 균등성을 침해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 사이에서는 성과가 있는 교육 메커니즘으로 생각되는 측면이 있겠으나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불만과 전교조 등 정치성향 교사들의 활동무대 등의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게임과학교에 대한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변화에 걸 맞는 쇄신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 대책 마련할 것
- 누리과정 예산 관련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법령상 교육청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재정 여건상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기관 중 교육청이 많음.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 정책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특수교육의 확충과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제고에 대한 공약사항대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의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 확대 및 충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라서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이 12조원이 넘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

익를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청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지자체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입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전입금이 들어오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 비율을 낮출 것
- 지역별 수도요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임.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해보고 지자체와의 협력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과 관련하여 불법단체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 조치를 마련할 것
- 교사 교권 침해 사례 증가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과 피해교사에 대한 내실 있는 치유지원 대책마련 할 것
- 성 비위 교사의 성희롱, 강제추행, 성매매에 대해서도 배제징계 등 중징계 처벌을 원칙으로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할 것
- 성 비위 문제교원들이 교단에 다시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 내진성능 확보한 학교건물 비율이 낮은 상황인데 학교건물 내진보강과 학교석면제거 계획수립과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내진 성능 확보 계획과 지반구조 및 위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악하고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관련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레탄 운동장 유해성을 조사,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여부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교육청의 경우 유해성 조사를 하고 공개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들 건강을 고려한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각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 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그 수업이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할 것
- 201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조성에서 14.50점으로 전국 최저치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어가는 만큼 초등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전문상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현황을 파악하여 증원대책 마련할 것
- 방과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재재할 것
- 돌봄교실 관련
  - 돌봄교실의 본래 목적대로 초등아동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하여 돌봄전담 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선 대책과 계획 마련 할 것
  - 고용마저 불안한 초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들이 학교회계직원 이 받는 각종 수당지급에서도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전체 돌봄교실의 50% 정도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승계나 처우조건에 관한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간급의 저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교가 해당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고용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라남도교육청】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할 것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열악한 농어촌 벽지학교 및 도서지역 교직원 관사 여건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학교명칭 변경이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일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와 관공서에 일본산 나무들이 조경수로 심겨져 있어 우리 나무로 교체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평교사 출신 교장이 학교 현장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는 무엇인지 홍보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 지침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의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청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볼 때 골프장 신설은 신중히 고려해 볼 것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알릴 것
-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 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할 것
- 교원 중 음주운전 신분 은폐자에 대해 빠른 징계를 할 것
- 성 비위 교원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날로 심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과 피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제도적 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학교의 식재료 구매 시 특정규격 모델로 제한하여 특정업체 상품만 구매하는 형태로 급식비리가 밝혀진 상황에서 급식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 내진성능 확보 학교건물 낮은 비율과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3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할 것
- 납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비용의 조속히 집행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검토할 것
-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교사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차 진입곤란 학교 현황 파악하고 확인감사 전까지 개선하여 결과 보고할 것
-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마련할 것
- 중앙정부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 건의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이 65.1%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경상북도교육청】

-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직원 관사 거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
- 최근 10년간 교명변경을 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교명변경에 있어서 여러 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학교현장 속 일제 잔재가 심각한데,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할 것
- 폐교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임시활용 또는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폐교와 국유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처분하여 국가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장공모제에서 교장자격증미소지 교사의 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방식 등 입학관련 업무에 대해 지침 마련할 것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포항제철고, 김천고등학교에 대해 3년간 감사를 1회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검토할 것
-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청의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기초학력보장 집행비가 크게 축소된 사유를 분석하고 그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예산은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기초학력미달비율을 낮추기 위한 예산 증액 검토할 것
- 초·중·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금리가 내린 만큼 수익률을 조정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큰데 협약서 등의 제약으로 재구조화 힘든 상황으로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12조원이 넘어 교육재정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할 것

- 2015~2016년에 본청 경상경비는 증가하고 교육지원청 경상경비는 감소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각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율이 높는데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미전입비율을 낮출 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 수도요금은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입찰시 강사들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떼어가는 문제가 지적되어 인건비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
- 날로 심해지는 교권침해에 대하여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비위 징계 강화할 것
-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장학사의 교장 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중징계가 필요
- 성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성관련 호기심이 뼈똥어져 표현되므로 성교육 내실화 할 것
- 자살시도 학생 및 전문기관 미연계 관심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경북도내 감염병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감염병 관련 대책 수립할 것
- 경주지진 당시 학교 현장에서 재난 대피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안전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지진 대비 안전매뉴얼을 보다 세밀화 하여 일선 학교에 보내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요 대피처로 활용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별도의 운영방안이 없어 학생 및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바 재해 발생 시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학교현장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의 재난관리능력, 안전 관리능력이 중요해졌다고 판단되는데 도교육청의 자연재난 시스템 구축할 것
- 경북 지역은 내진비율(18%)이 타 시·도 와 비교해 많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학교시설 내진 적용 확대 방안 마련할 것
- 지진피해 학교 138개 학교 중 복구가 완료된 학교는 1개 학교에 불과한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편성하여 대응하는 등 조속한 복구일정 마련할 것
- 학교석면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가 절반도 넘으므로 학교석면제거 계획수립에 더 적극적인 자세와 예산편성 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중 유해성 검사 및 조사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
-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실시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드 배치가 경북 지역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면담 및 간담회 개최할 것
- 소방차 진입불가 학교 전체 24교 중 경북이 10교로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학교 생활지도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에 대한 계획과 비정규직 전문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 배치 증원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자 재심청구가 증가하고 있음. 예산과 인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

- 1월 서울고법 판결이후 전교조 경북지부에 무려 8회에 걸쳐 사무실 지원중단 통보 및 퇴거 독촉 통보, 사무실 방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퇴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임. 퇴거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신규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13년 대비 2015년까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을 대폭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인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청이 문제가 많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실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비정규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임에도 2015년 4월 기준 무기계약직의 전환 비율 조사 결과 무기계약 미전환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상남도교육청】

-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열악한 농어촌학교 교직원 관사 여건 개선할 것
- 방치된 폐교자산 정리하여 국정과제에 활용해야할 것
-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및 교사 연수 내실화할 것
- 최근 교육수요 변화 및 특성화 학교·자율학교 지정 등에 따른 교명변경이 빈번한 실정이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학교명칭 변경은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

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학교 속의 일제 잔재 심각한데 일본 향나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관리 지원 조례 제정해야 할 것
- 전입금 편성을 별도의 기구인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해 오던 것을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하였는데 회의 횟수가 1년에 1번에 불과하므로 다양한 재정적,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는 등 다양하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할 것
- 감사원으로부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석교사가 2012년 출범당시보다 2015년 제도 도입 5년 만에 3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였는데 수석교사 제도가 신설당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경남도내 경남미용고와 경남전자고의 경우 운동장이 없는 학교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대책 마련할 것
-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경남교육청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대한 검토와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교육재정 학교살림 축소 현실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고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수도요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 수도요금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방과후학교 최저가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 대책 마련할 것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 각 해당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전입율을 낮출 계획을 마

련할 것

- 2015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2년 2.03%에서 2015년 3.93%로 2배 가까이 늘어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5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향후 계획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각 시도별 지원액 차이가 많아 총액에서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대책 검토할 것
- 계기교육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하고 위반 시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할 것
- 학교 성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것
- 교권침해로 피해 교사에 대한 내실 있는 치유프로그램 및 법률적 조언 시스템 마련할 것
-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할 것
- 내진성능 보강 및 석면제거에 힘쓸 것
- 경주지진 및 태풍 발생과 같은 재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우레탄 트랙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할 필요 있고 흙 운동장 이외 대안 마련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것
-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별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 학교 수와 미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차 진입불가 학교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전문상담교사의 확대배치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가 단 3명으로 배치율이 0.6%로 낮으니 대책 마련할 것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 사무실 퇴거 전무,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 미이행 등 후속조치를 보완할 것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정원확대를 막기 위해 신규채용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4~5개월짜리 기간제 계약만 반복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정할 것
- 학교비정규직 재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중도퇴사자의 자발성 여부를 조사하여 가급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 지난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차 조치를 미 실시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할 것
-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점검기준에 의한 안전 진단을 통해 시설물 전체의 구조안전성을 진단하고 관급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시공여부를 점검하는 등 증축학교에 대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 학교증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
- 석산초 증축은 내진설계가 미진한 기존건물을 수직 증축함으로써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진의 위험이 가중되는 안전문제 등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수학여행 비용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비율을 확대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의 성범죄 및 생활기록부 조작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 발송량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교원의 관리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역의 특수성, 교육기반 등을 고려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 마련할 것
- 지역의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
- 방치된 폐교자산을 정리해 국정과제에 활용할 것
- 학교명칭 변경이 학부모, 재학생, 교직원, 동창회 지역 주민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
- 일제 잔재인 일본산 향나무들이 아직까지 학교에 버젓이 조경수로 심어져 있어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체할 것
-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려는 자율교육을 강화한 9시 등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혁신학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
-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내실 있는 치유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입학원서 기재, 선발 방식 등 입학 관련 업무에 관한 지침 마련할 것
- 사립초등학교 학비가 천만 원을 돌파하였는데 과도한 학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국·공립초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각종 편의 제공하는 등 값비싼 사립초등학교를 찾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체계를 다질 것

- 자율동아리에 대해 일선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은 어떤지 확인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
-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과후학교 최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인건비 지급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은 강력하게 제재할 것
- 작년대비 올해 본청 경상경비가 12.4% 상승했으나 지역교육청은 20% 감소하였으나 충북교육청 경우 올해 본청 경상경비가 9.3% 감소했으나 지역교육청은 12% 증가함. 제주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의 사례를 배워 내년부터 올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분기별 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교육용 수도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해 검토할 것
- 학교 수도요금이 다른 업종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는 문제는 개별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해보고 지자체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수익률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대부분의 교육청에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마련할 것
- 학생자살 건수가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관심군 학생들에게 2차 조치를 하는 교육청에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내진보강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 투입이 미비하고 내진보강 집행실적도 매우 열악하니 향후 대책 마련하고 세부계

획 마련하여 제출할 것

- 학교 내진 성능 확보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지반구조 및 위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열악하고 시급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관련 예산 편성할 것
- 교육청에서 더 이상 부담할 여력이 안 되면 학교 안전을 위한 내진 설계 특별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정부에 요청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보강 및 학교석면제거사업의 예산 편성할 것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내용에 유해성 조사를 한 후 공개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조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할 것
-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레탄 트랙 교체 비용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150억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기후온난화로 인한 잦은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한 예산확보 노력할 것
- 중학생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41%에 달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학교이니 사고 비율을 줄여야할 것
- 정기적인 학교 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서 학교에서의 사고는 최대한 막아야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 수가 부족하니 교육부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인력을 확보할 것
- 보건수업 17차시 미만 수업학교수와 미 실시 학교 수를 파악하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교육청의 경우 1곳의 학교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개선하여 결과 보고할 것
- 중앙정부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적극 건의할 것

-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 급식보조원 관련
  - 경력 인정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교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속한 해결할 것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 급식보조원의 실제 경력을 인정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방학 중 근로계약 기간에서 제외시킨 근로계약을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포함시켜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대체인력비(4만8천원)를 높이거나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대체인력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2015년 교육공무직원 인력 현황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100% 무기계약 전환되도록 할 것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지부에 퇴거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전교조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및 단체교섭 중지에 대해 검토할 것
- 국제학교 NLCS 제주의 현 수용인원의 3배 이상이 한꺼번에 입학하면서 화장실 및 수업공간 부족 등 공간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학생들의 학업환경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생존수영 수업시수를 내년에는 20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확인감사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 경북이 수영교육 1등이며 경기, 제주, 강원이 꼴찌를 하고 있으니 수영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 다.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 【공통사항】

- 지방 거점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록금 50만원, 기숙사비 월 1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고등교육 투자,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육부의 학교별 계약학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부실한 학사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자체 근로장학생 선발과정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시전형 평가내용의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방안을 마련할 것
- 2018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는 만큼 각 국립대학들은 이에 대비하여 교과목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차비 인하, 주차비 수익금의 지역사회 환원 등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 건물의 내진설계가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 하고, 감면액의 30%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도록 되어 있지만 준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학비감면 규정 준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지자체, 환경부,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관리·제거 계획을 마련할 것
-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대학별 재정회계규정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등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경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 내 실험실습실의 안전시설 확충, 공간분리, 안정장구 지급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의 주요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미실시 대학들은 캠퍼스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 대학 내 상업시설의 증가 등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및 연구비 부당 집행, 연구결과 조작 등 불법·부적절 행위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도·감독 대책을 마련할 것
- 논문심사료와 관련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여 연구자들이 합리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시스템 및 사후 벌칙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일반계 합격률 감소현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전형과 관련하여 전형자체가 장애인 학생이 충족하기 어렵거나, 학과가 다양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이 많으므로 입학전형 규정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선발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경북대학교】

-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형강의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의 질 높은 강의를 확대할 것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 【강원대학교】

-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

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대학교】

- 대형 강의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의 질 높은 강의를 확대할 것
- 효원문화회관 BTO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 【전남대학교】

- 창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

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북대학교】

-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충남대학교】

- 창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도급으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시설관리용역 직원의 직접고용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 【충북대학교】

- 산학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교수채용에 노력할 것
-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

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상대학교】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출신 학생들의 특별전형 입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교체에 대한 예산배분계획과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

### 【제주대학교】

- 방호 및 교통관리 업무 용역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해외대학 진학 등으로 우수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없음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현직 교수가 외부 자문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할 것
- 내부 겸직규정을 위반한 교수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징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꾸준한 신진연구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지진공학연구센터와 관련하여 학교차원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지원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외이사제도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연계열과 공대의 합격 포기생이 많은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학교육에 있어 실무형 강의를 많이 도입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계/전기시설 도급계약자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비학생조교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포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을 마련할 것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조치 미흡,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약학대학의 2+4학제로 인하여 자연과학계열 등 기초과학계의 이탈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대학원 진학률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학제 개편안을 검토할 것
- 지역적·사회경제적 교육환경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균형선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기회균형선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하여 학생부조작, 입시부정이 증가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예술대학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가 일부 특정 고등학교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선발제도 등의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인권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서울대의 상징적인 의미와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보호같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 총학생회 자치규약으로 정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창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법인화 이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정부지원 연구비가 많으므로 기부금 확보나 수익사업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

- 시흥캠퍼스 설립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정상적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의컨설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대학 진학 등으로 우수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늘어나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징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하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무시되고 수험준비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본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대학은 교원채용과 입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를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채용 및 입학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남부학술림 무상 수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원만하게 조절되도록 노력할 것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창업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비학생조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라.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 【공통사항】

-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과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을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절한 마진을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병원】

- 토너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 추진을 검토할 것
-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을 것
-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므로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할 것

### 【부산대학교병원】

-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적절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

### 【경북대학교병원】

-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의사의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상대학교병원】

-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대학교병원】

- 지역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므로 재검토할 것
-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중증응급환자 대기시간 및 응급실 과밀화지수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역 내 미세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전남대학교병원】

-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대학교병원】

-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충남대학교병원】

-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금액의 환불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환자중심 행정을 실시할 것
- 적절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충북대학교병원】**

-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강원대학교병원】**

-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방안 및 여성근로자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마.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립대학 교지확보율이 높은데도 매년 교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러한 사립대학에 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용자심사 시에 재정지출의 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것
-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사립대학 재정 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숙사 수용률이 매우 낮는데, 행복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행복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대구시 주요지에 폐교예정이거나 폐교인 학교들이 상당 수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산을 활용하여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우자판 특정금전신탁(CP)의 투자손실은 투자 결정 이전에 자산운용 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후에 외부 회계법인의 문제제기도 무시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낳은 투자손실임. 사학진흥재단 정관 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투자결정 및 관리에 관여한 이들에게 변상책임을 요구할 것
- 대우자판 특정금전신탁(CP)투자과정 및 사후관리에서 드러났듯이, 투자를 전후한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에 있어 전문성 및 투자상품의 다양화 등 안정적 자산운용 방안을 모색할 것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1) 정부의 평생교육 투자가 매우 적고, 2) 지역별 편중이 너무 심하며, 3) 평생교육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

가 있으므로 1) 국가 투자의 획기적 확대, 2) 각 지역대학들의 평생교육센터로의 전환, 3) 교육방송과 방송대학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도 문해교육센터 설치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문해교육센터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회와 논의하여 조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을 제출하고 추후 성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수행중인 'KOCW'사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의 'K-MOOC'사업이 유사하므로 사업 당사자들이 통합과 관련한 협의를 할 것
- 한국형 온라인 대학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K-MOOC의 강좌별 최종 수강완료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법 제27조와 2010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의료과목을 교육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하였는데, 여러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료행위 관련 교육 현황 및 신청현황을 파악할 것
-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 중 하나로 의료행위관련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료법에 적법하게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의료행위 관련 교육 중 의료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과 실내교육과정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적발해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고령인구비율이 높음에도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의 선정에 소외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원장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평생학습도시 및 행복학습센터를 지정하고, 특히 대구 중남구 지역에 평생교육수요가 많으므로 배려할 것

## 【동북아역사재단】

- 15년 12월 18일자 공문으로 요청한 15년도 기 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
- 동북아역사재단은 지정과제를 기초연구 위주로 추진하고, 재단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각 연구과제의 투명성·효율성 및 질 향상을 위해 공모과제의 과제 수·지원액 비율을 높일 것
- 동북공정 관련
  - 동북공정에 대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
  - 발해는 지배층이 고구려인인 엄연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것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화할 것
  - 중국은 동북3성 관련 논문을 200권이 나와 있고, 수천편의 연구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논문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동북3성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전문가들이 많으므로 직접 가서 그 사람들과 발해사에 대해서 교류하고 역사를 확립할 것
- 한일협정 합의문에서 인정하는 한일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일본의 검정교과서에 반영되지 않고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 여성들이 모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이 일본의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IOC 홈페이지에 일본 국적으로 표기된 故손기정 선수와 故남승룡 선수에 대한 기재사항들의 수정·추가를 위한 노력을 시급히 추진할 것
- 역사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한 행사에서 나눠준 지구본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접근할 것
- 일본의 검정교과서에 통일신라와의 관계, 원나라와의 관계, 국호문제, 임진왜란 등의 부분에서 전혀 그동안 개선을 요구한 바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재단 창립취지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

-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서술을 재단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성과가 부족하므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
-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사업 관련
  - 책임자 처벌 자료에 의하면 연구자 16명에 대해 했어야 하는데 8명은 퇴직 처리하여 불문했고, 1명만 중징계, 나머지는 경징계를 했을 뿐이므로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것
  - 동북아역사지도에 지난 5년간 45억원을 쓰고 폐기하기로 하였다가 재간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 활용에 필요한 결과물(지명 정보 D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수를 철저히 할 것
  - 재간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것
  - 지난 8년 동안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어도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8년간의 문제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재추진해야 할 것
- 재단의 연구지원 사업에 선발된 연구지원서 및 보고서에 대하여는 관련 규칙에 따라 ‘영구’ 보존토록 하고 있는데도 연구전담부서에서의 관리가 소홀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동북아역사재단에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이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연구업무 진행 및 성과물 활용, 외부 요청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데 ‘연구성과관리시스템’ 도입 계획을 마련할 것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회관운영에 있어 임대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 증식을 위한 대책과 서울회관 재건축 관련 예산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 사학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충실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므로 외부전문가를 확충할 것
- 세월호 특조위의 대관 취소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민이 공감하는 일에 대하여 공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공단 장기투자계정의 회전율이 단기투자계정보다 높거나 장기계정에서 1년 미만의 주식투자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
- 사학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와 미환수액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기금운용 수익률을 1% 올리면 실제 기금고갈시점을 3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학연금공단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

### 【한국고전번역원】

- 번역사업이 문집과 역사문헌번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 특수고전번역은 전체 실적의 10% 수준이고, 연간 번역량도 전체 151책 중에 14책에 불과하여 여전히 번역사업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전번역교육원 수강생들이 수년에 걸친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해 석사나 박사학위 혹은 자격증을 수여할 것
- 한국고전번역원의 각종 번역사업에 대한 원고료가 터무니없이 낮은 상황이며, 외부 번역인력에 대한 처우가 낮음으로 인해 번역인력 지망생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번역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외부 번역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

- 역사문헌 번역작업은 단순히 한자만 잘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한국 고전번역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번역작업에 참여하는 역사전문가수는 20%에 불과하여, 번역작업에 투입되는 역사전공자수를 늘리거나 기존 인력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 고등학교에서 나이스(NEIS)에 무단 접속하여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사건이 발생.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쉽고 학교 밖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계속되는 대량 정보 유출 사건을 볼 때 개인정보 노출, 해킹 위험, 학생부 정보 조작 등의 문제에 대하여 예방 차원의 보안 관리 대비책을 마련할 것
- 외부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수사의뢰를 한 적이 없음. 동일한 IP로 여러 차례 했다면 사전예방 차원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수행중인 'KOCW'사업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의 'K-MOOC'사업이 유사하므로 사업 당사자들이 통합과 관련한 협의를 할 것
- 전국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서버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음. 재해복구시스템(DR)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할 것
- 재난에 대비하여 대구에 신설될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시스템을 이전해 나이스(NEIS) 백업체제를 구축할 것
- 에듀넷의 기능을 잘 활용해 시도 교육청의 평가 문항 등 교수학습 자료를 전국 모든 교사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기관으로 지



정받는 등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개선할 것

- 원격연수 콘텐츠와 관련하여, 내용 심사 적합성 기준을 영역별로 P\* 2개 이상, 전체 합계 4~5개 이상의 경우로 보다 강화하고, 기술적 기반 심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연수 내용의 정확성이나 윤리적 규범(편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비중을 늘릴 것

### 【한국연구재단】

-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액 기준세계 6위에 해당하는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나 사업화 성공률 등이 저조한 실정임. 우리나라 R&D 정책의 주요 문제점인 1) 미흡한 성과, 2) 잘못된 평가기준, 3) 부처 이기주의를 해결할 방안으로 1)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통합관리, 2)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감사’로 전환 필요, 3) 기초연구에서 중복과제 허용 필요, 4)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과제 확대 및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5)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 사업 지원 시작부터 결과물 제출 마감까지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물의 질적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재단은 앞으로도 학술단체가 연구재단에 학술지를 제공한 취지를 고려하여, 원문공개서비스를 함에 있어 학회와 개인 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
- 한국연구재단이 국민에게 무료공개 서비스를 해야 할 학술논문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논문인데, 이들 논문은 해외 출판사와 독점 계약이 체결된 논문들이기 때문에 논문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구독비를 내

야 함. 이는 심각한 국부 유출이고, 학술주권 문제로 그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재(후보)학술지 평가방법을 살펴보니 70점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주관적 개입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등재(후보)학술지의 평가위원 5명의 평가점수 산출 시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선정평가가 끝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데, 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평가위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동국대총장 논문 표절에 관하여 재단에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대학에서 표절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장(소속기관)이 검증·판단하고 재단에 통보하게 되는데, 총장이 연구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학술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확인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정밀정산 현장 점검률 5%는 과소하므로 확대 실시할 것
- 인문사회분야 중점연구소 선정에 있어 중복·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재단에서는 별도심사를 다시 열게 되었는데, 평가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연구재단은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지역사회 기여 등 공공성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고등교육평가원과 같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대학 평가 전담기관을 만들어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검증을 해나갈 것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정성평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 고등교육 분야 평가자 풀을 만들어서 각 대학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 사업에서 직군별 쿼터를 두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본 바가 있는지 및 매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고 연구재단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이 정부기관 퇴직자들의 노후보험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깰 수가 없고, 올해 상반기 선발인원들을 보면 정부기관 출신 고위직 인사에 심하게 편중된 구조이며, 선정평가에서 장관급 3%, 차관급 2%, 공공기관장급 2% 가산점수를 주는데 상식적 수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개선할 것

###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기숙사 건축 차질 없이 추진할 것
- ICCRS 참여 대상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
- 대전·충청권역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센터 설립할 것
- 국가장학금 홍보 및 대학 현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한 권역별 학자금 지원센터의 추가적 설립할 것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대학원생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것
-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또는 예

상 조달금리와 실제 조달금리의 차이에 따른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

-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 변동금리 상품 대출자에게 고정금리상품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
- 과거 고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의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원액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 작년 말 반값등록금 달성 홍보를 하였는데 대학의 장학금 지원금 중 1.8조원은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전부터 확보된 지원이며, 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정부의 재원이 아니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홍보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것
-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등록금 납부 기한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아 아직 상당 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뒤 국가장학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장학금 1인당 지원액 7분위 평균액(59만원)이 보다 10분위 평균액(92만원) 보다 많거나 지방인재장학금 분위별 지원 총액이 1분위 지원 총액(58억원) 보다 10분위 지원 총액(68억원)이 더 큰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분위별 낮은 분위 학생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성적기준 완화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실질적 대학 등록금을 고려하여 저소득계층 장학금 지급규모의 확대

를 검토할 것

- 이공계열에 편중되지 않고 인문사회 등 다양한 역량의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것
- 국가장학금 2유형은 별도의 지급 기준도 없고, 학생에게 바로 집행되는 등 집행 관리가 부실한데 2유형 수혜자 현황 및 이중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다시 귀국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허점을 악용해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중복지원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정작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되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중복지원 강제 환수 조치 등을 감행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재정적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대학재정지원대학 D·E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
-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에서 수도권에 편중 및 일부 상위권 대학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차세대리더육성 멘토링 사업에서 인재추천제의 채용 특혜 여부를 확인할 것
- 장학재단 이사장의 한민고등학교 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

-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 2014년 말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 한중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였는데, 원직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 낮은 근무평점이 출산휴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별이고 모성보호의 출산정책에 맞지 않으며, 향토문화전자대전 회의록을 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2년전부터 조직적으로 대량해고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감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을 할 것
- 한중연 원장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원장 선임과정이 불투명하고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심의가 이루어지며, 공모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등 문제가 있어 기관장에 대한 인선과정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선정한 한국 근대 여성 63인의 초상 과제에서 친일 문제 부분이 약술되어 있는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친일 문제를 무감각하게 다루는 것은 안이한 태도이므로 향후 연구 과제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교원 정원을 감축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불구하고 최근 신규 교수 5명을 임용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
- 한국학대학원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명예교수만 23명에 이르러 사실상 퇴임 후 모든 교수가 명예교수로 임용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명예교수 임용 후 활동 실적은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드러남. 예산 투입 없이 명예교수

를 연구원에서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광복 70주년> 관련 서적 판매 중단 및 배포 물량을 회수하고 차후 집필진 구성 시 균형 잡힌 역사학자로 구성할 것
- 9억 8천을 들인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사에도 건국이란 용어로 변경되는 등 편향적인 서술이 보이므로 이 사업에 대하여 전면 중단할 것
-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사 위탁 출판사 선정관련 제안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
-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이용률이 높음에도 내용상 오류가 많아 대부분 민원을 통해 수정하고 있는데 오류 없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외국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인 바,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해 힘써주는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조정(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일임)을 통해 예산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역사·영토 및 주권 문제는 국가의 핵심이익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교과서의 동해·독도 표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저조한 상황으로 판단됨. 이를 담당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노력은 미흡하므로, 오류 시정 및 한국 바로 알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백제는 반도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음. 우리 민족의 대단한 해양세력의 권위를 떨친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고 백제사를 제대로 복원하도록 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보, 보물 등이 5년째 훼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등 장서각 본도서 1만2천여개 중 8천여개(63%)가 훼손되어 장서관리가 엉망인데, 2010년 이후 장서각 본도서 점검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자료와 관련하여 오염, 열화, 충해, 충분, 마모, 결손, 구김, 찢김, 기타 사유로 손상된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소장 자료 보존상태 점검을 위한 상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것
- 공감한국학 관련
  -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감한국학’의 편향성이 질타를 받았는데도 2015년에는 겨울방학으로 연수시기를 옮겨 상당부분 동일한 강의를 배치하고 시행하거나 당시 지적을 받았던 편향적인 강의자료집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1년 반이 지나 그대로 쓰는 것은 등은 지나친 불통이며, 국회를 무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를 개선할 것
  - 자료집 내용이 현재 역사교육이 북한의 대남전선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및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군사정변’이라는 말을 쓰는데 현장 교육과 동떨어진 인식을 지닌 분이 강의를 해도 되는지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강의 내용과 강의자에 대하여 보완할 것
  - 지난 1월 실시한 교사 대상 공감한국학 집중 연수에서 이념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교사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강사를 섭외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지진대비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방안을 수립하고, 안전관



리담당직원 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학들과의 협의를 위한 계획도 수립할 것

- 각 대학의 운동부특기자에 대한 성적관리 학칙과 관련하여 학점관련 학칙 개정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 대학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칙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대교협이 역할을 수행할 것
- 최근 3년간 학과 통폐합이 빈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대학은 취업학원이 아니므로 대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할 것
- 대학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재정 집행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 고교대학 연계심화과정(UP) 제도가 있으나 선행학습금지법에 의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제도의 선전·광고 문제를 해결할 것
- 민원의 소지가 있는 대학별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력관리와 철저한 공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수시모집 기간에 대학공동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재발을 방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대입공동원서접수시스템의 전담 기관으로서 공동원서접수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전국적인 혼란 상태를 대비하여 원서접수대행사와 함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비훈련도 시행할 것
- 학교 현장의 취업계 관행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취업 준비중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하며, 대학별로 상이한 취업 학점 인정 여부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학생부종합평가 관련 운영 자기소개서 대필, 대부분의 입학사정관의

80%가 위촉사정관으로 전문성 부족, 교사의 부담 및 컨설팅학원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할 것

- 대학에서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평가기준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대학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에 대한 사후평가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므로, 최초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사항, 즉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입학금 현실화, 졸업유예생 지원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학령인구감소, 대학구조조정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교협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립대 총장 직선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전문대학들의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오류공시, 허위, 과장광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전문대학에는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할 것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학생의 학자금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한국장학재단이 협의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한국교직원공제회】

- 출자회사 The-K제주호텔의 인력 채용 시 비정규직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출자회사 The-K제주호텔의 외부업체 용역계약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기준이 명확치 않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학교장터 시스템 관련
  - 일선학교의 학교장터 이용권장을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공문 시행 및 이용실적을 공개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이용실적이 우수한 기관 대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것
- 공제회가 투자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조건 SOC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발생 문제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공제회지만,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사회공헌 지원에 18억(166회)을 지출하여 이는 SOC사업장 MRG 수익분의 0.3%에 불과한데, 앞으로 사회공헌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
- 2012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제회에서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본회 투자금액 8,552억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분할급여금은 제도시행일 이후에 퇴직한 교직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여된 세제혜택을 더 많은 교직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공제회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이는 회원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가.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사항>

- 문체부 여성 직원도 고위직에 올라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 수습직원에 대한 책임사무관제를 운영하여, 과도한 업무부여를 방지할 것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 요청 시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거부를 명시하는 등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
- 정책연구결과물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운영에서 문체부의 연구결과물 중 미공개 건은 즉시 공개하고, “전체비공개” 선정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것
- 문체부 통계포털 “문화센터” 통계입력을 정확히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김희석 씨와 같이 부정한 돈벌이를 위해 정보력 등이 취약한 지역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대책을 강구할 것
-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행태가 여전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 조정 3개 과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하고 향후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대 자제 및 중복 사업 등에 대해 검토할 것
- 생계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배려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것

-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중요성이 큰데 처우개선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문체부 갈등관리 업무가 상당히 요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정부 출범 시 제시한 국정과제를 완료할 것
- 실질적인 문화재정 2% 달성과 함께 문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문체부 과장급 이상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 연속성 및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고, 단기과제 집중에 따른 비현실적 정책남발 등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를 만들 것
-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달 이상 공석인 고위공무원 직위가 32개나 되며, 한 달 이상 무보직이었던 고위공무원도 6명이나 되는데,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석호 전 사장 관련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문체부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방석호 전 사장 관련 다시 확인된 사실을 재조사 할 것
-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승마특혜 관련 조사에 따른 압력에 못 이겨 끝내 “명예퇴직” 했다고 한 보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것
- 불법도박 수익금의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어 지하경제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인터넷, 모바일 등 불법도박 시장을 찾아내고 감독할 수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 불법도박 시장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신고제 등을 도입해 세수확보 및 단속실효성

##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대응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자금을 수면 위로 드러내 사회적 자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정책관>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불용 잔액을 줄이고, 특정 장르(도서, 영화)의 사용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나눔티켓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눔티켓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융성의 중요한 사업만큼 소속기관 등 자체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방안을 마련할 것
- 우리말의 고품격화 정책을 추진할 것
- 국어전문관을 지정하고 전문용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서 능동적으로 전문용어를 직접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학술용어에 대한 어문규범 특례규정을 「국어기본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어의 다양성 보호를 위해 지역어 보존 및 육성 정책을 추진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행 중인 다언어 입력 플랫폼사업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외국인 한국어 교육 시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교육할 것
- 파견 국가의 비자 문제 등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원 파견 시기를 조정하고 교사 파견을 확대할 것
- 교원자격증 소지자 파견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정확한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원 해외파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

- 추진하고 있는 문화ODA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성, 협력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확산을 검토할 것
- 고용노동부, 통계청과 협의해서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추진계획을 세워 휴가사용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직장인의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국가승인통계를 추진할 것
- 한복 분야 예산이 급증한 바, 다른 전통공예 분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예술정책관>

- 블랙리스트 논란 등 문화예술 지원심의 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기금 수입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아리랑콘텐츠 개발 사업진행방식에 대한 개선 및 목표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 국립오페라단의 예술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공연을 위해 국립오페라합창단 재 창단이 필요한바 검토할 것
- 현재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단원 3명이 국립합창단에 재입단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 국립예술단체장 임명에 대한 검증절차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공연장 관객 관리에 대한 안전 지침과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정기적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문화융성”이 될 수 있도록 문화소의 계층 참여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위탁관리 하고있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의 내년도 예산의 증액배경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
- 미술품 유통을 투명화하여 위작 유통을 방지하고, 미술시장과 작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표준계약서 관련,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절반이 넘는 151건, 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문체부, 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계약서 작성을 장려할 것
- 중단된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공모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

### <문화기반정책관>

- 국립박물관 수장고 상황이 100%가 넘는 곳이 많고, 문화재 관리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체부 산하 박물관 소장품의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도서관 사서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서배치문제 해결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원문화권에 대한 지역 역사 및 문화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
-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미술관의 지역적 편차가 심각한 바, 지역적 편

차를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정에 반영할 것

-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8의 지진 발생 시 국립경주박물관의 피해가 미미한 바, 국립경주박물관의 재난대비방법을 타 시설에 확산하여 재난대비를 철저히 할 것

### <콘텐츠정책관>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이례적인 허가과정, 법인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 허가신청 서류의 허위기재, 회의록 허위작성 등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허가 취소,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고발(전경련),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CGV 좌석별 차등요금제로 편법적인 가격인상에 대해 영화상영관 행정지도를 통해 조치할 것
- 영화관 판매 팝콘 가격이 공정거래 위반이라 판단되므로, 적극적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
- 콘텐츠업계 사드로 인한 업계 피해상황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게임문화진흥계획에 민간기업의 재원(458억원)으로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재검토하고, 게임문화재단 100억원 출연 강요 중단, 관련자 책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영진위 사무국장의 지나친 여비, 근거 없는 통신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 지급 등에 대한 조사하고 징계할 것
- 최근 한국영화 동반성장을 위해 부율이 극장 45%, 배급사 55%로 조정되었는데,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참하고 있는 반면 메가박스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바, 공정협약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
- 원천콘텐츠로서 만화산업의 보호와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초사업인 아카이빙 사업을 강화할 것
- 만화 아카이빙 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만화박물관과 한국

만화도서관을 문체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문화융성 실현과 국산 공연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CT 공연플렉스파크” 조성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의 소비자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 3대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관객들에게 더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문체부, 영진위, 멀티플렉스사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 요소와 실제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검토하고, 기술수요를 예측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모바일 게임 모니터링 부실과 관련해 모니터링 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미성년자들을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 문체부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 게임산업에 대한 중복규제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하고, 섯다운제는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자 환불시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중 하나이나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을 수립할 것

- 현행 과징금 제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징금)에 의한 시행규칙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온라인게임사업자, 모바일게임사업자 등이 빠져있는바 하위규정을 정비할 것
-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게임 개발과정 중 질의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현행 행정·형사적 제제 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별도의 후속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 게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책을 강구할 것
- 게임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 게임산업진흥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게임 과몰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힐링센터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등급분류 수탁기관(G.C.R.B.) 재지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5개월이 경과한바, 사업자 안내나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문제가 있는 제천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
- 영진위의 보조금 관리규정 상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 라는 규정의 삭제를 검토할 것
-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영진위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소관 과의 관리 소홀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영진위의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해결 및 제도 개선, 영진위 조직 정비,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영화진흥

위원회와 영화인 단체들과의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

-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선정의 공정성 문제제기와 관련, 콘텐츠진흥원의 지원과제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할 것
- 완성보증지원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출연금의 46%가 구상권 잔액으로 잡혀 있는데,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진흥원측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아시아문화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특혜 의혹, 전 문체부장관 보좌진의 인사 및 예산 전횡을 행사한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특명감사를 실시할 것
- 통일된 문체부의 R&D 전문기관이 없어 기획,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바, 문화기술과 스포츠기술이 접목 등 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R&D 관리기관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
- R&D 지원 시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최근 5년간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0.9%로 미미한바, 연구 과정에서의 낭비요소 파악 및 기술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검토하고 기술수요 예측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2012~2015년 콘텐츠진흥원의 연구 중단 사례가 19건인데, 중단된 연구과제는 성공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반증이므로 연구과제 수행 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므로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강구할 것
- 문화콘텐츠 유통 불공정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구할 것

## <저작권정책관>

- 캐릭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한 수입경로 차단과 캐릭터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영화 및 방송음악 저작권료 편취 문제를 개선할 것
- 바둑 기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한국기원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
- 문화통상팀의 ‘과’ 승격 및 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해외저작권 보호 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등 저작권보호원과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저작권보호원의 역할을 정립할 것
-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아프리카 TV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할 것
- 한국음반산업협회와의 행정소송과 업무개선 명령 불이행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것

## <미디어정책관>

-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정부부처가 광고를 낼 때는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야 하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7%정도는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광고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확인감사 때까지 개선 대책을 세울 것
- 한국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표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실태파악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대응·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언론재단과 코바코 문제에 대해 기존 청와대 조정안대로 조율해서 최종결과를 보고할 것

## <종무실>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의 정산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체육정책관 · 체육협력관>

-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 및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것
- K스포츠재단의 회의 없는 창립총회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여부를 검토할 것
- 스포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스포츠선수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 ·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레슬링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항공권 독점 구매 등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것
-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종목별 전담팀 구성 및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체육특기자 등 대학스포츠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레저스포츠 안전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구할 것
- 스포츠토도 수탁사업자 선정 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있는 스크린야구장을 체육시설로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지진 대비 등 안전 매뉴얼을 마련할 것
- 국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을 국제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산업·문화·관광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관 직속 하에 올림픽준비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
- IOC홈페이지에 아직도 일본 국적·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회복과 이름 되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실업팀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실속 있는 대회로 치러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
- 평창슬라이딩센터 안전상태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할 것
- 체육시설 합동점검 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 <관광정책관 · 국제관광정책관>

- 문화관광축제 선정 관련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신규축제의 진입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존 업계와의 충돌을 조정하면서 공유민박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20년 단위의 장기플랜 수립 방안을 검토할 것
- 호텔등급 표시 변경과 관련하여 신규 표시제도 공존에 따른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암행평가 비용을 호텔에 부담시키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우수한 숙박시설을 제공할겠다는 ‘굿스테이’의 당초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것
-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원인 파악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안을 검토할 것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실내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캠핑장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국내여행사들이 해외 위험지역에 대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관광특구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구 지정요건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과 관련하여 제도상·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 제도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통역안내사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와 관련 ‘상대적 평가’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시 지역할당제 고려 및 자치단체 추천여행사 우선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과 지방 전담여행사 지정개수를 별도로 지정하되,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 근대화, 산업화 등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축약 형상화할 수 있는 대표 건축물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소통실>

- 정부부처가 언론사 기사를 사실상 돈을 주고 사서 부처에 유리한 보도를 나가게 하는 정책 홍보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국정홍보 사이트인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국정과제가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작성된 문건이므로 확인하여 개선조치할 것
- 문체부장관은 정부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정부 주요업무 발표 시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나. 소속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 내진 보수공사 필요성을 검토 할 것
-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사업 제적생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관리 강화할 것
-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시험 징계자에 대한 관리지침 개선할 것
- 한국예술종합학교 실험실습비 징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각 원별 실기조교 재임용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국립국어원】

- 교과서 등에 쓰이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를 일관성 있게 표기할 수 있는 방안(국어기본법 특례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할 것
- 지역어 보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중앙도서관】

- 소외계층의 책바다 서비스 이용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시행을 검토할 것

###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 2016년도 외부강사 채용 부정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악원의 다른 인력채용 및 위촉 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할 것

###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의 지진으로 인한 위험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국립중앙극장】**

- 국립극장 용역노동자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책과 개선방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은행 보관 작품의 초중고대학 대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유료회원 이탈수 증가에 따른 유료회원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장을 중심으로 독창성과 기획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 재개정을 검토할 것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전남도청의 역사 현장들이 사라져갈 위기에 대처하고, 광주시민 및 5.18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

### **【해외문화홍보원】**

- 재외문화원장 및 재외문화원의 관리·운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순방 문화행사의 준비 과정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외신지원센터는 산케이 신문 외신기자증 발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차후에는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케이스포츠재단 등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감위 전체회의에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도박사이트의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 도박시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행 매출총량 산정 방식은 매출총량 초과 사업자가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 사감위에 실질적인 현장 감시요원 제도 도입 등 사감위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 사감위를 범정부적 단속기구로 격상하기 위한 정부부처 차원의 협의 추진
  - 불법도박을 제대로 감시·단속하기 위해 사감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범죄수익환수 사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사감위 등이 심의 없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
-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도박중독으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는 상담자가 늘어나고 있는바, 지역적인 불균형과 온라인 도박시장의 확산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문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라.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정감사 시 회의록 축소 제출 및 관리 미비에 대해 관리규정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16년 기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수혜 작가의 작품 집 미발간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시중노임 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비율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관련 문화소외계층 의무참여비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고도화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연구, 연수 기능을 재정립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방방곡곡 문화공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양적으로만 팽창해 유희 상태에 놓인 지방 문예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문예회관에서 피아노 구매시 국내 브랜드 구입 유도 또는 선호하는 해외 브랜드라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K-Style Hub 아트마켓관과 관련된 한국관광공사와의 회의자료를 제출할 것
- 문화역서울 284(구서울역사)는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임원급 보직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예술감독에 대한 연봉액,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출할 것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6개 매장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바,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밀라노공예전에서 전통공예의 비중이 급감한 바, 전통공예의 비중을 상향할 것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기관장의 지침에 어긋난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업무집행비 집행지침 보완 및 기 사용 업무추진비의 정리 내역을 보고할 것

### **【국악방송】**

- 내년 7월 대전국악방송 개국을 위한 시설설치 예산만 반영된 채 인력은 엔지니어 1명만 확보되어 정상개국이 우려되므로 실제 필요한 인력 8명 증원 및 예산을 확보할 것



## 【예술의전당】

- 수익사업에 열중하기보다는 공연을 개발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술의전당의 수지차기관 지정에 따라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시상식을 폐지하고 예술대상 예산의 전환사용 계획 등을 수립할 것
- 예술의전당 정관 중 제6조(임원의 임면) 규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보이는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척 사유 및 면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
-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등 전국서예가 자문위원 조직 등을 통해 서예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 예술의전당 현재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손실의 지속적인 발생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외주(용역 및 파견근로자)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세종학당재단】

- 해외 파견교원의 관용여권 발급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
- 2016년 세종학당 운영 시설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학당을 검토한 결과 총 107개소 학당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당 100개소, 시설개선 보류(부적격) 7개소로 확인되었는바, 부적격 7개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정원의 100%를 초과하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 인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콘텐츠진흥원】

- 연세대 김형수교수와 관련하여, R&D 과제성과 미흡 및 관리 부실에 따른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만화/애니메이션 분야 제작지원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편중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벤처단지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콘텐츠 개발 사업화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 모바일게임서비스 약관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이용 관련 표준약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드배치 관련 중국시장 진출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복제 캐릭터 시장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동계 스포츠 공연 연출을 위한 빙상 경기장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빗샘전자 컨소시엄의 공동연구기관인 머큐리소프트는 원장이 대표이사로 몸담았던 회사로 선정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최초 국가 연구과제 제안자(전자부품연구원)의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조사항목이 단편적인바, 계약서 내용, 연습생용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계약기간 내 데뷔여부, 계약을 둘러싼 분쟁 등 조사항목을 대폭 확충할 것
- 중국의 우리 방송포맷 표절과 관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에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R&D 연구과제 수행 시 철저한 기술수요와 시장예측 등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공모사업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공모 선정작 공개로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VR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유통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것
- 학교산협단과 연계되어 있는 와이맵이 벤처단지 입주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닌지 검토할 것
- 해외 게임기업의 먹튀 영업방지를 위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및 게임업체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중국의 K-드라마 콘텐츠 규제 강화에 따른 해외진출 개선방안 및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인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빗마루 이용료 인하를 검토하고 및 가동률 제고 등 빗마루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상영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영화 광고 시간에 들어가는 수익을 관객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영화산업 제작현장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 지원제도 홍보, 문체부와 영진위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소화할 것
-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의무화 및 기술적 플랫폼 구축 방안 제도를 마련할 것
-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제할 것
- 영화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영화 정책연구조사에 소비자 불만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
- SSL9000J 콘솔 장비를 영화제작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존 사무국장에게 지급하지 않던 통신비, 관사비 지급(관련규정 제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기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메가박스로 하여금 부율과 VPF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 **【영상물등급위원회】**

- 일본 감독 작품이 한국 감독 작품으로 둔갑하고, 성인물의 대사가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다소 높음으로 결정되어 등급 심사 판정이 허술한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56%에 달하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큰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최근 등급분류 받은 한국영화 중 청소년관람불가(청불) 영화가 지난해는 52%를 넘는 등 한국영화에서 청불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청불 한국영화 증가 현상에 대해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청불 중심으로 한국영화가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배경과 영화시장의 미래, 영화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것

###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균형 갖춘 규제의 적용”이 필요한 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 불법 뽑기 게임기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등급분류거부게임물의 운영 및 등급분류신청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운영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할 것
-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이는바 예외 사유에 대해 검토할 것
-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진열된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게임물을 철거할 것
-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확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방안을 마련할 것
- 모바일게임 사행성으로부터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시정조치를 어기고도 차단되지 않은 채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업자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선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7.1.1일자로 시행되는 직권재분류 조치 등을 비롯한 각종 강제 권한을 이용한 불법사행성게임의 오픈마켓 모니터링 및 도메인 차단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 인원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선정성 등급 분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할 것
- 사전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것
- 국내소비자 및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주는 먹튀 영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 성인게임장은 극성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은 퇴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불법적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저작권위원회】**

- 중국발 “극한도전” 등 중국의 방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유관기관 간 협조하여 국내 캐릭터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 : Extended Collective License) 도입을 검토할 것

### **【아시아문화원】**

- 옛 전남도청 보존건물 활용방안 재검토하여 5.18정신과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역사공간으로 구현하고, 5.18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활용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것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고 사재기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기관 상업출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수립할 것
-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 **【한국언론진흥재단】**

- 언론진흥기금 고갈 및 코바코 문제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모색할 것
- <뉴스저작권 위탁 신문대상 2016년 지면(PDF) 수집 및 가공사업>의 갑질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국감까지 개선 대책을 보고할 것

### **【국제방송교류재단】**

- 황제출장 사건 처리에 대해 재고소 및 환수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 **【언론중재위원회】**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등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해당보도와 이에 근거한 비난 댓글이 인터넷 상에 그대로 전파, 복제돼 피해 발생하고 있는 바, 인터넷 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신속히 마련할 것

### **【국민체육진흥공단】**

- 경륜·경정 경주권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체력100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인조잔디 및 우레탄 유해성 검사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스포츠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과 홍보 강화방안을 강구

할 것

- 케이토토 비리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에콜리안 골프장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문제를 검토할 것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 【대한체육회】

- IOC홈페이지에 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대표선수 선발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 올림픽 AD카드의 배분 시 비실무자의 숫자를 최소화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
- 체육계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레슬링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항공권 독점 구매 등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행태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시정 조치할 것

###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 및 수당 등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인력이 부족한바, 가맹단체의 인력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 비장애인 실업팀에 비해 장애인 실업팀 수가 현저히 부족한바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태권도진흥재단】

-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에 비해 태권도원의 운영실적이 저조한바, 태권도원만의 차별화된 전략마련 등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태권도진흥재단의 사무소가 2013년 무주로 이전한 후 직원들의 퇴사가 증가한바 직원들의 장기근속방안을 강구할 것
- 태권도원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매몰되지 않고 성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시 공정하게 심사·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가 임대운영 지침 등을 위반하며 공공기관 건물에 선거사무소, 국회의원사무소 임대, 현수막 부착허용, 입찰정보 사전누출정황 등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시에 징계할 것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제주도는 도박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지역센터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국관광공사】

- 외래관광객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에서 실시하는 팸투어 관련, 상품화 및 기사화 실적 관리 등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
- 관광통역안내사의 언어 확대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경주지역 관광산업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 관광청 등과 협의를 통해 경주지역 외래관광객 유치 등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및 제주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 소재 여행업체 대상 컨설팅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 운영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관광산업은 메르스, 사드배치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 축제 대부분은 소액으로 진행되는 주민 화합형 축제인데, 경제 활성화형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사 추천 숙박업소, 해수욕장 등 브랜드 선정 관련 평가과정 및 운영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추천사업 자제 및 일관된 선정기준을 수립할 것
-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왜곡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역사 시험 확대, 추가교육 실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창조관광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사업 지원 범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 상당수가 실패하는 등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지속적인 한류관광을 위해 K-POP, K-Drama를 넘어 전통문화, 한식 등으로 콘텐츠 확대 및 국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호텔업 등급심사 암행평가 시 숙박, 룸서비스 등 관련 경비 피평가자 부담에 따른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 개정 및 피평가자 대상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호텔등급 평가결과 허위 또는 미부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착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관광특구 내 한식메뉴판 오역 등 엉터리 외국어 표기문제를 개선할 것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저조로 고용 분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최근 5년간 GKL의 순익은 감소하고, 비용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세계 카지노 업계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할 것
- 공기업인 GKL이 VIP 고객 대상으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하고, 카지노 관광객 모집행위가 불법인 중국에서 현장 에이전시를 통해 편법으로 VIP 고객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
- GKL 사회공헌재단 전체 예산에서 사회공헌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 문화재청 소관

#### 가. 문화재청

- 문화유산 모바일 앱은 젊은 감각과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제작하고, 앱 개발 시 기획단계부터 활용성·중복성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
- 증도가자 훼손과 관련한 감사를 내부인사 위주로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향후 유사 감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를 개선할 것
-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문화재 훼손 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복원용 실측도 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장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재청의 내부청렴도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이므로 실효성 있는 부패 방지제도와 보다 높은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 세종시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전국 지자체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문화재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20명(1.2%)에 불과한바, 일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맡기는 경우, 각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문화재 관리 인력과 예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죽방 등 선조들이 다양하게 사용해왔던 해양문화와 관련한 지혜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노력과 방안을 강구할 것
- 승무, 살풀이, 태평무 등 전통무용분야 3개 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인정 조사 관련 민원이 많으므로, 전승자·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하여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수교육관 건립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전수교육관 건립이후에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수교육관 시설에서 일반인 대상 사회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단일 종목의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보다는 다수 종목이 입주하는 종합전수교육관 우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군부대 내 문화재 관리담당자(민사작전담당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육의전박물관 등 발굴 후 이전보존 조치 된 유적의 관리 및 관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보존 조치 목적을 훼손한 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방안을 검토할 것
- 중도 적석층에 대한 현상변경 전에 문화재청에서 부분완료 승인을 한 이유와 강원도에서 섬을 팔 때 파헤쳐진 문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레고랜드 출토문화재에 대한 종합보존대책을 마련할 것
-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지자체 신청이 없어도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중도 레고랜드 주차장 예정부지에서 조사된 지식묘의 새로운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중도에 대해 문화재청의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것
- 중도 레고랜드 유적의 현장보존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유적

이전보존 방안을 검토할 것

- 인골이나 미라 관련 유품은 문화재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인 인류문화사를 탐구하는데 미라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 마련과 입법적인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2012년~2016년 기간 중 발굴조사기관 미수금은 66억 6천만원에 달하는데, 이와 같이 과도한 미수금의 발생은 부실 발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굴조사기관이 그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발굴조사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성을 가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의 관리 실태가 심각하므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조사결과 그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합의서 마련을 추진할 것
- 발굴과정에서 출토되어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인력보강과 관리체계 및 처벌규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진대비 문화재 대응 매뉴얼 보완 및 상황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지진대비 문화재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
- 문화재청의 안전 매뉴얼 검토 결과, 문화재 특성이나 재해 유형에 따른 상황별 대안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 문화재청의 존폐를 걸고 훈민정음상주본 반환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중요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64%로 저조하므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할 것
- CCTV 수리기간이 평균 약 5~7일 소요되는데, 20일 이상 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산투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것

-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등 문화재 532건에 설치된 CCTV(3,549개)중 45%가 저화소(41만)이고 국보·보물의 경우에도 저화소 비율이 43%로 야간 식별이 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능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CCTV에 범인이 포착되더라도 30일 이후에 도난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므로, 문화재 도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개인, 사립학교 및 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 국보와 보물에 대한 지진 등 재난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문화재 전기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대상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전기설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중 소방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문화재 감정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 감정위원 증원 및 처우개선과 감정관실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재 도난방지, 화재 대응 등에 IOT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비치된 소화기(분말, 청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남한산성 아래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통과 되므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 바라며 고속도로 건설 관련 계획을 제출할 것
-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세계유산센터 관리인력 21명이 충원되지 않고,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인력 충원계획을 보고할 것
- 현재 문화재 돌봄사업의 인력이 적으므로 더 많은 인력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문화재 복원과정에서 기존의 현판을 떼어낸 후 前 대통령 친필 현판

으로 교체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문화재 주변 공사와 관련한 진동으로 문화재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진동 허용기준을 문화재 관련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검토 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및 허가율이 떨어지므로 서면검토를 지양하고 현지조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인 강릉, 평창, 정선, 영월 등을 연계한 관광동팔경 거점 유적과 강원도의 자연유산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탐방루트 등)과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신라왕경 복원과 같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제대로 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
- 반구대암각화 카이네틱댐 실시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정치적 행정이므로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수위조절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면서 사업기간도 짧고 효과적이므로 울산시와 함께 검토할 것
-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정감사 후 상임위 차원에서 반구대암각화 관련 전문가, 울산시장, 문화재청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
- 국외문화재가 환수된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여 85%가 수장고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대학박물관의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홍천 물걸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선(보물 제542호)의 하대석 한쪽 부분이 2003년 발견되어 춘천박물관에서 보관중이며 나머지 하대석은 외부에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훈민정음해례본 간송본의 앞 두장은 오류가 많으므로 국보지정을 해



제 하거나 오류 부분 재복원 방안을 강구할 것

- 정밀실측이 완료되지 않은 석조문화재 및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 첨성대 하단 관상용 잔디가 첨성대 훼손을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첨성대 외에도 석조문화재 주변 잔디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의 문화재적 지정가치를 검토할 것
- 대구 경상감영의 역사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적 지정을 검토할 것
-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조선왕조실록 진본을 전시할 것
-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E, F 등급은 보수를 완료하고 D등급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목재는 K-wood 인증을 획득한 목재를 사용할 것
-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접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를 확보할 것
- 승례문 단청 소재 개발과정에 단청장인 및 기술자 등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청 소재 개발 이후 승례문 재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일정·목표 등)을 마련할 것
- 문화재수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민간 문화재 수리 업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 문화재수리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서 수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수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노임단가 조사업무를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수행 및 자문위원회 운영은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전문적인 문화재행정 차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
- 신라왕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철저한 고증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고 월성발굴조사의 중장기계획을 보고할 것
- 신라왕경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자 및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참여자 선정에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과 사전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최대한 동원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것
- 경주 월성 마스터플랜 수립시 전문가 및 문화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제대로 된 발굴,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신라왕경 지구에 대한 발굴 등 개발사업이 유네스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책임 있게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지역문화재 발전 및 활용도 제고와 지역문화의 국민 향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을 확대할 것
- 경복궁 주·야간 CCTV 화질이 41만화소이어서 200만화소의 CCTV와 선명도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높은 화소의 CCTV로 교체할 것
- 현재 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창덕궁 빈청의 복원에 고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복원할 것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 종묘 주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것
- 조선왕릉 내 다목적 산불방제 차량이 소방 활동 보다는 경내 경상관

리와 출장업무로 인한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4대궁에서 개관일에 농약을 살포해 관람객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4대궁을 포함하여 문화재 전반에 걸쳐 농약 살포 현황을 조사하고 휴무일에만 안전관리를 준수해 농약을 살포하도록 조치할 것
- 문화재청은 화성 태안 3지구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건설교통부 등과 어떤 협력을 할 것인지와 매장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할 것
- 국외 독립운동유적지가 905개 있는 바, 국가보훈처 소관이라고 배제하지 말고 국외 독립운동유적지가 문화재보호법상의 국외 문화재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것
- 명성왕후를 시해한 일본검(히젠도)이 일본 쿠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문정왕후어보가 3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지지부진 하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요민속문화재 174곳 중 10%가 빈집으로 있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통영 소반장 추용호 공방 강제철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
- 「한글 1.0패키지」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사유와 향후 계획을 제출할 것
- 소설·웹툰의 우려가 큰 우리의 근대 문학 서적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
-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도 등록문화재 개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예비문화재 제도’를 검토할 것
-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강제징용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아직 없으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른 국내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

## 나. 소속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대학원의 교수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문화재청은 대학교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학원 전임교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립문화재연구소】

- 증도가자 훼손과 관련하여 유물 조사·분석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부석사 관세음보살좌상의 보관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주 지진피해 조사 시 첨성대에 직접 사다리를 걸치고 조사한 것은 부적절 하므로 현장조사 실시방법을 개선할 것
- 최근 취약한 안전방재 연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건축문화재안전성 평가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고궁박물관】

- 89%이상의 조선왕실 유물이 한번도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장고 개방 확대 및 홈페이지 활용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왕실유물 특성상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들다 보니 다른 유물 복원작업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립무형유산원】

- 전승공예품의 해외 문화원 대여 후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전·대구·세종에는 실적이 없으므로 지방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 【한국문화재단】

-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한국의집 취선관 내 페랑디 - 미르 요리학교 운영 관련)은 한국문화재단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전무하고, 설립 및 운영취지의 진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미르재단과의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할 것
- 한국의집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 및 식음료·공연 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외소재문화재단】

- 국외소재문화재단 설립이후 4년 동안 환수실적이 6건 8점으로 저조하므로 국외재단 임무 중 환수에 보다 중점을 두고, 환수대상 문화재 목록을 정리하여 계획적으로 환수를 추진할 것
- 원활한 환수 작업을 위해 국외 문화재 보존·복원 및 홍보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

## IV. 국정감사 증인 · 참고인 현황

### 1. 기관 증인

#### 가. 기관증인 총괄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기관증인(명)
1	교육부	이준식	21
2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2
3	국립특수교육원	우이구	1
4	중앙교육연수원	정일용	1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근우	2
6	국립국제교육원	김광호	1
7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이계영	1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성낙인	3
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조동성	2
10	부산대학교	전호환	2
11	경북대학교	손동철(직무대리)	2
12	전남대학교	지병문	2
13	충남대학교	오덕성	2
14	강원대학교	김현영	2
15	충북대학교	윤여표	2
16	전북대학교	이남호	2
17	경상대학교	이상경	2
18	제주대학교	허향진	2
19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6
20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4
21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청연	4
22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	4
23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	4
24	울산광역시교육청	김복만	4
25	대구광역시교육청	우동기	4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기관증인(명)
26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8
27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4
28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	4
29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4
30	전라남도교육청	장만채	4
31	경상북도교육청	이영우	4
32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4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	4
34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이석문	4
35	강원대학교병원	주진형	2
36	경북대학교병원	조병채	2
37	경상대학교병원	신희석	2
38	부산대학교병원	이창훈	2
39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3
40	전남대학교병원	윤택림	2
41	전북대학교병원	강명재	2
42	제주대학교병원	주승재	2
43	충남대학교병원	김봉옥	2
44	충북대학교병원	조명찬	2
45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엄홍식	2
4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김육규	2
4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허성주	2
48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4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3
5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석수	3
51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3
52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3
23	한국고전번역원	이명학	3
54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3
55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3
5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영화	3
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3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기관증인(명)
5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3
59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용린	3
60	한국방송통신대	이동국(직무대리)	2
61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27
6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병진	2
63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2
64	국립중앙박물관	이영훈	2
65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2
66	국립국어원	송철의	2
67	해외문화홍보원	김갑수	1
68	국립국악원	김해숙	2
69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1
7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용직	1
72	국립한글박물관	김철민	1
72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2
73	예술원사무국	전병극	1
74	국립중앙극장	안호상	1
75	한국정책방송원	류현순	1
7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선규(직무대리)	1
7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2
7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2
7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성혜	2
80	한국문학번역원	김성곤	2
81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정철	2
82	아시아문화원	김병석	2
8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형태	2
84	한국문화진흥(주)	김종안	2
8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선영	2
86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상정(직무대리)	2
8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2
88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2

연번	수감기관	기관장	기관증인(명)
89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2
90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2
91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숙	2
92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3
93	국제방송교류재단	문재완	2
94	세종학당재단	송향근	2
95	예술의전당	고학찬	2
96	(재)정동극장	손상원	2
97	(재)국악방송	송혜진	2
9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정만	2
99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3
100	대한체육회	강영중	2
101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2
102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2
103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오치정	2
10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이기우	2
10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2
106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2
10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김혜경	2
108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3
109	문화재청	나선화	7
1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재열	1
111	국립문화재연구소	최맹식	1
112	국립고궁박물관	김성배(직무대리)	1
1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귀영	1
114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1
115	한국문화재단	서도식	2
116	국외소재문화재단	오수동	1
합계			319인

※ 10.4 추가 채택한 기관증인 2인 포함

##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인명	불 출 석 사 유
10.4(화)	대한체육회	강영중 대한체육회 회장	o 공무상 국외출장
10.14(금)	한국고전번역원	이명학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o 병원진료
10.14(금)	한국연구재단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o 미방위 종합감사 참석

## 다. 기관증인 추가 채택 현황

일자	피감기관	증인명	비고
10.11(화)	서울대학교	이윤성 서울대 교수	10.4 위임의결
10.11(화)	서울대학교 병원	백선하 신경외과과장	10.4 위임의결

## 2. 일반 증인 · 참고인

- 없음

## V. 국감결과 특이사항

### 1. 감사원 감사 요구

감사대상 기관	요구관련 국정감사일	감사요구 내용	비 고
① 교육부	10.14	최순실 딸 특혜(부정입학, 학칙개정 등)와 연관된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② 서울대병원	10.11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병원 내부의 광범위한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및 수사·정보기관 등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③ 문체부	9.27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관련 문체부의 불법부당행위,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밀라노엑스포(부처변경, 차은택 감독 선임), 2014년 전국체전 승마장소 변경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④ 문체부 및 산하기관	10. 4	차은택과 연관된 늘품체조 부당지원 및 은폐, 2015년도 승마국가대표 운영관리 부실 및 훈련수당 부당지급, 훈련일지 위조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⑤ 문체부 및 콘텐츠진흥원	10. 4 10.13	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의 부적절한 변경 관련 문체부 및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감사대상 기관	요구관련 국정감사일	감사요구 내용	비 고
⑥ 문체부 및 그랜드코리아 레저 (주)	10. 4 10.13	GKL의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에 최순실의 회사 ‘더블루케이’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 특혜를 준 점(문체부와 GKL 해당) 및 / 콤프 부적정 사용 관행(성매매 의혹 업소 사용 등), CREDIT 제도의 외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지원 관련(GKL)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2. 기관 감사 등 요구

대상 기관	요구관련 국정감사일	감사요구 내용	비 고
① 서울시교육청	10.14	비서실장 비위사건 등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요구	
② 전북교육청	10.14	한별고의 급식지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중복 에 대한 환수조치 미비 등 관련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요구	
③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10.10 10.13	전재수위원 국감발언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 배포 관련 영진위와 영상콘텐츠사업과(문체부)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④ 국민체육진흥 공단	10.13	스포츠토토 민간출연 등 관련 체육공단 해당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대상 기관	요구관련 국정감사일	감사요구 내용	비 고
⑤ 아시아문화원	10.13	아시아문화원 재단설립과정 및 인사특 혜 등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⑥ 국 제 방 송 교 류 재 단	10.10	방석호 전사장의 가족동반 해외출장 건 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⑦ 해외문화홍보원	9.27	케이스포츠재단 및 플레이그라운드 에 특혜 제공 등 매뉴얼없이 주먹구구식으 로 진행되는 대통령 해외 순방 전반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요구	

### 3. 형사고발 요구

대상 기관	요구관련 국정감사일	감사요구 내용	비고
① 문체부	9. 27. 10.13.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관련 답변 에 대한 위증 관련 김종 문화체육관광 부 전 차관에 대한 형사고발 요구	
② 문화예술위원회	10.10	미르모금관련 회의록 제출 시 경총회 장 발언 삭제 등 위증 관련 박명진 문 예위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요구	

#### 4.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대상기관	요구관련 국정감사일	징계요구 내용	비 고
① 문체부	10.10	미르재단 법인설립 안내한 이메일 제출 요구 관련 수신인이 없다는 답변 및 미 르재단설립 허가 관련 청와대 외압과 회 의 사실을 숨긴 위증의혹 관련 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② 문화예술위원회	10.10	회의록 제출 시 미르모금 경총회장 발언, 블랙리스트 등 관련 내용을 삭제, 조작한 뒤 허위로 제출하고 위증한 관련 직원들 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 5. 부대의견

○ 국정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은 의견도 있었음.

①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이 발의되어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대부분  
이므로, 굳이 감사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처분까지 가능한 특검  
에 의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어 불필요하고,

②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논의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국정감사 때 논의되지도 않은 사항까지 포  
함시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는 것은 국회의 감사결과와 동떨어진



것으로 부적절함.



